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탈시설운동 10주년 기념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정책 5년 평가 토론회

2021년 10월 29일(금), 오후 2시

주관 :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동주최 : 사)서울시장래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울시의원 김정태,
서울시의원 권수정

지원 :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권리 선언문

장애인의 시설 거주와 격리 정책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으로 대상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해 왔다. 따라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서울시는 장애인의 시설 거주를 제한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탈시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서울시는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

1.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탈시설 후 시설 밖에서 살아갈 자유와 권리가 있다.
2. 탈시설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수립한다.
3. 서울시는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실천한다.
 - 가. 지속적인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탈시설 전담부서 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 나.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탈시설 정보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탈시설 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 다. 장애인이 탈시설 하여 자기주도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활동지원, 시설 퇴소자 정착금,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신규 설치 및 장애인의 거주시설 신규 입소를 제한한다.
 - 마.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지원, 주거지원 등의 적극적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바.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거주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해당 시설 거주인에게 탈시설 - 자립 생활서비스 등을 포함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 탈시설 계획과 동시에 기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 대한 축소·해체 등 구조의 변환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예산을 지역사회 인프라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아. 장애인, 가족, 시설 관계자 및 서울 시민이 탈시설을 이해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자. 탈시설 정책 마련 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018년 서울특별시

행사 일정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정책 토론회	<인사말> - 문애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이형숙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14:10~14:20		<축사> - 김정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14:20~15:00		<발제1>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정책, 현주소를 묻는다! - 이형숙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발제2>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10년, 우리는 어떤 지원을 해왔고, 해야 하는가? -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15:00~16:00		<토론> - 김진균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 정민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정혜란 (한국장애포럼 활동가) -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장) -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16:00~16:30	정리	<질의 및 종합토론>
16:30~		- 폐회 및 정리

목차

■ 축 사 ■

- 김정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11
-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보건복지위원회)13

■ 발 제 ■ <좌장> 문애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정책, 현주소를 묻는다!**
 - 이형숙(사단법인 서울시장래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15
-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10년, 우리는 어떤 지원을 해왔고, 해야 하는가?**
 - 이규식(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전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33

■ 토 론 ■

- 김진균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47
- 정민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51
- 정혜란 (한국장애포럼 활동가)73
-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장)77
-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보건복지위원회)79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81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지원과82

■ 첨부자료 ■

-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추진계획안85
- 제2차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안.....147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년 장애인 정책 요구안 개요.....197

축 사

김정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축 사

서울시의회도 장애인과 지역사회를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자는 탈시설 운동의 대의를 공유하며, 이를 위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장애와 가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 변방의 끝, ‘시설’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 삶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한 채 평생을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건 그들만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그 시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욕설로, 때로는 폭력으로 자기 인격과 자존감을 부정 당한다면, 그건

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닌 다른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외딴방에 쓸쓸히 남아 홀로 자기 삶의 가치를 묻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데서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바로 거기서 삶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심신이 미약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우리처럼 좋은 일, 궂은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이야기하며 아픔은 덜고 즐거움은 더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라야 그들도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느끼며 삶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누구보다 먼저 탈시설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의 구심체로,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상담 및 각종 정보 제공과 함께 기술 훈련, 주거 지원, 이동 지원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장애인도 사람이고,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며,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유와 평등에 이바지한다는 활동 기조로 탈시설 운동을 이끌어온 이음센터가 영등포에 자리한 것을 우리 지역사회의 큰 자랑이자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믿습니다.



서울시의원 김정태 〓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위원장

그간 서울시는 탈시설 운동 지원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실행하면서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 추진과 타지자체로의 사업 확산으로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 자립생활주택 및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험 운영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장애인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정책도 있고, 탈시설의 목표 개념·방법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토론회가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음센터는 장애인과 장애인,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저 역시 지난 10년 동안 끊어진 곳, 건너야 할 곳에 다리를 놓고,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시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다리, 시의회와 집행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자 노력했고, 오늘 장애인과 지역사회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여러분과 집행부의 탈시설 정책 추진과 확산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김정태

축 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지역에서 장애인의 절실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드는 싸움을 이끌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업하였고, 지역기반의 활동을 통해 영등포구-서울시-지역사회의 장애인을 함께 이음으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간 장애인권익증진에 앞서왔던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기쁜 마음으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정책 5개년 평가 토론회의 개최에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울시의원 권수정 Ⅱ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는 2006년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국가 정책에 앞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며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권리의 이행을 선도하였고, 2015년에는 10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역에 살아가는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랜 시민사회의 요구와 당사자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만들어진 성과입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역을 거점으로 장애인운동을 선도하며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를 확보하는 싸움의 ‘화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자립생활 정책의 그늘에는 제도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이 존재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여전히 그 총량이 늘 부족합니다. 중앙정부에서 24시간 지원을 제공하지 못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도 연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며 장애인이 노령이라는 필연적인 사회적 위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탈시설 장애인도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탈시설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제공과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지원 주택 등의 공급이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탈시설 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존엄한 권리를 침해받을 수 없고, 그것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외침에 힘을 보탭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정책 5년의 평가와 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장애인이 거주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 장애인자립생활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정의당 서울시의원 권수정

[발 제 1]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정책, 현주소를 묻는다!**

이형숙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발 제 1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현 주소를 묻는다!

이형숙 ||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1. 들어가며

1990년대 말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이 태동한 이후, 2002년도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5개소 IL센터에 1,500만원씩 지원함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의 제도화가 촉진되었다. 2009년 장애인거주시설 석암베데스다 요양원에서 8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요구하며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이어나간 결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자립생활가정(현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20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만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릴 시행하였다.

이처럼 서울시는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에 있어서 늘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아왔다. 그만큼 서울시의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은 선도적으로 이행되어 왔으며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모델이 되는 역할을 해왔다.

한편 이러한 서울시의 선도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은 시정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수립되었다기보다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이뤄낸 성과이다.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목소리를 냈던 중증장애인들의 생존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는 그 어떤 전문가도 아닌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서울시는 향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마땅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본 발제에서는 2018년에 수립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과 <제 2차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이 모두 내년도로 종결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5년간 서울시의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를 내릴 예정이다. 또한 이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2018 - 2022) 이행평가

1) 구성 및 총괄평가

제1차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2018 - 2022) (이하 자립생활지원계획)은 5개 핵심과제, 11개 정책과제,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에 해당되는 5개 핵심과제는 ▲일상생활 지원 강화,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경제적 지원 강화, ▲문화·체육·여가생활 지원, ▲자립생활 전달체계 구축·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 대분류를 토대로 구성된 세부사업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와 장애인복지정책과의 장애인 지원정책 집행에 대한 근거가 된다.

2) 분야별 평가

(1) 일상생활 지원 강화 -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2018년 서울시가 발표한 자립생활지원계획에서 제시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계획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명, 백만원)

지원내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대 상 자	120	395	460	525	590
	소요예산	2,014	5,069	5,733	6,399	6,935
시비추가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 추가 지원	대 상 자	-	170	210	250	300
	소요예산	-	1,098	1,356	1,614	1,937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 상 자	100	200	220	240	250
	소요예산	1,937	3,874	4,261	4,649	4,843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 상 자	20	25	30	35	40
	소요예산	77	97	116	136	155

구 분	현 행 (2017년 기준)	개 선
시비추가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 추가 지원	○ 활동지원 급여 중단	○ 월 50시간 시비추가 급여 지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 100명 지원	○ 200명 지원(100명 확대)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퇴소 후 1년 30시간 지원	○ 퇴소 후 2년 30시간 지원 (1년 확대)

①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서울시는 2006년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부터 10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중앙정부에서 실현하지 못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한편, 100명이라는 한정된 인원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조건에 충분히 부합하더라도 한없이 대기상태로 머무는 중증장애인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김선심 씨가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사건을 들 수가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를 200명으로 확대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까지 24시간 지원 대상자를 매년 100명씩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2018.08.07. 비마이너 기사 <40도 폭염에 선풍기 없는 방에 갇힌 사지마비 장애인 “살려주세요”> 참조) 그러나 해당 합의 사항은 자립생활지원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계획안에 따른 대상자 확대 목표치인 2021년 240명까지도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아래 그림 참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X184,120,373) 360,011,161	(X202,682,429) 397,766,028	(X18,562,056) 37,754,867
↳ 국고보조 사업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46,750,503.000원 =
↳ 시비추가사업			(X202,682,429) 346,750,503
· 월350시간(월24시간) 활동보조			= 51,015,525
· 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14,000원*200명*150시간*12개월 = 5,040,000
· 기타 시비추가 활동보조			14,000원*120시간*150명*12개월 = 3,024,000
· 65세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41,936,000.000원 = 41,936,000
			1,015,525.000원 = 1,015,525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가 현재 시비 추가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현재 아래 표와 같다. 2019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서비스 종합조사표가 도입됨에 따라 X1(기능제한)점수를 기준으로 추가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인정점수 기준('19.7월 이전 취득)			X1(기능제한)점수 기준(현재)		
연번	지원분류	월시간	연번	지원분류(특거)	월급여액(시간)
1	(장애 1급)400점 이상인 외상·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350시간	1	360점 이상인 외상·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자치구별 수급자격심의회)	4,907천원 (350시간)
2	(장애 1급)400점 이상인 외상·사지마비 독거가구	200시간	2	360점 이상인 외상·사지마비 독거가구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신규]	2,804천원 (200시간)
3	(장애 1급)380점 이상인 외상·사지마비 독거가구	120시간	3	300점 이상인 외상·사지마비 독거가구	1,682천원 (120시간)
연번	지원분류	월시간	연번	지원분류	월급여액(시간)
1	(장애 1급)380점 이상인 외상·사지마비 비독거 가구	100시간	1	300점 이상인 외상·사지마비 비독거가구	1,402천원 (100시간)
2	시설퇴소자 (퇴소 후 2년간)	50시간	2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퇴소 후 2년간)	1,683천원 (120시간)

‘외상/사지마비, 독거’를 조건으로 두었다. 2021년부터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외상/사지마비 기준을 삭제하였으나, 여전히 독거가구로 제한을 둬으로써 다양한 취약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인, 어린 자녀 등과 함께 거주하여 실질적인 돌봄지원을 받기 어려운 준독거가구의 최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 따라서 위의 기준에는 준독거가구가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기준에서는 더 이상 가족에게 돌봄과 부양의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독거 기준’이 완전히 삭제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②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연속 지원

본 계획이 수립된 2018년 당시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전)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와 양적, 내용적 차원에서의 차등이 심하여 최중증장애인에겐 생존의 위협으로 이어진다.

이에 서울시는 본 계획 수립 당시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을 계획하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이 집행되기까지는 상위법인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약으로 곧장 시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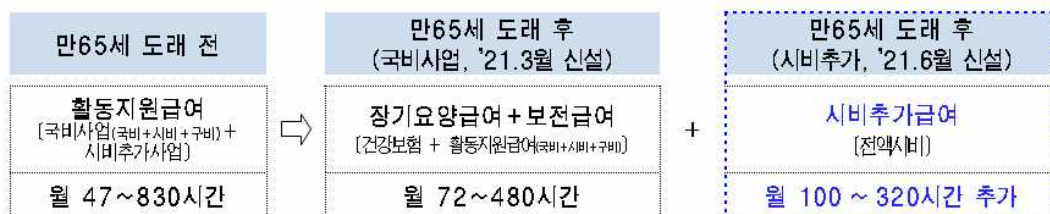
끈질긴 투쟁 끝에 2020년 6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게 시범사업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법을 뛰어넘은 생명권 보장 차원의 정책 실현”이었다. 서울시의 이러한 혁신적 시도는 2020년 12월, 국회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의미있는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2021년 6월, 서울시는 연속 사업으로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붙임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65세 도래 최중증 독거(19명), 만65세 이상 시설퇴소자(14명)
- 지원내용 : 매 월 시비추가급여로 활동지원(신체·가사·사회활동) 서비스 제공
 - 만65세 도래 최중증장애인 독거 : 월 100~200시간
 - 만65세 이상 시설퇴소자 : 월 120~320시간
- 사업예산 : 913백만원(전액시비)
- 연령 전후 비교



위 계획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33명은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2020년 12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서울시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중증장애인 고령인구에 대해 더 많은 양의 서비스 지원을 계획할 필요가 있겠다.

③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확대

시설 거주 장애인이 탈시설-자립 이후 안정적인 일상 구축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이다. 특히 오랜 시간을 시설에서 거주하며 24시간 지원을 받아온 중증장애인에겐 집중적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당시 탈시설 장애인에게 월 50시간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 시설거주 장애인의 80% 이상이 최중증·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월 50시간의 추가 지원으로는 이들의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성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2019년부터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 추가지원 시간을 월 120시간으로 확대하였다.

현재로서는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가는 시점이다. 실제로 2년 전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이어온 장애인 당사자들은 곧 120시간 추가지원이 중단되는 시점을 맞이하였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된 서비스종합조사표는 장애유형별·개인별 특성과 필요도에 따른 지원이 아닌, 여전히도 의료적, 기능적 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신체장애인 중심 지원의 상상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주를 이루는 최근의 탈시설 경향성으로 미루어 보아, 사실상 2년간 120시간 추가지원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수십년의 세월을 시설에서 살아온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충분한 양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지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은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큼 의미 있으나, 여전히 양적 확대는 절실한 상황이다.

(2)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 주거모델 개발 및 주거지원 : 지원주택 운영 확대

2019년 12월 서울시는 언제나와 같이 ‘전국 최초’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을 시작하였다. 장애인들이 자립생활 시 거주시설이 아닌 대안적 주거모델로서 지원주택은 2017년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18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예산 확보에 대한 탄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서울시의 선도적인 시도로서 시행된 지원주택 서비스는 우선 그 시도 자체만으로 유의미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새로운 주거모델의 제시와 마련은 기존 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자립생활 중심의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한편, 발전적인 정책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지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① 충분한 물량 확보의 필요성

장애인 주거지원 서비스는 시설에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자립을 하는데 핵심적인 조건이 된다. 따라서 지원주택 물량의 확보는 곧 탈시설하는 인원수와 연결되기도 한다. 충분한 주택 물량 확보는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서울시

는 자립생활지원계획에서 매년 5호의 지원주택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나, 장애인 대중의 투쟁으로 2020년 계획을 수정하여 2022년까지 매년 70호의 공급형 지원주택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2019년 12월 최초로 지원주택이 설립된 이후 2021년 10월 현재까지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원주택 개소수는 총 124호이다. 800명이라는 탈시설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② 예산 구조의 문제

현재 지원주택은 인건비가 직원별 호봉, 급수에 상관없이 1인당 연봉 45,600,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직원 수는 주택 2호당 1명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운영비 겸 사업비가 주택 1호(커뮤니티센터)당 2,300,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주택 1호에 입주민이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금액이 달라지지 않고 무조건 주택 수로 책정된다는 의미이며, 결국 탈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적 형태의 주거지인 지원주택 또한 거주시설과 같은 구조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게끔 한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직원의 호봉, 급수와 상관없이 직원 수로 연봉이 정해지다 보니 연봉이 높은 직원이 채용될 경우,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슈퍼바이저, 코디네이터를 제외한) 대체인력인 주거코치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 대체인력이나 정규인력 중에 채용을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현재 인지적 장애와 신체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최중증 장애인의 비율이 높다. 그러므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간 시설 생활로 발달단계에서 겪는 보편적인 경험은 적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의료 상시지원이 필요한 경우 간호사 등 다양한 전문영역의 전공자 유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운영비 내 책정된 인건비로 채용을 해야 하는 예산 구조 속에서는 상대적 고비용 인력인 간호사,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전문영역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③ 입주민 개인별지원계획에 대한 예산 책정의 필요성

현재 지원주택 예산 중 운영비는 커뮤니티센터 운영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지출하게 되어있으며,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비 지출은 제한되어 있다. 입주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예산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입주민 지원 시 발생하는 긴급상황(응급상황, 도전적인(어려운)행동 관련)에 대처할 수 있는 비용도 승인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입주민의 개인 상황에 따른 지원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입주민의 낮시간 활동(프로그램)등도 지역의 복지서비스(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탈시설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다. 지역사회 낮활동 서비스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활동서비스, 평생교육기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등으로 확보되었으나, 이 또한 충분한 물량, 충분한 예산확보

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 모든 입주민의 개별 상황에 맞는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다. 결국 지원 주택 내에서 입주민의 경험의 확장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가의 시설중심 정책으로 인해 한평생을 분리되어 살아온 사람들의 개인별지원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기호, 욕구, 꿈 등)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전제가 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험을 위해서는 당연히게도 입주민 경험 확장을 위한 비용이 책정되어야 하고 또한 입주민 1인당 최소 1인 이상의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야 한다.

④ 지원주택 유형에 따른 제언

○ 공급형 지원주택

-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으로 주거공급이 되기 때문에 특정지역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중구, 종로구, 마포구, 강남구 등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어려운 지역) 따라서 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어려운 지역은 별도의 방법(시 매입 주택, 전세주택 등) 도모가 필요하다.
- 최종증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이 전제된 주택이 현저히 부족하다.(입지조건(교통), 주 출입구, 집 출입구, 화장실, 방문 등 설계단계부터 적용된 주택 제공 필요),
- 예산의 유연성 필요. 질병 및 감염, 사건사고, 활동지원서비스 공급의 문제 등으로 주거 코치 등의 임시인력이 긴급히 투입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므로 상황에 맞게 예산을 쓸수 있도록 유연성 필요),
- 입주자의 서비스제공자 선택권 보장, 제공 받는 서비스에 대한 입주자의 평가, 외부의 모니터링 제도 등 지원주택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필요

○ 비공급형 지원주택

- 발달장애인의 시설화를 예방하고,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비공급형 지원주택 방식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나,
- (1) 확대가 매우 더딘 상황, (2) 자가가 주택을 마련함을 전제하고 있는데 서울의 높은 임대료 상황을 고려할 때 별도의 임대료 지원 등이 필요. (현재 서울지역(1급지) 1인가구 주거급여는 31만원임. 서울 외곽의 경우 원룸의 월 임대료는 60만원 수준임) (3) 비공급형의 경우는 지원기관이 공급형에 비해 먼 거리에서 지원하게 되어 비공급형 서비스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 가족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급형 사업자를 자치구에 1개소 이상으로 빠르게 확대하여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의 빠른 확대가 필요하다.

○ 지원주택 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연관 정책의 개선 필요

- 부양의무제도 폐지
 -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고소득 구간 폐지 (*서울지역의 경우 재산소득 9억원이라는 기준은 고소득 구간으로 볼 수 없음)
 -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만 30세 이상부터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것 비현실적. 만 20세로 낮춰야 함

-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 탈시설 및 탈재가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필요
- 탈시설 장애인의 경우는 X1값 기준으로 360점 이상 등 최고 구간만을 200시간 추가지원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지원서비스 구간을 다양화하고, (예를 들어 월 100, 150, 200, 250시간 등) 발달장애인의 경우 탈재가 장애인도 추가지원 필요.

(3) 경제적 지원 강화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2020년 7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시행하였다.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중심으로 한 경쟁사회에서 가장 밀려난 최중증장애인들이 문화예술·권익옹호·장애인식개선 3개의 직무에 참여함으로써 그 자체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 획기적인 시도였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시장으로의 이전을 목표로 하는 재활중심의 일자리가 아닌, 공공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이 일할 권리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며, 처음으로 장애인이 갖는 ‘노동의 권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로서 보장한 정책이다.

방향	목표	3대직무	재정 책임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 변화	최중증장애인 활동 참여 가능기준의 문화예술활동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장애인인권교육	

2020년 7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1년 본 사업으로 자리 잡아 총 275명의 최중증장애인을 시간제(주 20시간)/복지형(주 14시간) 형태로 고용하였다. 서울시가 첫 발을 내딛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은 경기, 강원, 전남 등 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주요 쟁점 사안은 (1) 직무 구성 형태와 (2) 획기적인 양적 확대에 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직무는 최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로 구성되어야 하며, 성과의 기준이 시장경제 체제와 생산성이 아닌, 참여 그 자체를 보장하였다는 지점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탈시설 장애인의 의미있는 낮활동과 안정적인 경제망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탈시설 지원의 가속화를 위해 앞으로도 획기적인 양적 확대를 필요로 한다. 2021년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보궐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각 후보자들

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임기 내 500명 확보’를 요구하였다. 뒤에서 언급될 예정이지만, <서울시 제2차 탈시설화 추진계획>의 목표인 5년 내 800명 탈시설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800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완전한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공공일자리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4) 문화·체육·여가생활 지원 - 어울림플라자 건립

2017년 8월,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전국 첫 무장애 문화복합단지인 <어울림 플라자> 조성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는 서울시가 강서구 등촌동 (구)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에 총 6,684㎡ 규모의 주민과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이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단지인 ‘어울림플라자’를 조성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공간에는 주민편의시설 및 임대시설과 더불어 문화·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연수시설, 문화특화교육시설 등이 설치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어울림플라자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등촌동 주민 및 인근 학교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대립이 발생하였다. 특히 인근 초등학교인 백석초등학교 학부모들은 2019년 6월 25일 서울시와의 면담에서 “장애인 연수시설 설립 불가 및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연수시설을 제외한다는 조건으로 지반조사 등 향후 공사 추진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21개의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통거버넌스 회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각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일 회의에서 서울시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장애인단체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님비현상(NIMBY)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당일 회의에서는 결정을 내릴 수 없으므로, 추후 통거버넌스 운영위원과 강서구 주민 등으로 별도의 회의체를 꾸려 이용목적 변경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하였다.

4년간의 지난한 갈등과 논쟁 끝에 백석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을 설득해냄으로써 2021년 어울림플라자는 강서구 등촌동에 착공되었다. 여전히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대형 문화체육여가 센터가 없는 현실에서, 어울림플라자가 우리나라의 모범사례로서 전국적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5) 자립생활 전달체계 구축·강화 -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지원 확대 및 강화

2021년 하반기 기준 서울시가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는 각 자치구별로 다음과 같다.

자치구	장애 인구수 (2019년)	서울시 지원 IL센터 총 개수
강남구	15,327	2
강동구	17,380	3
강북구	17,522	2
강서구	28,810	4
관악구	20,264	2

광진구	12,610	3
구로구	17,603	3
금천구	11,197	1
노원구	27,396	2
도봉구	15,373	2
동대문구	15,838	2
동작구	14,691	2
마포구	13,219	2
서대문구	12,610	1
서초구	10,581	1
성동구	11,880	2
성북구	17,415	4
송파구	20,008	2
양천구	17,350	2
영등포구	14,405	3
용산구	8,102	1
은평구	21,531	3
종로구	6,017	2
중구	5,638	1
중랑구	20,153	3
총계	392,920	55

자립생활지원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규 IL센터 보조금 지원을 53개소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수치만 따졌을 때 서울시는 계획 대비 실적을 초과하였으나, 실제로 신규 지원을 받게 된 센터 중 소수육성형(발달, 시각) 센터가 4개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형 IL센터는 총 51개소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한 개 자치구 당 보조금 지원을 받는 센터가 단 1개소뿐인 자치구는 총 5개 자치구이다(금천구, 서대문구, 서초구, 용산구, 중구). 전체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가점제도 등을 통해 한 개 자치구 당 최소 3개 IL센터까지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지역사회 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미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신규/누계)	2/45	2/47	2/49	2/51	2/53
지원센터 당 종사인력 확대(신규/누계)	0/4	1/5	1/6	1/7	0/7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	82	86	90	94	98

또한 서울시는 자립생활지원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IL센터 신규 종사자를 7명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지원금액은 6명 지원에서 동결된 상태이다. 중증장애인의 참여와 활동 공간으로서의 IL센터가 의미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장,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사업 담당자, 행정지원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이 서울시 내에

서 중심을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서울시는 신속하게 약속된 인력에 대한 예산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22년 서울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 연구를 배치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서울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 책정의 필요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한다. 장애인자립생활 운동은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 사회의 비장애중심성을 조금 더 평등에 가깝게 이동시켰다. 2002년부터 서울시가 최초로 5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1,5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자립생활 제도화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가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3년에 한 번씩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충분히 증명된 IL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현재 시점에서 재점검하며 예산 책정에 대한 심판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3. 제2차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2018 -2022) 평가

1) 구성 및 총괄평가

2018년 초기에 구성되었던 <제2차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8 - 2022)>(이하 탈시설추진계획)은 5년 내 탈시설 목표 인원을 300명으로 잡는 등 제1차 탈시설 추진계획 대비 축소된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계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2019년 4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시청 후문에서 20일간의 농성을 진행한 끝에 다음과 같은 합의문을 이끌어 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내용

서울시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탈시설 정책을 포함한 장애인복지 정책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1. 서울시는 2차 탈시설추진계획('18~'22) 5년 이내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희망 거주인 중 총 800명의 탈시설 지원을 해당 시설 운영법인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함께 협의하여 추진한다.
2. 서울시는 과거의 시설비·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 프리텔과 인장재단 산하 시설 총236명에 대하여 2020년까지 해당 운영법인의 시설폐지 의결이 있을 시 거주이용인 탈시설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해당 시설 운영법인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논의를 통해 거주 이용인의 자립계획을 수립한다.
3.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활동보조 추가시간 월 최대 120시간과 주간활동서비스 일 최대 8시간 지원, 주거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2년 동안 최대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4. 서울시는 운영기관 등과 자립생활주택(가), 자립생활주택(다), 지원주택에 대하여 2019년 7월까지 2018년 운영비 저출내역을 검토하고 운영비 부족이 확인될 시 부족분에 대해 예산에 반영한다. 또한 코디인건비 기준마련,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평균 증액비율에 맞춰 사업비의 약3~5% 인상한다. 체험전용자립생활주택의 대상자 체험 기간 연장과 예산 증액 문제는 운영기관 등과 협의 등을 통해 2020년 예산을 반영한다.
5. 서울시는 탈시설 추진부서와 지원주택 공급부서(주택정책과)와 협의하여 탈시설에 필요한 구체적 수량의 지원주택을 마련한다.

6.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자립생활정책금 2019년 1천200만원을 2020년 1천300만원, 2021년 1천400만원, 2022년 1천500만원을 지원한다.
7. 서울시는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에 장애인인식개선·인권강사,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의 직무로 「서울형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를 시간제(주20시간), 복지일자리(주16시간) 형식으로 200명 일자리를 마련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장려금과 근로지원인 사업을 지원받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8. 서울시는 2020년에 중증장애인전세주택제공 50가구, 장애인주택개조 200가구 지원예산을 반영한다.
9. 서울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력을 2020년에 1명 추가하며, 2020년 신규센터 4개소를 확대한다.
10.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 TF에 서울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참여 보장과 협의 후 7월중으로 확정하고 발표한다.
11. 서울시는 지역사회기반 장애인주거서비스(Community Based Service) 제공 사무와 탈시설지원센터 설립 시 그 운영에 관하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출범 이후에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12. 서울시는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초기정착 생계비를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범위에서 지급하며,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에게 추가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은 7월 연구결과 이후 제도 개편을 통해 논의한다.

본 협의내용에 따라 서울시는 2019년 5월 탈시설추진계획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다시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수정 내용

1 산출목표(성과지표) 일부 수정

- 수정내용 : 탈시설 목표 인원 수정

◆ 22년까지 300명 ⇒ 22년까지 800명

- 기존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목표 인원(300명)에 다양한 환경변화(지원주택 사업 본격 추진 및 확대, 폐지 예정 시설 거주인 지원 계획, 지역돌봄 체계 강화 등)에 따른 탈시설 증가 예상 인원을 추가함

2 세부과제 일부 수정

□(세부과제2-3)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확대

- 수정내용 : 지원주택 수 확대

◆ 매년 5호씩 확대 ⇒ 매년 60호씩 확대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8.5.)에 따라 주택 공급근거 및 주거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등으로 지원주택 입주 희망 수요 증가 예상

□(세부과제4-3)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수정내용 : 지원내용 수정

◆ 시비 추가 지원 월 30시간(퇴소 후 2년까지)
⇒ 월 최대 120시간(퇴소후 2년까지)

-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활동보조시간, 주간활동서비스, 거주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구축 노력

□(세부과제4-4)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 수정내용 : 지원금액 수정

◆ 지원금액 12백만원 ⇒ 매년 100만원씩 2022년 15백만원까지 증액

- 지역 자립 초기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예산 지원금 확대 노력

2) 분야별 평가

(1)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성

2021년 8월, 중앙정부는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여 우리 사회의 탈시설에 대한 논쟁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훨씬 앞선 2013년, <제1차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탈시설을 제도화하고 실현한 바 있다.

한편, 탈시설 지원체계에 대한 법적 토대가 없다는 점은 여전히 탈시설 확산을 어렵게 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서울시는 탈시설 권리 선언을 실질화할 수 있도록 탈시설과 단계적 장애인

거주시설폐쇄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를 속히 제정해야 한다.

- **목적:**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목적을 기재
- **정의:** 장애인탈시설의 개념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리
- **기본원칙:** 행정내부의 부서 간 협력사항, 민관협력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원칙
- **시장의 책무:** 사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기본적인 이행사항
- **기본계획:** 사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기간, 포함 내용 등 기재
- **운영위원회:** 정책의 주요 현안을 심의·자문 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
- **사업의 범위:**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사업내용 기재(예: 초기정착, 의료지원, 일자리 등)
- **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2) 범죄·비리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시설 폐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와 범죄/비리로 인해 2016년 폐쇄된 송전원과 2020년 폐쇄된 루디아의집, 2021년 폐쇄된 향유의집은 모두 그 범죄의 심각성이 인정되어 시설폐쇄 절차를 밟게 되었다.

2015년 서울시는 범죄·비리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루디아의집 사례만 살펴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되지 못하였으며, 행정명령이 쌓여서 삼진아웃 되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서울시 차원에서 명확한 시설폐쇄-탈시설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비리는 현재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3월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밝혀진 송파구 신아재활원 인권침해 사태, 2021년 5월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여주 라파엘의집 인권침해 사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시설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탈시설’이라면 그 방향과 기조에 맞게 행정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탈시설 지원에 대한 양적 확대 및 가속화의 필요성

앞서 언급되었듯, 서울시가 2019년 탈시설지원계획 수정을 통해 발표한 탈시설 인원 목표는 5년 내 800명이었으나, 2021년 9월 기준 서울시의 탈시설 이행실적은 총 324명에 그쳤다. 이는 목표치 대비 40.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내년도에 본 계획이 마무리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목표에 한참 미달하는 성과이다.

2019년 4월 계획 수정 이후, 2019년 말, 2020년, 2021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매년 실적 이행에 알맞은 수준의 예산을 서울시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매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이상의 확장을 고민하지 않아 현재의 결과에 도래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마주하게 된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서울시는 ‘코로나’를 이유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초유의 팬데믹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재난 대응 예산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밀려난 소수자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과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호하는 것이다. 거리두기의 시대에 가장 밀집된 공간인 거주시설 폐쇄, 탈시설 이행은 재난의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획기적인 양적 확대와 속도이다. 충분한 주거지원서비스 물량 확보, 탈시설 지원을 할 수 있는 공식적 경로로서의 IL센터 거주시설연계 사업의 적극적 추진, 그리고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

4. 마무리 : 정리 및 제언

서울시의 지난 5년을 평가하면 ‘잘 만들었다, 하지만 그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다.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약속되었던 정책들조차 서울시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시행된 정책은 없었다. 모든 제도와 정책은 장애인 대중의 요구와 투쟁을 통해 협의하고 집행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1) 대세는 탈시설, ‘최초’라는 이름에 걸맞는 혁신적 탈시설 정책 실현

서울시의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에 대해 언급할 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수식어는 ‘전국 최초’이다. 그중 가장 핵심을 이루는 탈시설 정책은 2009년 오세훈 시장이 있을 당시, 석암배 데스다요양원에서 탈시설한 마로니에 8인의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로 자립생활주택에서 출발하였다. 이 자립생활주택 서비스는 현재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되어 장애인이 탈시설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 8월, 중앙정부가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탈시설’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이루어질 만큼 확연히 탈시설이라는 이슈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세를 이뤄낸 탈시설의 ‘최초’가 된 서울시 정책은 그에 걸맞는 위상을 가지고 혁신적인 정책 실현을 해야 한다.

2) ‘백화점식’, 나열식 지원에서 입체적 지원으로 -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성

이에 ‘위상에 걸맞는’ ‘혁신적인’ 탈시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단하게 구조화된 지원 체계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2017년 <제1차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평가 토론회> 당시 주요 비판 지점은 해당 계획이 수립 당시부터 통합적, 구조적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 정책과 서비스를 나열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는 점이었다.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의 입체적 구성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활동지원, 주거, 노동, 교육, 건강, 경제적 안정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고민하고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총괄해서 고민해야 할 역할은 서울시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있다.

3) 민간에서 공공으로 - 사회서비스 공공화 실현

팬데믹의 시대,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서비스의 공공화 실현이다. 공공의 영역에서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2019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연대 투쟁하며 요구했던 내용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더 탄탄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더불어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서비스, 시설 폐쇄 후 노동자 고용승계 등, 공적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사회서비스를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

4) 행정 중심 정책 시행에서 현장 중심의 존엄한 삶 실현으로 - ‘적극적 행정’

장애인의 삶은 언제나 법과 제도, 행정, 예산의 테두리에 갇혀 ‘나중’으로 밀려왔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 2020년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공식적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된 것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 6개월 전, 서울시가 법을 넘어선 생명권을 보장하는 ‘적극적 행정’을 실시한 것이었다. ‘적극적 행정 면책’ 제도는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시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정적 절차를 뛰어넘는 집행을 하였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과 징계를 면책해주는 제도이다.

이제는 서울시가 시정 차원에서 ‘적극적 행정’을 임해야 할 시기이다. 주어진 행정과 제도에 갇히게 되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행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상상력과 시도가 재현되어야 할 시점이다.

5) 충분한 재정 마련, 예산 확대로 실현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

“예산 없이 우리에게 대하여 논하지마라.” 이는 최초로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을 일으켰던 미국의 장애인자립생활운동 진영에서 ‘우리없이 우리에게 대하여 논하지 마라’는 문구를 패러디하여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이룸센터 앞 장애인 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농성장에서 내건 슬로건이다.

충분한 물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책은 실현될 수가 없다. 서울시는 2022년도로 마감되는 두 계획이 최대한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현재로서 최선을 다해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2009년 오세훈 시장 시절, 마로니에 8인 투쟁은 약소하게나마 배치되었던 ‘장애인자립생활가정’ 예산이 없었다면 마무리되지 못했을 것이다. 더이상 장애인 자립생활과 탈시설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더 전면적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충분한 예산 확보로 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발 제 2]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10년,
우리는 어떤 지원을 해왔고, 해야 하는가?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전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발 제 2

이규식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이음장애일자립생활센터 10주년 우리는 어떤 지원을 해왔고, 해야 하는가?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에 따른 IL센터의 운영 제언

이규식(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전)이음장애일자립생활센터 소장)



1. 들어가는 말_이음센터 10주년을 맞이하며



- 처음 강력투쟁을 계획하고 들어갔던 영등포구 투쟁 부터 지역에서 IL센터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
- 이음센터가 주력했던 지역 투쟁의제 이야기
- 이음센터 10년의 역사와 이를 기점으로 향후의 이음센터 방향성을 공고히 하고자 함

2. 탈시설장애인 자조모임 ‘탈각’ 으로 시작

배경

- 2000년대 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시설조사 활동에서부터 시작
- 시설조사로 대부분 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한 심각한 현황파악
- 이를 계기로 시설에서 나오기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시설탈출’ 지원을 시작

2. 탈시설장애인 자조모임 ‘탈각’ 으로 시작

탈각 그리고, 이음센터의 시작



- 탈시설을 주요이념으로 삼아 활동하는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 모임에 대한 고민을 통해 만들어진 ‘탈각’
- 이는 곧 이음센터가 만들어진 배경
- 2010.12.14 이음센터 건설제안을 시작으로 2011.06.24 이음센터 창립

3. 이음센터의 역사 ‘이음여행’

이음여행이란?

- 시설장애인 당사자들이 2박 3일간 지역사회로 나와 탈시설한 장애인 당사자들과 멘토-멘티를 이뤄 자립에 대한 정보제공, 다양한 일상경험 등을 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을 확인하고, 탈시설에 대한 용기를 얻는 활동
- 2008년 ~ 2018년, 10년의 기간동안 총 10회의 이음여행 진행

3. 이음센터의 역사 ‘이음여행’

이음센터의 역사는 곧 이음여행

- 이음여행을 통해 탈시설활동가들을 만들어온 것이 곧 이음센터의 탈시설운동
- 이음여행 후 자립한 사례로 먼저 가신 장애인운동 열사 및 현재까지도 지역에서 권익옹호 활동가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이음센터를 통해 자립한 분들 중 대부분이 이음여행에서 많은 용기를 얻고 나올 수 있었다고 증언함

3. 이음센터의 역사 ‘이음여행’

2008년~2018년 이음여행 사진



3. 이음센터의 역사 ‘이음여행’

2008년~2018년 이음여행 사진



4. 영등포구 자립생활 기반마련 활동

영등포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운동



3. 이음센터의 역사 ‘이음여행’

2008년~2018년 이음여행 사진



4. 영등포구 자립생활 기반마련 활동

영등포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운동

- 2014년 영등포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가 제정되기 까지 지역사회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업하여 함께 조례를 제정함.
- 이는 영등포구 지역 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앞으로의 제도를 구축하는데 단단한 기반이 되었음.
- 장애인정책이 변화되며 조례 내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임.

4. 영등포구 자립생활 기반마련 활동

IL센터의 역할 중 지역에서 구심점이 되는 지역사회네트워크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있어 그 지역에서의 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협력과 공생은 필수불가결함.
- 이음센터는 '목요밥상'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이념을 지역에 알리기 시작하였고, 장애인의제를 상시 공유 하며 지역사회 단체들을 조직해왔음.
- 대표적인 예) 영등포장애인복지관과의 협업
 - 이음센터의 IL이념과 철학 공유를 통해, 지역에서 장애인당사자 지원에 대한 공동의 방향성을 세워 협업할 수 있었음.

5. 탈시설지원 과정에서의 서울시 정책적 한계

IL센터와 시설의 공식 중계역할의 부재로 인한 한계

- 초기 시설장애인 지원은 공식적인 정책과 예산 지원 없이 센터 자체적으로 지원함. 이로 인한 시설의 방어적인 입장으로 협업에 부정적으로 일관함.
- 시설 내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기본 정보 등이 부족한 상태로 지원을 해야하는 제약점들이 존재 하였음.
- 지속적인 시설과의 협업제안과 끝에 이음센터만의 지원원칙을 세우고, 시설과의 협약체결도 센터의 역량으로 만들 수 밖에 없었음.

5. 탈시설지원 과정에서의 서울시 정책적 한계

서울시의 협소한 정책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한계

- 2019년 서울시 거주시설연계지원사업이 센터/시설 1:1지원을 원칙으로 바뀌면서 많은 시설을 통하여 시설장애인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어렵게 되었음.
- 이에 많은 시설장애인분들과 함께하는 이음여행은 큰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었음. 결국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하게 된 결과로 이어짐.
- 서울시의 정책변화 수립 시 각 지역에서 IL센터의 사전 의견 수렴 등 세밀한 내용으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함.

5. 탈시설지원 과정에서의 정책적 한계

당사자 지원 시 느꼈던 한계점

1.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부족
 - 장애계 투쟁으로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추가 120시간(2년)지원이 있지만, 2년이란 시간은 자립준비 과정에서 너무 짧은 시간임. 2년 후 당장 줄어드는 활동지원 시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2.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매입 시 이웃이 되는 지역주민의 장애감수성 부족
3. 민관협치사업 부족으로 인한 민간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당사자지원
4. 복지부-서울시-영등포구 장애인복지 정책의 일관성 부족

6. 이음센터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제언점

자유로운 삶을 잇는 '이음(탈시설)마을' 실현!



6. 이음센터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제언점

자유로운 삶을 잇는 '이음(탈시설)마을' 실현!

1.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정책에 따른 영등포구 지원의 일관성

-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 확대
-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매입 시 지역주민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 영등포구 자체 자립생활지원주택 운영 및 지원비 확대

2. 민관협치사업 활성화

- 영등포구 진행중인 민간협치사업 정기적인 회의 및 협업구조 활성화

3. 영등포구 내 차별없는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4. 영등포구 1인 이상 사업장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의무화 강조 및 추진

감사합니다



패 널 토 론

김진균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정민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정혜란 (한국장애포럼 활동가)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장)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당사자 발표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 나(김진균)의 이야기

김진균 ||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1. 시설에서의 삶

나는 14살 정도에 시설에 들어가서 10년을 보냈습니다. 10년 동안 ‘주몽재활원’ (학교도 같이 다녔음), ‘새생명의집’ 등 3번 정도 옮겨 다녔습니다. 시설에서의 삶은 나의 결정권이 전혀 없었으며, 잠자는 시간을 비롯하여 밥 먹는 것 등 틀에 박힌 규칙으로 인해 자유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출조차도 사회복지사의 동행이라는 조건 아래 외출증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2. 자립까지의 과정

‘새생명의집’에서 2015년 지역으로 나오기 위해서 양천IL센터 진행하는 동료상담, 단기체험 자립생활훈련 등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처음 자립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설에서 나오면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자립에 대한 많은 영상과 센터를 통해서 동료상담도 많이 하며 ‘활동지원서비스’도 알게 되었습니다. IL센터에서도 시설에서 나오라고 많이 힘써주며, 자립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립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자립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니가 어떻게 자립을 하겠냐고’ 반대를 해서 그때 고민 속에 몇 번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다시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 단기체험을 나와 자립한 선배들하고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서 처음 그분들이 “부모님 반대 때문에 안 나오기는 너무 아깝지 않냐”, “아무리 반대해도 결정은 본인 자신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그 말이 자립을 결심하는데 큰 용기가 되었고, 결정적인 자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며 시설에서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이음센터와 만난 계기

자립을 결정했을 때 양천센터에서 진행하는 단기체험과 동료상담을 하면서 자립생활주택에 신청을 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다시 자립생활주택을 알아보던 중 이음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을 알게 되어 2018년 이음센터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4. 이음센터 지원_자립생활주택 이야기

시설에서 나와서 첫 자립 생활을 경험하면서 낯 설고 어려운 것들도 있었지만 이음센터에서 연계한 여러 자조 모임과 음식 나눔, 만들기 활동·여행하기·놀이동산 이용 등의 많은 프로그램 이용 및 체험활동을 통해 자립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자립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혼자서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이음센터에 감사를 전합니다.

5. 자립생활 중 가장 필요한 지원 & 바꾸고 싶은 제도

지금 받고 있는 서비스 중 활동지원서비스(이동지원, 외부활동지원, 가사지원)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가장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있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수급자라는 굴레 때문에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수급권이 탈락 되거나 생계급여가 깎이는 등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기초수급비 아래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자립생활의 필요한 지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6. 탈시설에 대한 ‘나의’ 생각

나에게 탈시설은 ‘자유로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내가 살면서 가장 잘 선택했던 일이고 내게 허락된 자유를 최대한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가생활 중 종교생활, 영화관, 스포츠경기관람, 동네친구들 자주만나는 것을 나의 선택에 의해서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로 가장 좋은 것은 늦잠 자는 것인데 아주 꿀맛입니다!

7. 현재의 삶은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는 마스크 쓰는게 어려웠습니다. 또 경기장 같은 곳에 무관중으로 바뀌면서 가지 못하게 되었고,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할 경우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시작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통해 느끼는 성취감과 권익옹호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 잘 먹고, 늦잠도 자고, 주변 친구들도 자주 만나서 놀고, 공공일자리도 열심히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8. 앞으로 탈시설-자립생활 위해 진균님이 하고 싶은 활동

탈시설을 하는 후배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권익옹호를 위한 집회와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힘을 더할 예정입니다.

토론 1

정민구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정책 5년 평가 토론회

토론1. 서울시 탈시설 지원정책의 흐름과 방향
-사회복지법인 프리wel과 루디아의집 사례 중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민구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 추진계획 요약 》

- 대 상 :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 2,565명 ※ 장애영양아시설 2개소 제외
- 1차('13~'17) 추진성과
 - 전국 최초 탈시설 정책 추진으로 정부차원의 탈시설 정책 추진 견인
 - 탈시설 목표인원 600명중 604명 탈시설(계획대비 100.6%)
- 추진방향 : 단계별 목표에 따른 점진적 추진으로 정책 혼란 최소화
 - 1차 도입기('13~'17) → 2차 발전기('18~'22) → 3차 확대기('23~)
- 추진목표 : 탈시설 300명, 거주시설 변환 시범 2개소
 - 자립체험공간 확보
 - 탈시설 가속화
 - 지역 거주정책 다양화
 - 탈시설 인식 조성
 - 거주시설 변환 시범
 - 거주시설 변환 확대
- 주요사업 : 4대 정책과제 및 25개 세부과제
 - I 탈시설 추진강화 및 전환지원체계 개선 서울시 탈시설 권리선언 등 8개
 - II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발달장애인 신거주모형 개발 등 3개
 - III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변환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등 7개
 - IV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탈시설장애인 개입지원계획 수립 등 7개
- 소요예산 : 22,102백만원 (5년)

(단위 : 백만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2,102	2,252	3,269	4,520	5,527	6,534

서울시 1차 탈시설 목표 600명 중 거주시설 체험홈과 공동생활가정으로 나온 349명을 제외하면 목표 달성률은 42%로 낮아짐.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18.5.3 제정)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08호)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자립생활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지원) 및 시행규칙 제19조(중증발달장애인등에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가이드('19. 5. SH 발간)

◆ 추진경과

- 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주택정책과) : '16. 8. ~
- 시설 발달장애인 대상 8호 운영(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운영 형식 활용, 지역자원 활용 한계)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장애인복지정책과) : '17. 7. ~
- 재가 발달장애인 대상 10호 운영(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체계 시범 운영)
-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주택정책과) : '18. 5.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 계획 수립(주택정책과) : '19. 4. 8.

서울시 자립형 발달장애인 주거모델

구 분	장애인 지원주택 (SH 공급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통합서비스 (SH 비공급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념	공공임대주택 + 주거서비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주거서비스만 제공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 +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
이용대상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발달장애인 우선)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 (탈시설장애인인 경우 타장애 가능)	탈 시설 욕구가 있는 서울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입주인원 (주택 당)	1인 원칙 (2~3인 공동거주 가능)	1인 (2~3인 공동거주 가능)	2인 (가형, 나형은 3인 가능)
공급목표	68호('19)→128호('20)→248 호('22)	26호('19)→40호('20)→120 호('22)	74호('19)→81호('20)→91호('22)

*자립생활주택 가·나형: 지체장애인 및 경증 발달장애인 대상 / 다형: 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 ✓ 중앙정부의 커뮤니케이터사업 중 장애인분야에서 지원주택 운영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지원주택 운영

2020년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사업

◆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의 정의

○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임대주택

《 주거서비스란? 》

○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원주택 입주자의 안정적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개인별 욕구에 맞추어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주거 관리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 대상자별 서비스가 다양하며, 주거상담, 일상생활 관리, 의료지원(투약 관리 등), 심리정서치료 등 포함

구분		소계	2018	2019	2020.7.	(계획)2020	(계획)2021	(계획)2022
확보 물량	소계	866	50	74	152	190	200	200
	노인	190	0	0	48	42	50	50
	장애인	278	8	16	44	70	70	70
	노숙인	318	38	42	60	58	60	60
	정신장애인	80	4	16	0	20	20	20
재고 물량		0	50	124	276	466	666	866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의 장단점



✓ **장점**: 이용자 권한강화(주택점유권, 서비스 선택권), 영구적서비스, 가족 부담경감, 안정적인 주거서비스

✓ **단점**: 집합형 우려, 공공주택공급으로 대상한정(민간주택 및 가정내 주거서비스 확대필요), 지역사회기반주거서비스에 대한 기준 없음, 타사회서비스를 이유로 주거서비스예산단가 낮을 우려(현재 1인 지원 2700만원 수준)



□ 추진 배경

- UN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 및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개발 권고 이행
-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42번)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환경 조성' 이행
- 서울시 2017년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발표. 2019년 서울장차연과 서울시 프리wel산하 거주시설에 대한 탈시설추진을 약속.
- 2019년 향유의집, 2020년 누림홈과 해맑은마음터에 대한 변환추진을 약속함.
- 사회복지법인 프리wel 이사회(2019년 2차 임시이사회, 2019.5.30.)에서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 추진 및 변환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함.

□ 향유의집 탈시설 추진 원칙

- (장애인)더 나은 삶의 질 보장,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탈시설 권리 실현
- (직원)고용보장을 위한 노력
- (법인자산처리)공공화의 원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원체계

서비스를
받는 삶

좋은 유급서비스를
받는 삶

의미있는 삶

기관 및 지원자 중심
서비스를 받는 삶

- 시설 입소 장애인
- 발달장애1급 000

나다움을 찾는 삶

- 뮤지컬 배우 000
- 애니메이션 작가를 꿈꾸는 000
- 입주민 대표 000

집단서비스

- 도시 외곽
- 직원 1명이
최소 1:4 / 최대 1:14 지원
(개인별 서비스 한계)
- 제한되는 하루일과

개별화된 서비스

- 서울시내 중심
(현재: 동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예정지: 강동구, 노원구, 양천구, 구로구)
- 활동보조 1:1 + 주거서비스 1:4
- 지역복지서비스 이용
(주간활동, 평생교육, 직업훈련 등)
- 당사자 선택하는 하루일과

개인별지원계획

시설입소자

- 시설의 서비스
- 시설소유의 건물에 거주
(당사자 주거권 X)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 활동지원서비스 X
 - 주거급여 X

공공주택 입주민

- 지원주택센터의 주거서비스
- SH(LH)공사와 **직접계약**
(당사자 주거권 보장)
- 지역장애인
 - 활동지원서비스 ○
 (비수급 월이용료 40,000원~160,000원)
- 주거급여 ○

집 : 신축빌라형태, 장애인편의개조

1. 선택사항 :

- ① 1인 거주용(2룸 또는 1.5룸)
- ② 2인 거주용(2룸 또는 3룸)

2. 임대료 :

- ① 크기와 지역에 따라 다름
- ② 오류동(50~52㎡/ 쉼어형)의 경우
보증금 1,500,000원/
월임대료 204,300~239,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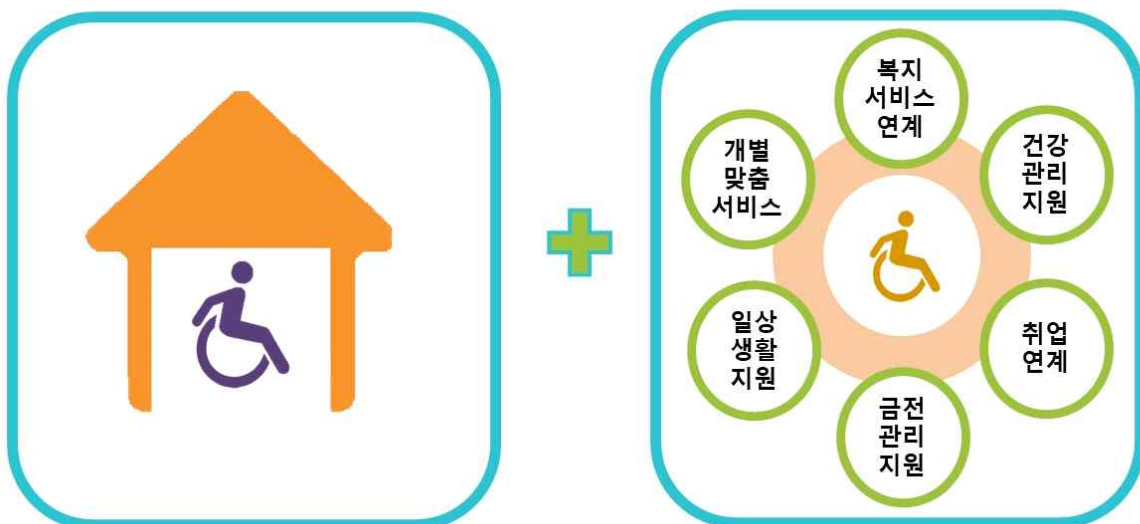
※주거비지원+정착금 활용



돈 : 기초생활수급비+장애연금+탈시설정착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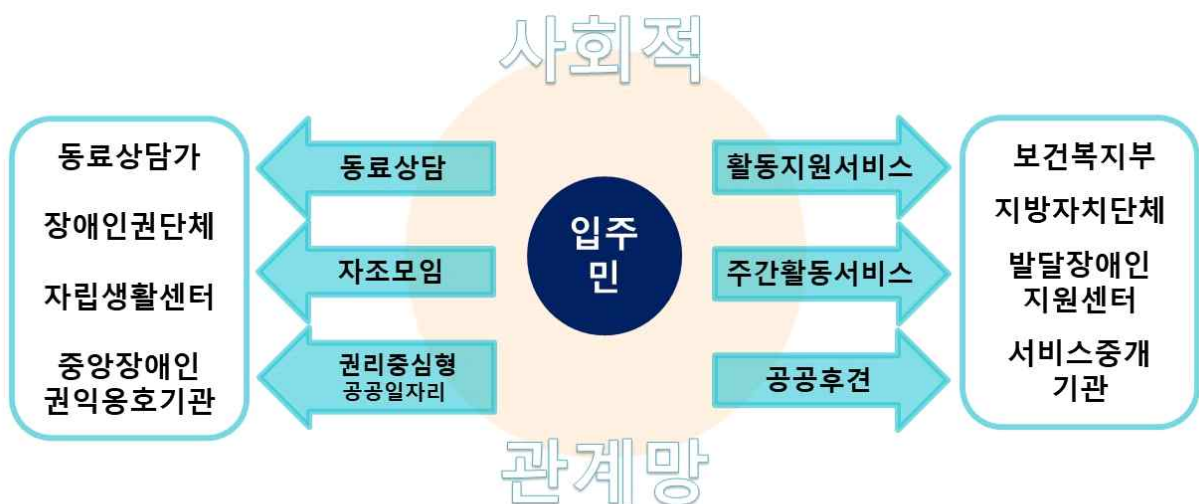
서비스 : 주거+주거서비스



서비스인력 : 코디네이터+주거코치+활동지원사



자연적 권익옹호시스템





증양센터
운영총괄 1명
행정인력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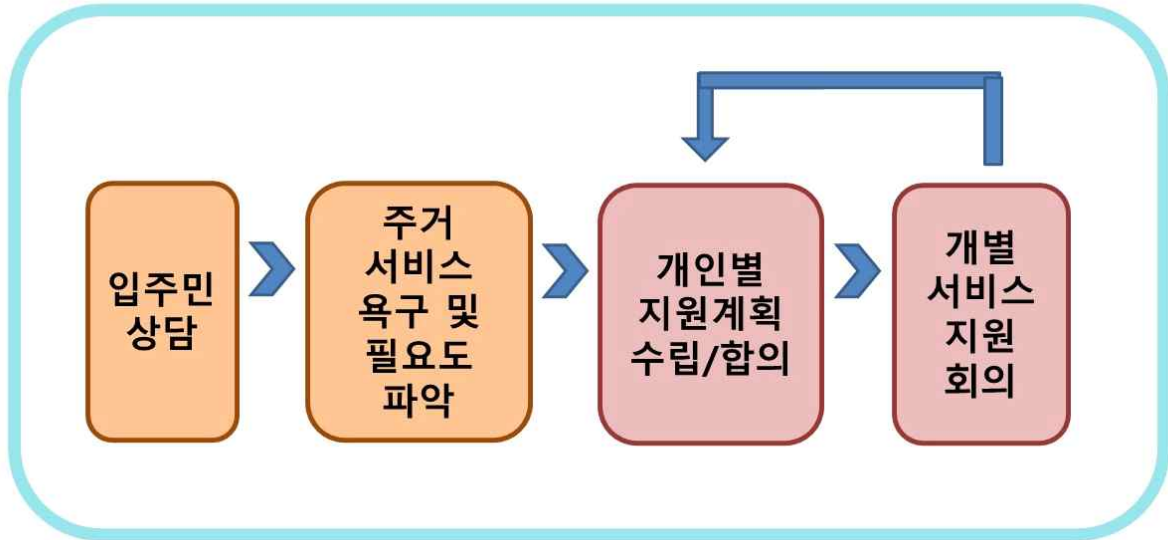
신정신월권역	정안권역	목동권역	오류권역I	오류권역II
주택 8호	주택 8호	주택 12호	주택 6호	주택 12호
입주민 13명	입주민 10명	입주민 10명	입주민 10명	입주민 14명
슈퍼바이저 1명	슈퍼바이저 1명	슈퍼바이저 1명	슈퍼바이저 1명	슈퍼바이저 1명
코디네이터 3명	코디네이터 3명	코디네이터 3명	코디네이터 3명	코디네이터 3명
주거코치 1명	주거코치 1명	주거코치 1명	주거코치 1명	주거코치 1명

- 입주민 57명 : 주택 44호 : 직원 22명 (+간헐적 지원 8명)
(직접 서비스 인력 기준 입주민 3명 : 코디네이터 1명)
- 입주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현황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인력 입주민 1명 : 활동지원사 1.5명)

프리웰지원주택센터 주거서비스

주 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퇴거지원 • 주거유지지원 • 주택유지보수서비스연계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서비스연계지원 • 자치활동지원
생 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지원 • 정서지원 • 행정서비스및금전관리지원 • 사회서비스연계지원 • 활동지원(방문요양)서비스연계 및 이용지원 	안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지원 • 위기관리서비스지원 • 권익옹호지원

입주민중심시스템에 의한 지원과정



또 다른 방식은?



(역세권) 청년주택
에 함께 살기

ex) 서울시 서초구 청년주택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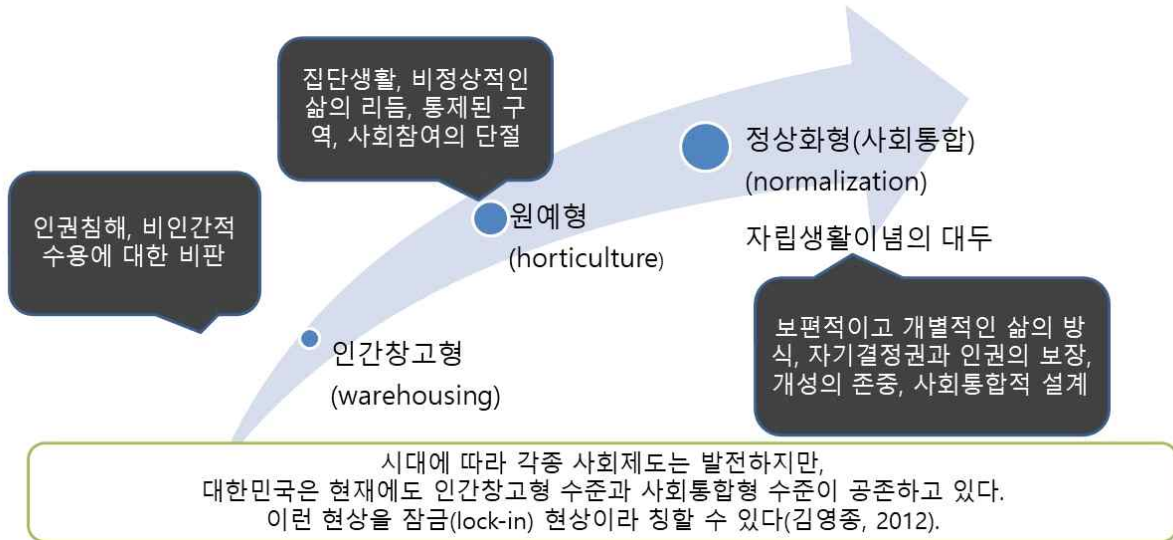
사회주택
(공동주택) 제도
활용하기

ex) 엔젤스헤이븐과 아이
부키가 함께 짓는 LH 매
입임대형 사회주택 등



▲ 사회주택 개념도

역사의 발전에 따라 국가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한다





지원주택 운영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

(1) 협약 및 사업평가 방식

- 당사자, 가족 및 탈시설관련 외부기관 공개심사
- **탈시설 및 시설폐지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서비스 질 수준 평가시스템 도입(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포함)

(2) 운영사업자 제출자격

- **탈시설·시설폐지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이사회 결의**
- **신규시설입소 금지**
- 독립적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시설연계사업 등) 협약
- **서울시 관할 폐쇄시설의 노동자 고용승계(전환) 및 재교육 계획 수립**

(3) 필수 운영 사항

- 조력자 매칭을 통한 탈시설선경험과 정보제공
- 지역사회에 살 권리 수준 모니터링을 통한 개인별탈시설지원계획 수립
- 주거 관련 : 정착금, 주택 제공,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연계협조
- 기본건강서비스 : 건강검진, 치료지원, 영양관리
- 지역사회서비스 : 활동지원, 고령화지원서비스 연계협조
- 사회참여 및 사회적관계 : 교육 및 직업, 시민활동 연계협조

(4) 위성시설양산 예방 조항

- 노동자 고용전환 시, 탈시설 및 자립지원 교육 체계 강화
- 시설복귀사례 분석 및 사후관리

향유의집 탈시설 추진 결과

- 향유의집 거주인 탈시설 현황 (2018.1-2021.4)

2018년1월기준 현원	지원주택	사망	자립생활 주택	전원	원가정 복귀	김포지역내 자립
60	43	6	1	6	3	1

※ 프리웰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원주택 입주 : 총 76명
(2018년.1~2021.4)

- 서울시장애인지원주택으로는 1차 입주 32명, 2차 입주 25명, 3차 입주 19명으로
총 76명의 자립을 추진.

향유의집 탈시설 추진 결과

- 향유의집 노동자 고용 승계 노력(2021.2월 기준)

구분	합계	원장	사무 국장	사 무 원	사회재 활교사	상담 평가 요원	간 호 사	물리 치료 사	언어 치료 사	작업 치료 사	생활 재활 교사	영 양 사	조 리 사	위 생 원	축 탁 의사	관 리 인	운 전 원
정원	22	1	1	1	1	0	1	0	0	0	11	1	2	0	1	1	1
현원	30	1	1	1	1	1	1	1	1	1	14	1	2	1	1	1	1
고용승계인 원	11 (38%)	X	X	X	X	1	X	X	X	X	10	X	X	X	-	X	X

- 전체 직원은 축탁의를 제외한 29명임. 이중 11명이 고용승계 됨. 프리웰 법인 내 의 탈시설로 고용
승계(전보발령) 8명, 타법인 지원주택 운영사업자로 고용승계 3명. 따라서 전체인원 대비 38%가 고
용승계 되었고, 대부분 생활재활교사만(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 고용승계 됨.

※고용승계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

1. 사회서비스원으로의 고용승계 후 전환재배치 방식 (스웨덴모델참조)

- 탈시설정책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노동자들에 대해서 교육 후 관련 유관 직종으로 전환재배치 하는 방안

- 장애인거주시설 노동자들은 급여는 정부보조금 100%로 지원되므로, 고용책임을 민간 법인에게 전가하기보다는 공공적으로 성격전환 유도

- 사회서비스원에 고용승계가 어려울시, 별도의 체계하에 임시적으로 둔 후 유사 업종 중 정부기관으로 고용승계

2. 서울시 직영, 위탁, 수탁기관에 고용승계 의무 부과

- 장애인지원주택 신규 운영사업자의 경우 탈시설정책으로 폐지되는 법인 및 시설의 노동자를 고용승계하도록 의무 부과하는 방식

(서울시는 2020년 장애인지원주택운영사업자 모집시 신청자격요건으로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운영사업자를 모집하여 3명이 고용승계 됨, 희망자는 6명이었으나 고용승계 책임부과에 대한 운영사업자의 반발로 50%만 승계됨)

3. 공기업의 희망퇴직제도, 명예퇴직제도, 퇴직위로금 지급 방식 도입

프리wel 탈시설과정에서의 저항

프리wel법인이 무연고 최종증발달장애인을 강제퇴소 시켰다?

- 프리wel 법인은 UN장애인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5호에 의거하여 자립생활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무연고최종증발달장애인이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로의 이전과 개인별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내에서는 집단서비스를 받던 당사자들이 지원주택이주후 개별서비스를 받아, 생활이 매우 호전되었음.

- 이에 대해서 향유의집 전 직원들이 탈시설을 반대하며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4차례에 걸쳐 진정을 하였으며 모두 기각됨. 지원주택서비스가 시설서비스와 비교해 당사자이익에 부합하고 생활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기각됨.

-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일부의 입장에서는 양천구, 서울시, SH공사,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법원에 민원, 진정, 소송을 반복해서 제기하고 있음.

- 그러나 모든 결과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탈시설절차는 적법했다는 것임.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19진정048800 (당사자의 동의 없는 퇴소 및 전원)

▶ 결정요지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및 전원의 동의를 당사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에게 받거나,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에 앞서 시설 내부결정 기구에 의해 임의로 퇴소를 결정 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선택이 반드시 최상의 결과를 보증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당사자가 스스로 퇴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일차적인 고려를 하여야 하고,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에게 퇴소 동의를 받는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침해라는 점을 명백히 함.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8진정0776100, 0776800, 0791000 병합 (중증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및 자립교육 실시)

▶ 결정요지

- 향유의 집에서 시행중인 자립교육은 그 자체가 자립과 반드시 연결된다고 보다는 장애인에게 자립훈련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자립교육에 참여시킨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 역시 자기결정권 행사의 주체이므로, 그들에게 자립을 위한 정보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함.

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20진정574400 (강제 지원주택 사업 참여 및 퇴소 일방적 진행)

▶ 결정요지

- 제2차 지원주택 대상자들에게 지원주택 예정지를 방문 및 서울시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회의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활동지원 시간을 확보 한 후 장애인 지원주택 당첨과 지원주택 계약을 지원, 지원주택 대상자 사례회의 결과를 양천구청에 보냈고 양천구청에서 장애인민관협의체 심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이 지원주택에 입주를 추후 승인함.
- 피진정인들이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 결정.

루디아의집 시설폐쇄를 통해 본 탈시설 정책과 한계

1. 시설개요 (2020년 당시 기준)

구분		루디아의집
시설분류		장애인 거주시설
일반	현원/ 정원	62/90
	종사자	43
	소재지	경기도 가평

2. 학대피해내용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 의하면, 생활재활 교사가 입소장애인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뒤 종아리를 때리는 등 폭행이 이루어졌고, 그중 피해자 1명은 폭행으로 인해 치아를 발치해야 했다. 문 제행동을 수정한다는 이유로 고추냉이 섞은 물을 강제로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까지 있었다. 또한 신변처리를 적시에 하지 않으며 방치했을 뿐이라 신변처리과정에서 해당 장애인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폭언이 이뤄졌고, 대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식사량을 줄이기까지 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 장애인의 경우 다음날 발견되어 수술이 이루어지는 등 의료적 방치가 만연했다. 또한, 상당수의 종사자들이 장기간 반복되어온 인권침해를 방관하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3. 관련 행정조치

구분	선한목자재단	루디아의집	행정처분 사유
2014년		시설장 교체	주인에게 제압복을 강제로 착용시키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끈으로 묶거나, 폭행하는 등의 인권침해와 각종 인권비를 부정 수령
2015년		개선명령	입소장애인을 위한 후원금을 시설장 및 종사자에게 직책수당으로 부당지급
2016년	-	개선명령	시설운영위원회 미운영
2017년	-	시설장 교체	소장장애인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약물문제 및 불법적인 의료행위, 입소장애인을 방에 감금하는 인권침해사건
2020년	법인설립허가 취소('20.5)	시설폐쇄('20.6)	각종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설에서 첫 인권침해가 발생한 지 6년, 두 번째 인권침해가 발생한지 3년만에 시설폐쇄 명령**

4. 문제점 및 의의

(1) 지자체의 빠른 행정조치

사건보도 후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빠른 행정조치를 결단했다. 그러나 그동안 두 차례나 거주인에게 치명적인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을 이유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비판할 지점이다. 서울시는 2016년 서울시 기본인권증진계획을 통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적용된 사례는 없다.

-대부분 시설 인권침해 및 학대는 오랫동안 축적된 것이 폭발되는 형태. 개인 권한 부재, 1대多 관리, 폐쇄성 등 시설 구조 자체가 인권침해 및 학대를 양성

-시설내 인권침해 사건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인권침해가 한번이 한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음.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해자 및 공조자가 다수임. (여주라파엘의집 인권침해 사건만 봐도 전체 직원의 1/3이 학대에 가담한 가해자 였음)

*첨부5. <인권침해 발생 시설 행정처분 현황>

		(단위: 개소수)						
인권침해 발생		총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6
행정 처분	개선명령	55	3	7	14	14	14	3
	과태료 부과	2	-	-	-	-	2	-
	보조금 환수	1	-	-	-	1	-	-
	시설장 교체	11	4	1	1	4	1	-
	시설폐쇄	5	-	-	-	2	2	1

지난 5년간 인권침해는 74건이 일어났지만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진 곳은 5개소뿐이다. 사진 장혜영 의원실

<서울시 최근 5년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발생년도	시설명	행정처분
2016년	임마누엘의 집	개선명령
2017	루디아의 집	시설장 교체
2018	인강원	개선명령
	웰컴힐러의집	-
	향유의집	-
2019	임마누엘 동촌공동체	-
	맑은샘 주단기거주시설	개선명령
	새생명외집	개선명령
	행복플러스	시설장 교체
	프란치스코의집	-
2020	브라향	-
	루디아의 집	시설폐쇄
	솔한한마을의집	개선명령
	문혜장애인요양원	-
	로라시아공동생활가정	-
2021.8	행복한사람들의집	개선명령
	라파엘의 집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출처: 최혜영 의원실

(2) 시설폐쇄 명령 후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매뉴얼 부재

시설폐쇄 명령 이후 이행 여부는 개별 시설에 맡겨지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및 대응 매뉴얼 부재.

(3) 민간합동의 긍정적 모델 ‘특별조사단’

루디아의집 특조단은 특히 거주장애인의 대다수가 중증발달장애임을 고려하여 장/단기지원을 목적으로 발달장애당사자 지원 경험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를 민간상담원으로 구성했다. 보호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개별상담을 진행하며,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및 경과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 입소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조치와 그에 따라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선택 등 안내했다. 특조단과 매칭된 장애인과 보호자가 원할 경우 지원주택운영기관 라운딩 및 방문진행과 지원주택에 관한 신청부터 입주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루디아의 집 사건 이후 특별조사단이 구성된 사례는 없다.

(4) 보호자 동의의 벽을 넘을 수 없는 탈시설지원

루디아의집의 입소장애인 중 90%가 연고가 있는 장애인이었었는데 사후조치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미 법적 연고자와 연락이 끊긴 입소장애인도 있었는데, 이럴 경우 연고자를 찾는 시간이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미 실질적 보호자역할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조치에 관한 동의를 해당 장애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지 고려가 필요하다. 특별조사단이 개별 보호자에게 상담 및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주거 및 활동지원 등의 정보제공을 했지만, 보호자가 반대하면 당사자를 지원할 방안이 없다. 그 결과 루디아의집 입소장애인 62명 중 49명은 보호자 동의하에 타 시설로 전원되었고 무연고 장애인만 지원주택 입주라는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반드시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5) 적극적 조치를 중단시키는 소송제기

선한목자재단은 서울시와 금천구의 행정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직원과 부모를 앞세워 시설 폐쇄를 지속해서 방해했다. 무연고자의 전원조치를 저지하기 위해 행정법원에 시설폐쇄 집행정지소송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오 씨는 본인을 대표이사라 사칭하며 이미 임기가 만료됐거나 자신의 의지로 사임한 과거 이사들을 조직하여 시설폐쇄 및 법인설립허가취소 불복소송을 제기했고, 새로 선임된 정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냈으나 법원은 지난 11월 이를 기각했다. 특히 집행정지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지자체는 민감한 입장을 보이며 입소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소송은 그 진행과 결과가 더디게 진행되므로 신속한 조치에 매우 큰 장벽이 된다.

(6) 서울 최초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명령, 이행이 어려운 법적 한계

법인설립허가취소는 통보되었고, 이사진도 공익이사로 교체되었으나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탈시설의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탈시설지원조례제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주거약자지원법 (개정)

주거약자 서비스법 (제정)

탈시설지원조례제정(제정)

광역시·도	계획명	최초 수립년도	목표인원	추진근거 (장애인탈시설관련조례등)
서울	○1차탈시설지원계획(13~17.) ○2차탈시설지원계획(18~22.)	2014	○1차:600명 ○2차:800명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가) 연내 제정 계획
부산	탈시설자립지원 5개년계획(20~24)	2019	300명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대구	○1차탈시설자립지원5개년계획(15~19) ○2차탈시설자립지원5개년계획(20~24)	2015	○1차:100명 ○2차:200명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인천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19~23)	2018	48명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광주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2017	137명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21~25)	2013	103명(정착지원금)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경기	경기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18-22년)	2017	500명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강원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충북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충남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북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21~25)	2021	250명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정)도 연내 제정할 계획
전남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경북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경남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 발달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시설에 이미 입소된 사람들의 탈시설지원 권리 명시, 절차, 지원서비스 명시
-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통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지원)공단 등을 통한 전달체계 통일, 장애인의 권리옹호 보장
-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으로 만 65세 문제 해결 및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상향 조정, 장애인의료법 개정으로 장애인주치의제도 등 강화
 - 장애인 관련 법안의 재개정을 통한 장애인권리 보장
 -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전달체계 정비로 장애인정책의 위상 상승
 -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으로 권한과 실행력 있는 기관 설립
 -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서비스량 확대

주거약자지원법(개정) 주거약자 서비스법(제정)

-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
- 지원주택 입주자는 안정적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개인별 욕구에 맞추어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주거 관리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이용
- 지원주택 근거를 명시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 「주거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법률 명칭을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변화 *별첨자료 참조
- 주거약자의 범위 확장 : 장애인, 노인에 더하여 노숙인, 정신장애인 등
-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의 종류 명시 : 지원주택, 주거약자용 주택,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주택 개조,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의 제공' 조항 삽입
- 지원주택의 개념 정의, 수요 파악과 공급 계획 수립, 지원서비스 재원 확보와 주택의 통합적 제공, 지원서비스 대상자 범위 등 포함

지원주택 5년내 10만호 공급!

“우리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온 것이다.”

-로빈 S. 샤르마 -

토 론 2

해외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사례

정혜란 Ⅱ 한국장애포럼 활동가

1. UN CRPD에 명시된 자립생활 권리

○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장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 제24조: 교육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 제27조: 근로 및 고용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2. 해외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 유럽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헝가리 직권조사 결과보고서(2020)

“19. 2011년 당사국은 50명 이상을 수용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소규모 그룹홈으로 옮기는 전략을 개시했다. 그 결과 655명의 장애인이 소규모 주거환경으로 옮겨 가게 됐다. 1만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세스의 2단계는 2017년에 시작하여 2036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양 단계 모두 유럽지역발전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에 가장 많이 의존하며, 해당 기금은 주로 소규모 주거환경을 건설하는 데 사용된다.”

“22. 수많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대한 의료적 및 온정주의적 모델이 사회 내에 그리고

장애와 관련된 정책과 법체계 속에 우세하게 자리잡고 있다.”

“66. 지원주택 내에서 시설화 환경의 주요 특징이 지속적으로 팽배하다. 장애인은 자신의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자율성의 제약과 권력 상실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들은 식품 및 의료 서비스 이용과 같은 부분에서 대규모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시설들은 그들의 소득범위에서 큰 비용을 청구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막는다. 지원주택에 입주한 사람들 대다수가 피후견인 상태여서 자율성에 대한 제약이 가중되고 있다.”

“67. 지원주택은 시설 기관장과 직원의 통제, 관리 하에 유지된다. 그들은 자유롭게 주택에 들어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비용을 청구하고, 규칙과 질서를 제시하고, 입주자들 간의 갈등을 관리하고, 거주인 간의 대인 관계, 보건 서비스 접근 관리, 의료 기록 관리에서 개별모니터링을 하며 후속 조치를 취한다.”

“68. 자기 결정의 부재와 사생활 제약은 이른바 “지원주택”의 공통점이다. 주택의 설계와 기본 가구 제공은 시설에서 정하는 사항이다. 장애인은 이사할 집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룸메이트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되더라도, 그들은 방을 함께 써야 한다. 주택은 장애인이 정하지 않은 내부 규정에 의해 관리된다. 손님을 초대하거나 외부 활동을 하는 것에서부터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알코올 음료는 금지되어 있다. 커플은 같이 살 수 있게 되면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가능성이 제한된다. 장애인은 지원주택을 떠날 수 있지만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단절된 이들이 많아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 결국 지원주택은 그들의 새로운 영구 거주 시설이 된다.”

“95. 주 정부들은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권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헝가리 정부는 목표, 예산, 시간계획, 지표, 참고 사례, 모니터링 활동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의 인권 모델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통합적 실행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 협약과 장애 인권 모델에 대한 인식 제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벽, 편견 및 고정관념의 제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 유럽연합(EU) 탈시설 가이드라인(2012)

“일상의 기술: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익힐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시설화의 결과로 그 기회를 잃었다. 그러므로 시설을 떠나기 전 요리, 청소, 세탁, 다림질, 설거지 등의 가사 기술이나 위생관리, 금전관리와 소비, 대중교통 및 공공서비스 이용, 안전과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삶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사람마다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범위는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가사도움, 돌봄 등의 다양한 지원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어떻게 니즈를 파악하고 지원인을 채용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교육이나 서비스(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이용자 중심 또는 협력방식)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이를 위한 추가적 지원도 필요하다. 지원은 자립생활 이념과 사

회적모델에 기초하고 동료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자립생활의 기술은 시설이나 그 부근에 지어진 소위 사회복귀시설(half-way house)이라 불리는 곳에서 익힌다. 이곳은 임시거주를 위한 곳이지만 거주기한이 무한정으로 길어지는 ‘작은 시설’로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형태의 지원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귀시설(half-way house)는 단기적인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자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옹호: 자기옹호는 시설돌봄에서 지역사회 삶으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요소다. 자기옹호는 장애인, 노인, 등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돌봄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 역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지해야 하며, 그들의 목소리와 경험은 정책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존중되고 알려지고 활용되어야 한다. 자기옹호를 위해서는 결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많은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에서 배제되어왔기 때문에 의사결정능력과 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가족, 장애인, 보호자(carers), 친구의 지원을 받아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옹호를 위한 적극적인 코칭이나 법적 권리 등에 대한 관련 정보제공, 회의 운영 및 참여, 공개 스피치 등 자기옹호를 위한 실질적인 기술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옹호 모임에 참여하는 것 역시 중요할 수 있다.“

“동료지원: 보호아동, 장애인, 노인 조직은 지역사회로의 전환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들의 역량에 따라 자립생활 기술훈련이나 개별상담을 제공할 수 있고 동료지원그룹에 참여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동료지원(peer support)이란 “특정 경험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유사한 상황에 놓인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생활운동의 선구자들은 동료지원을 자립생활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로 정의하였으며, 동료지원은 어린이와 노인에게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동료지원의 가치는 관련자들의 평등한 관계와 고유한 경험에 있다. 때문에 자기옹호에 대해 한 정신건강 관련 조직은 다음 사항을 강조한다. “우리는 정신건강과 다른 공공시스템과 관련해서 관료주의적 미로를 향해한 적이 있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롤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

○ 뉴질랜드 대형 거주시설 ‘킴벌리 센터’ 탈시설 과정(1993~2006)

1993년, 정부의 적극적 주도로 ‘탈시설 계획’ 수립

1994~1999년, 시설 거주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탈시설 필요성 공유에 대한 간담회 50차례 진행

2001년, 킴벌리 센터 폐쇄 결정

2006년, 마지막 거주인 탈시설

2008년, 킴벌리 센터 폐쇄 1년 후 거주인, 가족, 센터 직원 조사 보고서 발간

토 론 3

발달장애인도 서울에 살고 있어요.

김수정 Ⅱ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장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더믹으로 전 세계인 모두가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겐 더욱 엄혹한 시기이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시기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14명이나 죽었다. 죽은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었고 암이나 기타 중증 질환이 있는 이들도 아니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코로나 시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해마다 스스로 죽은 이들을 위로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겠노라 각오를 다지는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발달장애는 표준화된 지표를 갖지 않아 섬세한 개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이고 발달장애인 뿐 아니라 부모나 가족 또한 장애로 인한 삶의 제약이 심하여 다른 장애 영역에 비하여 훨씬 전문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며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역시 같이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데이터조차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니 개별 필요 서비스가 제공될 리 만무하다. 그나마 장애인 자립 생활의 기본서비스라 할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발달장애인의 경우 평균 100시간 내외로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공적인 지원이 거의 없이 오롯이 가족이 그 부담을 지다보니 돌봄에 지치고 심리적인 고립과 부정적 정서가 커질 수밖에 없고, 발달장애인의 주양육자가 일반인들에 비해 우울지수가 4배나 높다는 조사도 있듯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비극이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거기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나마 이용하던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의 낮 서비스조차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잠재적 우울감에 코로나19로 인한 고립이 죽음을 재촉하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이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2016년 1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2020년 제1기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발표하여 실행하였고, 서울시 복지재단은 성과 보고서를 통해 특히 가족지원과 권익향상, 전달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통해 사람중심의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삶을 촉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에서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로 4점 만

점에 3.91점인 부모 사후 돌봄이 가장 높게 꼽혔고 성인발달장애인 낮 활동과 평생교육 지원, 중고령 발달장애인 및 부모 돌봄, 주거 생활 지원 순으로 높은 욕구를 기대한다고 나왔다.

그러나 1기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의 평가에서 부족한 점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며 많은 서비스와 기관이 있지만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와 기관을 찾지 못한다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정책은 정책의 수와 제공기관은 많으나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춰 설계되지 않은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로 실제 발달장애인의 대표적 어려움인 의사소통을 지원하지 못하여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고 주로 돌봄의 형태로 운영되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체감하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없애고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보다는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서비스 확대해 집중되어 있음도 분명 지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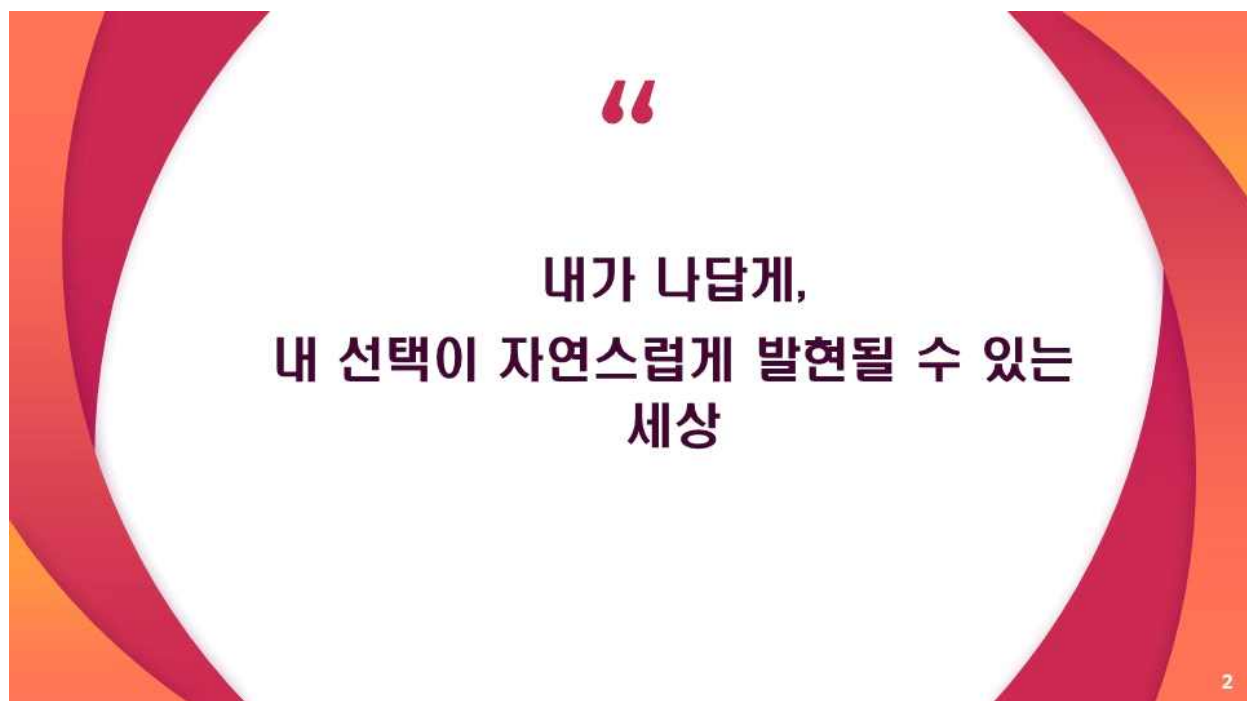
2016년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42일간의 서울시투쟁을 통해 서울시와 7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안을 끌어내었다.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자산형성 사업의 일환인 이룸통장 사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5개구 설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5개구 설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과 피플퍼스트센터 설치가 그때 합의되어 실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합의안 중 발달장애 전담부서 설치만이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5년간 합의한 정책과 사업을 나름 성실히 실행했다고 평가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은 쪼박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어내고 있다. 정책의 꼭지는 많아도 공급 자체가 부족하여 대상자는 소수이며 서비스간 연결되지 못하여 생긴 공백은 여전히 가족이 메꾸거나 방치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 서비스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많아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고 복잡하여 사각지대가 많다.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최중증 도전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전문가 개입과 이용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그들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해야 한다. 지난해 광주의 발달장애인 모자 사망사건 후 만들어진 광주형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센터와 같이 도전행동의 전환과 주거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거나 피폐한 삶을 유지하며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분명한 책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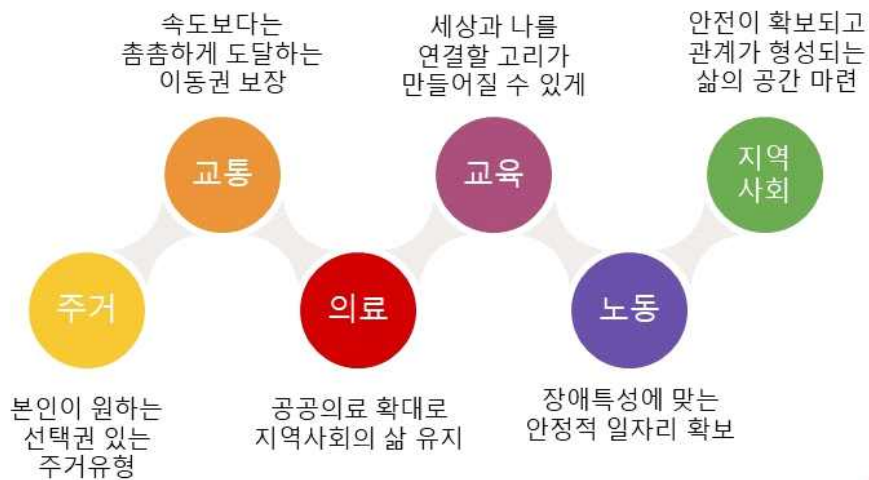
발달장애인도 서울에 살고 있고 발달장애인도 서울 시민이다. 시민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발달장애인이라 하여 부정당하거나 소외될 수 없다. 오히려 발달장애인이라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 서울시책임제'를 선언하고 정책을 실행하여 발달장애인이 서울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서울시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토론 4

권수정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분야



3

시민 전체가 다층적인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

“사람들이 자신만을 소중히 여겼다면
종으로서의 인류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 엘리자베스 시걸, 사회적 공감



4

토 론 5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 계획 및 방향성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토 론 6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복지정책 계획 및 방향성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첨 부 자 료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추진계획안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제2차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안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년 장애인 정책 요구안 개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단위사업별 세부추진 계획(안)

2018. 6.

복 지 본 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세부사업 목록

〈5개 핵심과제, 11개 정책과제 27개 세부사업〉

핵심 과제	정책 과제	코 드	세 부 사 업 명	추진부서(담당)	비 고
1. 일상생활 지원 강화					
	1-1. 활동지원				
		1-1-1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24시간, 중고령, 탈시설 등)	장애인자립지원과(차영선)	
		1-1-2	성인 최중증장애인(발달장애·뇌병변 장애인 등)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이유섭)	
		1-1-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정책과(윤성일)	검토완료
		1-1-4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류명조)	검토완료
	1-2. 건강관리 지원				
		1-2-1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건강증진과(김은성)	검토완료
		1-2-2	장애인 운동 컨설팅 전담요원 양성 및 배치	체육정책과(이선구)	
	1-3. 돌봄서비스 지원				
		1-3-1	독거 중증장애인 방문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이유섭)	
2.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2-1. 접근성 보장				
		2-1-1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박기용)	
		2-1-2	뇌병변·발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장애인복지정책과(윤성일)	검토완료
		2-1-3	청년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김이종)	
	2-2. 주거모델 개발 및 주거 지원				
		2-2-1	장애인을 위한 신 주거 모델 개발·지원	장애인복지정책과(조경일)	
		2-2-2	지원주택(주거 + 서비스 지원) 운영 확대	장애인복지정책과(조경일)	
		2-2-3	저소득 중증장애인 임대·전세 주택 제공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주택정책과(최혁수) (김수현)	
		2-2-4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최혁수)	
3. 경제적 지원 강화					
	3-1. 생활안정 지원				
		3-1-1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장애인복지정책과(김희영)	검토완료
		3-1-2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희망복지지원과(채소영)	검토완료
		3-1-3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장애인자립지원과(문순희)	
	3-2. 고용지원				
		3-2-1	공공기관 연계 맞춤형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복지정책과(박진수)	
		3-2-2	중증장애인 현장 중심 직업훈련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정책과(오주석)	
4. 문화·체육·여가 생활과 가족지원					
	4-1. 문화·체육·여가생활 지원				
		4-1-1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관광정책과(박재형, 김소연)	검토완료
		4-1-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체육 활동	체육정책과(이선구)	
		4-1-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의 전당 ‘어울림플라자’ 건립	장애인복지정책과(김희영)	검토완료
	4-2. 가족지원				
		4-2-1	장애인 돌봄 가족 휴식제 확대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이유섭)	
		4-2-2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전 자치구 확대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김남현)	
5. 자립생활 전달체계 구축·강화					
	5-1. 자립생활 전달체계 구축				
		5-1-1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지원 확대 및 강화	장애인자립지원과(김경식)	
	5-2. 자립관련 기관·인력에 대한 지원				
		5-2-1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지원 및 실습기관 지정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차영선)	
		5-2-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운영자 및 인력 역량 강화	장애인자립지원과(김경식)	
		5-2-3	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다각화	장애인복지정책과(오주석)	



과제1 일상생활 지원 강화



1-1 활동지원

1-2 건강관리 지원

1-3 돌봄서비스 지원

1-1-1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24시간, 중고령, 탈시설 등)

□ 실태 및 현황

-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원부족 및 지원체계 변화에 따라 최중증 독거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최중증 장애인의 돌봄공백 방지 및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6세~65세미만의 1~3급 중증장애인(소득기준 없음)
- 지원급여 :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 추가급여(생활환경 고려) + 시비추가급여
- 지원내용 :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월 30시간~741시간(국비 48~391, 시비 30~350)
- 급여종류 :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18년 예산 : 221,112백만원(국비 50%, 시비 35.6%, 구비 14.4%) *구비 30,971백만원 별도

□ 개선방안

- 고령장애인(만65세 이상)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신규)
 - 지원대상 : 시비추가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자로 활동지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자 및 등급 외 판정 활동지원 수급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시비추가 월 50시간
-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 100명 → 200명
 - 지원대상 : 최중증 독거장애인 200명(100명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월 350시간 시비 추가지원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 퇴소 후 1년 → 2년**

- 지원대상 : 서울시 지원시설 퇴소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시비추가 월 30시간(퇴소 후 2년까지)

구 분	현 행	개 선
시비추가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 추가 지원	○ 활동지원 급여 중단	○ 월50시간 시비추가 급여 지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 100명 지원	○ 200명 지원(100명 확대)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퇴소 후 1년 30시간 지원	○ 퇴소 후 2년 30시간 지원 (1년 확대)

□ **연차별 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명, 백만원)

지원내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대 상 자	120	395	460	525	590
	소요예산	2,014	5,069	5,733	6,399	6,935
시비추가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 추가 지원	대 상 자	-	170	210	250	300
	소요예산	-	1,098	1,356	1,614	1,937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 상 자	100	200	220	240	250
	소요예산	1,937	3,874	4,261	4,649	4,843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 상 자	20	25	30	35	40
	소요예산	77	97	116	136	155

※ 시간당 단가는 10,760원으로 '18년 단가 적용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안찬울 ☎ 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 김지형 ☎ 7472 담당 : 차영선 ☎ 7473

1-1-2

성인 최중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낮돌봄, 발달·뇌병변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실태 및 현황

- 성인 발달장애인 중 약37%(7,623명)은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 대부분 도전적 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
- 성인 최중증을 위한 낮활동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나 10개 복지관(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참여대상자 제한(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선 요구
 - 성인 시각발달장애인, 청각발달장애인, 뇌성마비 장애인의 낮활동 참여의 제한으로 중증장애인간 사각지대 발생
- 우리시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운영 중이나 발달장애인 증가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 요구로 평생교육센터 추가 설치 필요
 - '15년(29,474명) → '17년(31,055명), 2년간 1,581명 증가(5.4%↑)
 - 발달장애인 55.8%가 전문교육과정 운영 건의 (보건복지부 '14년 실태조사 결과)
-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51.6%) 대비 이용률(5.3%)은 현저히 낮은 상황
 - 현재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은 6개, 77명 이용 중
-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 특화 이용시설 전무
 - 장애인 조기노화로 인한 기능퇴화 · 건강 악화 등에 적합한 특화서비스 필요
 - 현 이용시설에서는 타 이용자들에 비해 차별적 서비스가 요구되는 중고령 장애인들을 회피하는 경향

◆ 50세 이상 중고령 장애인 현황

- 장애인 고령화 증가 추이 : 62.7%(2005년) → 74%(2014년)
- 중고령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률 : 전체 이용자중 11.6%

※ 중고령 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미이용 인원 및 사유 조사 필요(추후 진행 예정)

□ 사업내용

① 성인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확대

- 시범사업 조기 확대로 장애인복지관 기본사업으로 안착('19.1~)
 - 운영기관 : 10개소 → 20개소
 - 이용인수 : 40명 → 80명(개소당 4명)
 - 종사자수 : 20명 → 40명(개소당 2명)
 - 사 업 비 : 2,000백만원(공간개선비 300백만원, 인건비 1,500백만원 운영비 200백만원)
- 유형별 중증 및 중복장애인 낮활동 지원대상 확대('20년)
 - 이용대상 : 시각, 청각, 뇌성마비장애인중 40세 이상 조기 노령진입 장애인
 - 운영기관 : 시각발달(2), 청각발달(2), 뇌성마비(1) 단종복지관 대상
 - 이용인수 : 20명(개소당 4명)

②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권역별 설치

- 설 치 수 : 4개(서울시 권역별 설치)
- 소요예산 : 약 132억원(33억원 × 4개소)
 - ※ 산출근거 : 33억원(서대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500㎡) 건립비)
- 기 능 : 성인 뇌병변 장애인 대상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제공

③ '21년 까지 전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 10개소('18) → 15개소('19) → 20개소('20) → 25개소('21)
-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시행, 자치구 관심도 제고 및 참여 극대화

구 분	현 행	개 선
평생 교육 센터 등 확대	① 발달장애인 낮활동 서비스: 10개소 40명 ②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0개소	① 낮활동 서비스 확대 : 20개소, 80명 시각·청각·뇌성마비 등 확대 ②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권역별 설치 ③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전자치구 설치

4 중고령 장애인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시설 확대

-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기존시설) :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중고령 장애인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건강유지 및 노인성 질환 관리 기능 강화, 운동·영양·식생활프로그램 등)하여 서비스 연속성 도모
- 특화 이용시설 운영 지원(신규설치) : 중고령 장애인 대상 특화 주간보호시설 운영
 - 중고령 장애인 전용 이용시설 신설로 지역 내 맞춤형 지원체계 다양화

구 분	현 행	개 선
지원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특화 이용시설 없음	① 중고령기 적합 프로그램 운영 ② 중고령기 특화 주간보호시설 운영

※ 필요인력 산출 및 수요에 따라 시범사업 후 점차 확대 필요

○ '19년 예산 산출내역

- 특화 프로그램 운영(기존시설) : 운영비 30백만원 추가 지원
- 특화 주간보호시설 확대(신규시설) : 3인 인건비(120백만원) + 운영비 30백만원

※ 주간보호시설 지원 기준 : 3인 인건비 + 운영비 10백만원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인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확대	40명	80명	100명	120명	140명
뇌병변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의견수렴	타당성용역	1개소 신축	1개소 신축 1개소 운영	1개소 신축 2개소 운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0개소	15개소	20개소	25개소	운영고도화
중고령 장애인					
특화시설 (신규수)	-	1	2(1)	3(1)	4(1)
특화프로그램 (신규수)	-	1	2(1)	3(1)	4(1)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6,370	10,030	15,785	18,140	18,820
낮활동 시범사업 확대	870	2,000	2,125	2,550	2,550
뇌병변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100	3,300	3,800	4,3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500	7,750	10,000	11,250	11,250
중고령장애인 특화시설 및 프로그램	-	180	360	540	720

1-1-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 실태 및 현황

- 장애인 보조기기 임대기간은 현재 기본 1년이며,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총 1년 6월 임대가능)하므로 대여기간은 적정함
- 대부분 즉시 임대 가능하나 일부 수요가 많은 기기의 경우 장기간 대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평균 대기시간은 약 2개월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기기 추가 구입 등이 필요함**
- 동북센터 기준 평균 **연평균 임대료는 약 82천원(월 7천원)** 정도로 기기마다 차이는 있으나 현격히 높은 수준의 임대료라고 볼 수 없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는 임대료 미부과**

◆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개요

- 근 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 내 용 : 보조기기 임대, 제작 및 수리 등의 서비스 지원
- 사 업 비 : 1,263백만원
- 운영현황(4개소 위탁 운영)

구분	위탁법인	위치(면적)	인력	위탁기간(회차)
동남센터	(재)푸르메	강동구 고덕로 201 (313.2㎡)	5명(보조공학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18. 2.28.~ '21. 2.27.(5차)
동북센터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299.2㎡)	5명(보조공학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언어재활사 1명)	'17. 1. 1.~ '19.12.31.(2차)
서남센터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 (253.3㎡)	5명(보조공학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17. 1. 1.~ '19.12.31.(2차)
서북센터	(재)푸르메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254.1㎡)	3명(의지보조기기사 1명, 보조공학사 2명)	'18. 5. 1.~ '21. 4.30.(1차)

□ 개선방안

- 장애인 보조기기 임대 대기시간 감축을 위한 보조기기 추가 구입
 - 보조기기 구입비 증액(센터당 '18년 50,000천원 ⇒ '19년 100,000천원)

구 분	현 행	개 선
보조기기 추가구입	센터당 연간 50,000천원 지원	센터당 연간 100,000천원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조기기센터 이용인원	20,000	22,000	23,000	24,000	24,00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2022년
2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작 성 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이동수 ☎ 2133-7440 장애인권익보장팀장 : 고보영 ☎ 7360 담당 : 윤성일 ☎ 7362

1-1-4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

□ 실태 및 현황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은 ‘출산 및 양육 관련 정보 제공’(25.2%),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23.4%), 가사 및 양육지원서비스’(13.7%)로 나타나고 있음

※ 2017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서울시복지재단)

- '03년부터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양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인 ‘여성장애인 홈헬퍼서비스’를 실시하여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 단, 지적·발달·정신장애인 경우 만 12세 미만까지 예외 인정)
-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 지원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 산전·산후 건강검진 등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

구 분	파견시간(일/최대)	파견시간(월/최대)
출산예정일(2달 전)	4	30
신생아 양육(100일 이내)	6	120
만 9세 미만 아동 양육	4	70

□ 확대방안

- 신생아 양육(100일 이내)기간 서비스 시간 확대 지원 (월/120시간⇒160시간)
 -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산후조리 및 신생아 양육 시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여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부담 경감
- 홈헬퍼의 처우 개선(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에 의거 1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지원

〈주휴수당 조건〉

-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해 주는 유급휴일을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하며(제55조) 반드시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어느 특정일에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임 ※ 주휴수당은 1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해당

구 분	현 행	개 선
지 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양육(100일 이내) 서비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시간(일/최대) 6시간 ○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가산수당 미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휴수당 미지급, 휴일근무 제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양육(100일 이내)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시간(일/최대) 8시간 ○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가산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당 종사자에 주휴수당 및 긴급서비스(휴일) 경우 가산수당 지급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자	150	170	190	210	21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2022년
1,136,682	1,709,528	1,912,396	2,121,141	2,336,358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안찬울 ☎ 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 김지형 ☎ 7472 담당 : 류명조 ☎ 7476

1-2-1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하고 장애인 건강증진 및 질환을 예방하여 건강격차를 해소하고자함

☐ 실태 및 필요성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이 높고, 이차 장애나 질환을 경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요구됨
 - 만성질환 유병률: 장애인 77.2%, 비장애인 34.9%('14년 기준)
 -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로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2%로 경증장애인 71.2% 및 전체 인구 평균 수검률 72.6%에 비해 월등히 낮음
- 이동 등의 문제로 검진기관 접근이 어려운 재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지원 사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 이동검진은 검진장비 설치 등의 제약으로 검진에 한계 있음
- 중증 장애인건강검진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7.12.30.시행)제7조, 제20조에 의해 장애인건강검진기관 및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18년 7월 운영 예정 임
 - '18년 7월 서울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라매 병원 운영
 - '18년 8월 서울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

☐ 추진계획

- 서울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
 - 운 영 일 : 2018. 7 ~
 - 운영기관 : 서울의료원

- 내 용

-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 시행
-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서울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 운 영 일 : 2018. 7 ~
- 운영기관 : 보라매 병원
- 내 용

-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	2	3	4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	2	2	2	2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73	1,132	1,072	1,072	1,072

※ 예산 편성내역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작 성 자 건강증진 과장 : 박경옥 ☎2133-7560 건강환경지원팀장 : 이병철 ☎7585 담당 : 김은성 ☎7586

1-2-2

장애인 운동컨설팅 전담요원 양성 및 배치

□ 실태(현황) 및 필요성

- 2016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17.7%로 2015년 대비 1.9% 상승했으나 비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70.5%에 비하여 크게 저조
- 운동을 하고 싶으나 혼자서 운동이 불가능하거나 운동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 등으로 체육활동에 참여를 못 함.
- 장애인체육 전담인력 및 전담 프로그램 부족
 - － 각동 주민자치센터나 구민체육센터 등에 비장애인 대상 전담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으며 체육 프로그램 또한 다수 개설되어 있는 상황

□ 주요내용

- 구민체육센터,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전담 지도자 상시 배치를 위한 구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확충
 - － 장애인 전문 체육 프로그램 운영 또는 비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보조
- 개소당 최소 1개 이상 장애인 체육 전문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재가 장애인 상담(방문) 전담 상담사 운영
 - － 재가 장애인 직접 찾아 맞춤형 운동 종목, 시설 추천 및 해당 시설 연계
 - － 상담 후 1년간 운동 참여 현황 정기 점검 실시(운동 실시 여부, 건강 상태 등)

□ 추진계획

- 각 자치구 보건소 장애인 체육 전담 지도자 배치
 -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보건소 전담 지도자 채용

-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지도자 매칭 사업 실시
 - －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사업 담당자 배치
 -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일정 자격 보유자 및 일정 경력 이상인 자
 상담사 채용 후 각 자치구 보건소 또는 자치구장애인체육회 파견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치구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담당자	-	14	11	-	-
보건소 전담지도자	-	25	-	25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1,200	452	750	-

※ 산출내역 : 담당 및 지도자 인건비, 사업 운영비 등

-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담당 인건비 : 32,000천원(1인당)
- 지도자 인건비 : 26,000천원(1인당)

작 성 자 체육정책과장 : 장영민 ☎2133-2675 체육복지팀장 : 이정훈 ☎2696 담당 : 이선구 ☎2697

1-3-1

독거 중증장애인 방문지원서비스 확대

세부계획 작성 중

과제2 경제적자립 강화

2-1 접근성 보장

2-2 주거모델 개발 및 주거 지원

2-1-1 장애인 바우처 택시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

□ 실태 및 현황

- 시각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그동안 요금인하, 바우처택시 운영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이동수요 충족에는 못 미치고 있어 긴 대기시간(평균 44분)으로 이용불편
 - ※ 장애인콜택시의 경우도 동일한 불편상황
- 예산 효율성이 높은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을 장애인 전유형으로 확대하여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콜택시 이용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확대로 수요를 분산하여 대기시간 단축

□ 개선방안

-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장애유형 확대(시각·신장 → 전 장애유형)
 - 이용확대 대상 : 장애인콜택시 등록 비휠체어 중증장애인(12,086명)

이용 인원	지체		뇌병변		호흡기	자폐		정신		지적		신장		기타	
	1급	2급	1급	2급	1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2,086	736	2,518	1,555	2,106	84	1,087	804	2	4	2,241	49	12	680	54	154

※ 서울시 장애인등록인원 적용시 최대 이용인원 28,022명 예상

- 바우처택시 지원대상 확대방안(안)
 - 센터차량(복지콜, 장콜)은 각각 지원목적에 맞게 이용범위를 제한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은 바우처택시 이용토록 유도

〈센터차량〉

기 준		변 경 (제한)	
장애인 복지콜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복지콜	장애인 콜택시
· 시각장애 1~3급 · 신장장애 1~2급	· 지체 및 뇌병변장애 1~2급 ·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	시각 중증장애인	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

〈바우처택시〉

기 존	확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 1~3급 · 신장장애 1~2급 	<p>비활체어 중증장애인 (장애 전 유형)</p> <p>※ 장애 3급의 경우, 향후 등급제 폐지에 따른 국가정책 방향에 따라 포함 여부 결정</p>

☐ 연차별 계획 및 소요예산

○ 연차별 지원대상 확대 및 추가 소요예산('19년부터 시행)

구 분	'18년	'19년 (시범운영)	'20년	'21년	'22년
추진목표(이용대상, 명)	-	2,400	7,200*	9,600	12,000
소요예산(백만원)	-	2,000	6,000	8,000	10,000
단계별 이용확대(비율)	-	20%	60%	80%	100%

※ 소요예산 산출 : 콜 1건당 지원금 10천원 × 1인당 연이용건수 96건 × 실이용인원(등록인원의 60%) × 12개월
(향후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여부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 2020년 장콜 임차택시 폐지로 해당인원 2,600명 추가 산정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과장 : 안찬율 ☎2133-7470 장애인재가복지팀장 : 경지인 ☎7480 담당 : 박기용 ☎7454

2-1-2 뇌병변·발달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강화

□ 실태 및 현황

- 뇌병변 장애인 등은 **구어를 통한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본생활에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
 - 관련 단체 등에서는 뇌병변·발달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권리에 대한 인식 및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으며,
 - 이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의 설치를 지속 요구**

〈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인 등 현황('17. 9.) 〉

구 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체	391,604	33,066	52,680	65,384	57,762	82,013	100,102
뇌병변	42,348	9,729	8,518	9,007	5,236	4,975	4,883
지적	25,574	6,790	8,278	10,506	-	0	0
자폐성	5,341	2,346	2,125	870	0	0	0
언어	3,252	19	308	1,253	1,670	1	1
계	76,515	18,884	19,229	21,636	6,906	4,976	4,884
비율	19.5%	57.1%	36.3%	33.0%	11.9%	6.0%	4.9%

※ 전체 1급 장애인 중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 등이 57.1%를 차지

□ 사업내용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 의사소통 상담 및 진단, 수단의 개발·보급·교육, 사후관리 등
 -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의사소통 권리증진대회,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대상**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교육** 등 실시
- ※ 현재 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전문기관(복지재단) 연구 용역 중

'18. 7월
▶ 의사소통권리증진 센터 및 프로그램(안) 마련

'18.11월
▶ 의사소통권리증진 계획수립 및 예산반영

□ 연차별 계획 및 소요예산

- '19년 예산 산출내역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센터 이용자수		5,400명	5,400명	5,400명	5,400명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460	562	664	766

2-1-3 청년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 실태 및 현황

- 청년 청각장애인은 자기계발을 위해 취업 강좌 등을 희망하여도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강좌 수강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누리지 못함

◆ 서울시 청년 청각장애인 현황

- 인원: 970명('17. 12.말 기준)

※ 전체 청각장애인 45,244명 중 2%

- 현재, 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는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일부 영상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어·문자자막을 제작 중이나, 사설학원 강좌 등 청년 청각장애인이 희망하는 강의의 자막 제작은 지원하지 못함
 - 청각장애인 개인이 '문자통역'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시간 7만원 비용 소요

□ 자기계발 문자통역 사업 추진 내용

- 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 기존 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에 문자통역사(속기사) 인력 배치 후 서비스 시행
 - 지원 조건: 서울시 거주 학령기 이후 청년(20~29세) 청각장애인이 자기계발 강좌를 수강하면서 문자통역을 희망할 경우
 - ※ 대학교 편의제공 의무 사항인 대학 강의 제외(장애인차별금지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 지원 방법: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에 속기사 배치를 통한 방문 문자통역
 - ※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현황

구 분	운영법인	개관	직원수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사)한국농아인협회	'15.7.	12
소리샘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사북)서울삼성원	'18.3.1.	5
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사북)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18.3.1.	3

○ 시범사업 실시결과를 반영하여 실수요자 파악, 서비스 대상 및 이용시간 등 운영기준 정립

- 시범사업은 문자통역 희망자 1인당 주 2회(오전·오후 단위), 최대 2개월간 문자통역사(속기사) 지원
 - 사업규모 : 속기사 3인, 청각장애인 연 90명 지원(속기사 1인당 연 30명 지원)
- 후보 핵심공약의 소요예산은 480,000천원(문자통역사 연간 20명 x 24,000천원)이나, 1~2년 시범사업을 통해 실수요 확인 후 점진적 확대 필요
 - ※ 핵심공약 중 “진술지원인”(법원, 경찰서 등에서의 의사소통지원)은 현재 수어 통역센터를 통해 추진 중임

□ 연차별 계획 및 소요예산

○ ‘19년 예산 산출내역: 118,500천원

- 인건비: 105,000천원(35,000천원 x 3명)
- 자산취득: 13,500천원(속기장비: 4,500천원 x 3)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 상 자 (문자통역사)	-	3	10	15	2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22	403	605	836

※ 인건비 연간 상승률 5% 가정, 자산취득비용은 신규 통역사 1인당 4,500천원 발생

2-2-1 장애인을 위한 신주거모델 개발 및 지원 확대

□ 실태 및 현황

- 최소한의 주거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시설 대안으로 지역 사회 내 거주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 마련 필요
 - 개인별 선호도 및 서비스 요구에 맞는 주거생활 지원 체계 부재
- 장애인을 위한 영구적 주거공간 지원 물량이 적어 탈시설 정책 추진 한계
 - 장애인을 위한 주택 물량 확보, 특화서비스가 결합된 주택 개발 필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적절한 지원 없이 독립거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 독립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하여 상담, 정보 제공, 주거생활 교육, 안전 관리, 위생관리,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
- (추진방법) 신 주거모델 개발,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 중증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및 그 외 장애특성에 따른 보호주택 등 시범운영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지원(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현 행	신 규
◎ 시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거주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중증, 영유아 ▶ 단기거주시설 ▶ 공동생활가정 ◎ 비시설형(자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임대주택 ▶ 일반주택(전세임대) 	◎ 시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비시설형(자가형):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택 : 주택+주거서비스 지원 (現 시범사업 진행 중) ▶ 다양한 공동주택 형태 : 주택+특성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인 공동거주주택, 의료주택, 보호주택 등

□ 연차별 계획 및 소요예산

- '19년 예산 산출내역 : 운영기관 지원(인건비, 사업비 등)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 주거모형 주택수(신규수)	준비	1	시범운영	시범운영	2(1)
지원주택수 (신규수)	5	10(5)	15(5)	20(5)	25(5)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00	320	420	520	740

2-2-2

지원주택(주거+서비스 지원) 운영 확대

자립역량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독립생활 지원 거주정책 마련 및 확대

☐ 실태 및 필요성

- 자립생활 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내 거주시설 대안의 거주 정책 부재
 - 개인별 특성, 선호도, 서비스 요구에 맞는 주거생활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장애인을 위한 영구적 주거공간 지원 물량이 적어 독립적인 주거생활 지원에 한계
 -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주택 물량 확보 및 특화서비스가 결합된 주택 개발 필요

☐ 주요내용

- 적절한 지원 없이 독립거주가 어려운 성인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독립 생활 지원을 위한 지원주택 운영
 - 지원주택 운영 확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확대(운영비 및 서비스 제공인력 추가 지원)

※ 주거서비스 : 독립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하여 상담, 정보 제공, 주거 생활 교육, 안전관리, 위생관리,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

☐ 추진계획

- (지원주택) 지원주택 운영 연차별 확대 - 사업 홍보, 수요자 발굴 주력
 - 매년 지원주택 5호씩 신규 지원, 수요가 많을 시 확대 방안 모색
 -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2018.4.)에 따라 공공주택 확보 주력
-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주택 증가 시 권역별 설치 필요
 -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마련을 통해 확대 여부 결정, 시범사업(17.7~19.12.) 결과 반영 예정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주택수(신규/누계)	5/15	10/25	20/45	40/85	80/165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2022년
574	774	1,174	1,974	3,574

※ 예산 편성내역 : 서비스제공기관 인건비, 운영비 등

작 성 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이동수 ☎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 이민경 ☎7469 담당 : 조경일 ☎7456

2-2-3 저소득 중증장애인 임대 및 전세주택 지원금액 확대

□ 실태 및 필요성

- 서울시가 입주자격을 별도로 정하고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영구임대 주택의 최근 2년간 장애인 입주비율은 전체 입주자중 60%
 - 영구임대주택 장애인 입주비율(중증장애) : '16년 56%(28%), '17년 64%(49%)
-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12개 유형의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중인 공동생활 가정 231호중 장애인에게 39.4%(91세대)공급중
- 전세주택 임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낮은 입주율
 - 임대인의 월세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세물량 감소와 전세권 설정 기피
 - 전세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현 지원액만으로는 주택을 구하기 쉽지 않음
 - ※ '17년 전세주택가격 서울지역 2.03% 상승(16년 대비)
- 무료임차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발생
 - 자립할 능력이 없어 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세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주요내용

-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지속적 공급 확대
 - 향후 5년간 6,500호 임대주택 공급
- 전세주택 지원금 가구당 최대 150백만원 상향 조정
 - 전세주택가격 상승 고려하여 지원금을 현행보다 20~30백만원 인상
 - ※ '17년 95~100백만원 → '18년 100~120백만원 → '19년 120~150백만원
- 자립생활주택 거주 등 무료임차 장애인에게 신청자격 확대
 - 월세 형편이 되지 않는 무료임차 중증장애인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전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장애등급, 소득기준 적용)

□ 추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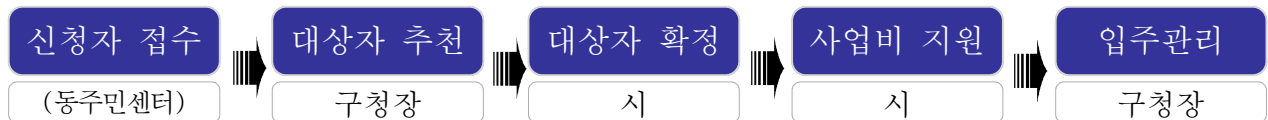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영구임대주택 : 장애인은 입주자격 1순위, 1순위 내에서도 장애인은 별도 가점을 최고 15점 배정(1~3급 최고 15점, 4~6급 최고 8점)
- 매입임대주택 : 장애인은 입주자격 1순위, 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최고 100%한도이나 장애인은 소득 기준 150%까지도 입주 가능
- 전세주택 : 세대주가 장애1급 또는 2급인 가구(중복장애 포함)이며,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으로 전세주택 신청 시 월세거주 가구

○ 지원기준 : 1가구당 전세보증금 최대 150백만원 지원

- 임대주택 : 입주자격 1순위 부여하며 장애등급에 따라 가점 부여
 - 전세주택 : 1가구당 전세보증금 최대 150백만원 지원
- ※ 2인 이하 가구 : 100백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 : 150백만원 이하

○ 전세지원 절차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호/가구)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장애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 공급호수	1,300	1,300	1,300	1,300	1,300
전세보증금 증액(연도별/누계)	21/158	25/162	30/167	35/172	40/177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2022년
장애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 공급	-	-	-	-	-
전세보증금 증액(연도별/누계)	2,300	2,500	2,700	2,900	3,100

작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과장:안찬율 ☎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김석기 ☎7460 담당: 최혁수 ☎7462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2133-7010 임대문화팀장:최연호 ☎7030담당: 김수현 ☎7033				

2-2-4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확대

□ 실태 및 현황

-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화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하여 일상생활과 활동에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주거편의 지원
- 장애인 가구의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수요 점진적 증대

◆ 추진경위

-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주택공사 ‘도시지역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공동 추진
- 2012년 1월 장애인복지정책과 사업으로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

◆ 그간 추진실적

- 연도별 지원 현황 : 948가구('17. 12월말 기준)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선정대상가구	100	153	50	103	110	115	111	106	100

- '18년 예산 : 700백만원(시비 100%)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가구 150여 가구(가구당 4~6백만원 소요)
 - 수요를 반영하여 연차별 점진적 지원가구 증대
- (지원금액) '18년 700백만원 ⇒ '22년 1,600백만원
- (사업기간) 연도별 단위 사업(1월 ~ 12월)
- (대상기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가구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이며 자가주택 또는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해당 장애인의 1년 거주를 허락한 임대주택
- (선정기준) 중증(1~2급)정도 높은순, 소득수준 낮은순, 개조 시급성 우선고려

- (추진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 (전문적 경험과 실적 보유)
- (추진체계)

서울시	자치구	협약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수립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홍보 • 사업비지원 • 대상가구 조사·통보(협약기관) • 사업시행 중간 점검(수시) • 사업종료 후 정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대상가구 우선순위 결정 • 공사시공에 따른 도로점용 등의 협조 • 수혜자 만족도, 불편사항등 의견수렴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계획 수립 • 시공업체 선정 • 시공대상 및 순위 확정 • 공사시행 기술자문·관리·감독 •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 추진성과 평가·보고

- (지원금액) '18년 700백만원 ⇒ '22년 1,600백만원

구분	현행	개선
지원대상	150가구	220가구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가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가구	150	170	190	200	22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2022년
700	800	800	800	800

※ '19년부터 중복사업 방지 및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민간협력사업(한국교통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으로 재원 100백만원 확보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과장:안찬율 ☎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김석기 ☎7460 담당:최혁수 ☎7462

과제3

경제적 지원 강화

3-1 생활안정 지원

3-2 고용지원

3-1-1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형성 지원

□ 실태 및 필요성

- 중증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 월평균 근로소득은 39만원으로 노인(58만원)보다 훨씬 적은 수입
 - 낮은 소득에도 장애로 인한 지출은 더 높아(월 164천원 수준) 사회적 양극화 심화
 -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장애인실태조사) : 158천원('08) - 160천원('11) - 164천원('14)
- 특히 중증장애청년의 경우 성인기 전환준비와 자립에 따른 씨앗자금 필요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청년은 자립씨앗자금 부족
 - 매칭 적립을 통해 장기적 자산축적을 위한 태도 배양 지원

□ 주요내용

- 근로가 어려운 중증 장애 청년 대상 5년 간 162억원 매칭 지원
 - 저축목적 : 미래 자산형성, 자립생활사용 등 ~~기타 불가피한 용도 등~~
 - 저축기간/모집인원 : 36개월/매년 1,000가구
 - 신청자격 : 15세~34세 중증장애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적용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의 중증장애인

- 장애 1.2등급 및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 등급 3급 이상

- 사업방식 : 참여자가 월 10~20만원 적립, 서울시 15만원 매칭지원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20만원
시 비 지 원 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 립 금	25만원	30만원	35만원
적 립 금 (3 년)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1,260만원+이자

☐ 추진계획

- 서울시 중증 청년장애인을 위한 “이룸통장” 출시 : '18. 7월~
 - 청년 중증장애인 1,000명 선발 지원 ※ 현재 선발 심사 중
- 쏘 중증 청년장애인 1인 1통장 지원 추진 : '19년~
 - '18년 성과 분석 후 매년 1,000명씩 확대, 쏘 중증장애인 매칭 지원
 - 지원 수 : 1,000명('18)-2,000명('19)-3,000명('20)-3,000명('21)
- 중증 청년장애인 미래 대비를 위하여 만기금 신탁재산 관리 : '21년~
 - 부모 사후 중증 장애 자녀의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기금 신탁화
 - 신탁재산 관리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모집 인원	1,000	2,000	3,000	3,000	3,00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780	3,000	4,800	4,800	4,800

작 성 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이동수 ☎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 : 박원근 ☎7442 담당 : 권자은 ☎7445

3-1-2

서울형 기초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실태 및 필요성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함
- '13.7월 시행이후 9차례 걸친 기준완화로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기준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 존재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현황

- 지원대상 : 5,175가구 6,062명('17. 12월말 기준) / '18년 예산 : 13,730백만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1/2수준) 및 해산(600천원)·장제비(750천원) 지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43% 이하, 재산 135백만원 및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구 분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단위 : 천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	4,519	5,694	6,530	7,366	8,202
재산기준	500,000				

□ 주요내용

- 정부가 발표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서울형 기초 보장 부양의무자도 단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
- 서울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기 반영('18. 1월)
 -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소득하위70%)에 노인·중증장애인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조사) 제외
 - ※ 서울시 기초보장제도는 이미 2017년부터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특례인정'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장대상범위를 확대하였음
 - ⇒ 부모집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중증장애가 있는 가족구성원 및 결혼(사별 또는 이혼한 자녀 포함)한 자녀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 부모(조부모,외조부모 포함)는 별도가구 인정.

□ 추진계획

- 모든 수급자에서 부양의무자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도 부양의무자 기준 (조사) 제외 예정('19)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구('18.서울연구원 진행) 결과에 따라 정책개선 반영('19)

□ 연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6,400	-	-	-	-
	13,730				

※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연구결과 등에 따라 대상인원 및 예산 추계 변동 예정

작 성 자 희망복지지원과장 :배형우 ☎2133-7370 생 활보장팀장 :유규용 ☎7387 담당 : 채소영 ☎7388

3-1-3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 실태 및 필요성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교통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및 보호·간병인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243천원이 소요됨
- 반면, 현재 정부 지원 부가급여는 최대 8만원에서 최소 2만원이 지급되어 추가비용이 8.2%~ 33% 수준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미충족.
-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부가급여 확대를 위해 시비추가 장애수당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서울형 장애아동수당을 월 3만원 추가 지원함에도 최고 45.3% 수준에 불과하여 지원금액 인상이 필요함

☐ 시비추가 장애수당 지원 현황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및 서울시 장애수당

추가급여 종류	지원 대상	지원금액	비 고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월3만원	
서울시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월3만원	

☐ 개선방안

- 소득 수준이 낮은 중증장애인에 대해 시비추가수당을 연차적으로 인상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및 서울시 장애수당 인상 : 5만원(3만원→ 5만원)

2018년 월 3만원	⇒	2019년 월 4만원	⇒	2020년 월 4만원	⇒	2021년 월 5만원	⇒	2022년 월 5만원
----------------	---	----------------	---	----------------	---	----------------	---	----------------

☐ 연차별 계획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 상 자	29,000명	29,000명	29,000명	29,000명	29,000명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0,440	13,920	13,920	17,400	17,400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과장 :안찬울 ☎2133-7470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7450 담당 : 문순희 ☎7452

3-2-1 공공기관 연계 맞춤형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 실태 및 현황

- 15세 이상 장애인 생산가능 인구 중 중증장애인의 고용률(19.5%)이 경증장애인(44.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최근 정체
- 전체 장애인구의 90%를 차지하는 5대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시각 장애에서 평균을 크게 상회, 발달장애는 현저히 저조

5대 장애유형별 고용률



※ 출처: 2017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내용(신규)

① 발달장애인 공공도서관 사서 보조

- 발달장애인이 공공도서관(서울시립, 구립 등) 사서 보조로 근무
 - 인력배치 : 50명(19년) → 100명(20년) → 200명(21년) → 300명(22년)
- 반납도서 정리, 신간도서 등 자료정리, 훼손된 자료 수리, 도서관 청소 등
- 장애인 교육훈련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및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도서관 등) 과 연계하여 장애인일자리 수요조사 실시

◆ 공공도서관(25개 자치구) 운영 현황 (2018.3)

- 1,302개소 운영 (공공도서관 184, 작은 도서관 978, 전문도서관 140)

2 발달장애인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 및 파견

- 장애의 한계를 극복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강사 훈련 실시
 - 강사훈련 : 50명(19년) → 100명(20년) → 150명(21년) → 200명(22년)
- 발달장애인이 장애극복 사례, 연주, 공연 등 체험을 통한 경험 전달
- 교육기관 및 관공서 방문, 장애 인식 및 생명 존중 등 이해교육 실시
- 활동기관 및 활동보조인(매니저 지원)
 - 지원인력 : 발달장애인 10명당 1명
 - 활동보조인 역할 : 장애인식 개선 강사 업무보조
 - ▶ 장애인식 개선 강사 자질함양을 위한 직무 교육훈련 제공
 -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관리 운영(교육홍보, 교육처 발굴, 강의보조 등)
 - ▶ 교육과 관련된 행정업무 처리(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스케줄관리)

<국내 민간기관 수행 사례>

- 프로그램 명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가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육
- 교육실적

년도	신청학교	수행학교	교육 참여학생	파견강사	수행기관
2017년	100개소	47개소 (705학급)	17,625명	13명	사복)하트 하트재단
2018년	120개소	75개소(1,125학급)	28,125명	13명	

- 강사육성 기관 : 전국18개소 (서울 6개소, 경기도, 인천, 경남 등)
- 강사육성 인원 : 220명(서울 약 60명) - 재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 서울시 학교 현황 (2017.4)

- 12개 지역교육청 2,239개교, 42,753학급(유치 880, 초 603, 중 384, 고 320, 기타 52개교) * 기타 학교 52개교 중 특수학교는 29개교 784학급 4,412명

3 발달장애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클린서비스 실시

- 발달장애인이 공공자전거 “따릉이” 살균·소독 등 세척업무 수행
 - 인력배치 : 50명(19년) → 100명(20년) → 200명(21년) → 300명(22년)
-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독협의체와 연계하여 사업 수행
 - 공공자전거 관리부서인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참여자 직무제공을 통한 공공성 확보
 - 소독협의체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자전거 살균·소독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
- 공공자전거의 긍정적 이미지 창출 및 위생안전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위생적이고 깨끗한 공공자전거 이용 인식 확산으로 시민 자전거 이용 증대

<자전거 대여소 및 거치대 현황>

기준 : 2018. 3. 31

구역	관할구	대여소(개)	거치대(개)
계	25개구	1,163	14,712
강북 관리소	14개구	599	7,440
강남 관리소	11개구	564	7,272

<자전거 보유 및 운영 현황>

기준 : 2018. 3. 31

보유수(대)	운영중(대)				보관소(대)
	현장배치	센터보관	분실	파손	
16,000	8,831	2,386	13	18	4,752

※ 예비자전거 1,688대 별도

③ 중증장애인 인턴제 확대

○ 대상인원 확대 : 25명 → 36명

- '18년 25명, '19년 27명, '20년 30명, '21년 33명, '22년 36명

○ 사업주체 : IL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단체, 기업 등

○ 사업내용 : 맞춤형 훈련(사회적 기술학습, 행정업무 등)과 취업경험의 기회 제공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기관 선정
-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기관 인턴 접수·면접 및 서울시 적격심사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달 장애인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	50명	100명	150명	200명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	50명	100명	200명	300명
	강사활동 매니저	-	5명	10명	15명	20명
	강사 양성기관 (프로그램 및 운영)	-	5개소	10개소	15개소	20개소
	따릉이 세척보조	-	50명	100명	200명	300명
인턴제	인턴 인원 확대	25명	27명	30명	33명	36명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달 장애인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및 파견, 사서보조 등	-	4,688	9,838	18,787	28,600
인턴제	인턴 인원 확대	484	556	657	768	890

작 성 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이동수 ☎2133-7400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 노명옥 ☎7464 담당 : 박진수 ☎7465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안찬울 ☎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 김지형 ☎7472 담당 : 진하정 ☎7475

3-2-2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 확대

□ 실태 및 현황

- 전체 등록 장애인은 감소하나 사회적 돌봄이 더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증가
 - 전체장애인 : 407,528명('12년) → 391,154명('17년), 16,374명 감소(5년간 4.2%↓)
 - 발달장애인 : 27,099명('12년) → 30,611명('17년), 3,512명 증가(5년간 11.5%↑)
- 발달장애인 특성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나 대부분 단순노무직 수준
탈 시설, 지역사회 참여 등 현재 노동환경에 걸맞은 사업 발굴 필요
- 발달장애인 취업률(17.6%)은 신체장애인 취업률(45.9%)에 비해 저조
 - ※ 2017 서울시 발달장애인 마스터플랜 표본조사 결과 - 고용률 17.6%

◆ 성동구, 2017년 '先배치 後훈련'시스템 도입 시범사업 시행

- 지역사회 민간일자리 연결을 통한 안정적 취업 (132명중 77명 취업, 58.3%)
- 민간 사업체 배치 훈련생 취업 현황

업무명	계	청소	상품포장,진열, 라벨부착 등	음료 제조 및 포장 등	파지정리 및 빈병수거	기타 (약초재배)
훈련/취업인원(명)	132/77	55/12	46/43	14/12	11/10	6/0

◆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취업중심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증장애인 취업률 56.21%

구 분	지체	지적	정신	자폐성
취업률 (%)	55.8	42.7	43.4	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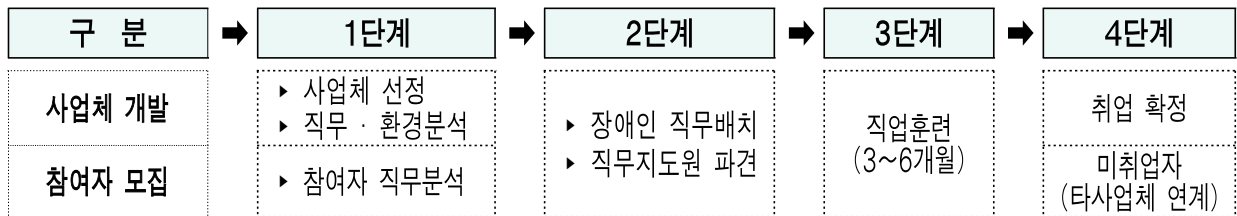
□ 정책목표

- 커리어플러스센터 사업성과 분석('18년) 후 확대설치 검토
 - '18년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목표 : 발달장애인 200명 훈련, 150명 취업
 - '19년 : 잡코치 양성 및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앙센터 설치
 - '19년~'20년 : 2개소(강남·중앙센터) → '21~'22년(권역별 4개소)

□ 사업내용

- 취업에 매우 취약한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취업률 제고 및 자립생활 향상 도모
 - 발달장애인 개별 직업능력을 사전 파악, 평가분석 통해 사업체 현장훈련 매칭

- 직업생활 준비 및 직업유지를 위한 ‘직장 적응훈련 프로그램’ 별도 진행
- 사업체 현장중심의 ‘先배치 後훈련’ 직업훈련 지원(잡코치 파견)
- 취업 후 사후지원으로 잡코치의 직무지원서비스, 자조모임, 이직 지원 등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 구직 발달장애인 인력풀 구축 및 맞춤형 고용 프로그램 개발

- 커리어플러스 각 센터별 발달장애인 500명 인력풀 구축
-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고용지원 서비스 매뉴얼 개발
-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고용 모델 제시 (~2020)

○ 맞춤형 지원고용 잡코치(직무지도원) 양성 및 파견

- 잡코치 양성 과정을 개설(1~2년)하여 2022년까지 200명의 잡코치 양성
- 10년이상 실무경험 있는 전문 잡코치를 양성, 직무분석 및 슈퍼바이저제공

○ 지역사회와의 상생체계 구축을 통한 발달장애인 취업전략 마련 필요

- 지역내 소상공 기업체 일자리 발굴 등 지역사회와 연계방안 모색
- 중증장애인은 보호고용 보다 지역기반 사업체 등 협력을 통한 일반고용이 확대되어 장기적으로 지역 내에서 수용될 수 있는 자립능력 배양
-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 (훈련프로그램 개발, 훈련생 상호파견 등)

◆ 서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서울시교육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

-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 고용 연계형 직업훈련 실시
- 직업체험실습실 14개 운영(우체국, 도서관 사서, 의류분류, 간병, 도시농업 체험실 등)

□ 연차별 계획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취업실적(명)	150	200	300	400	500
직무지도원(명)	50	70	100	150	200
센터 수(개소)	1	2	3	4	4
소요예산(백만원)	500	1,000	1,500	2,000	2,200

과제4

문화·체육·여가 생활과 가족지원

4-1 문화·체육·여가 생활 지원

4-2 가족지원

4-1-1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 실태 및 필요성

- 장애인구 증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市 차원의 정책지원 및 환경적 여건은 아직 미흡한 실정
 - － 市 장애인구는 39만명이며,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30만명에 달하지만
여행시 도움받을 관광정보가 부족하며, 정보접근성 측면에서도 불편 상존
- 장애인 등 관광약자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의 무장애 관광 인프라 및 서비스의 체계적인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정책목표 :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관광도시, 서울 조성

◆ 정책방향

- － 2018년을 무장애 서울관광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정책활성화 기반 구축
- － 물리적 환경개선, 관광정보접근성 강화,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체계적 추진

- 무장애 관광정책의 실행기구이자 컨트롤타워로써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운영
 - － 관광약자 대상, 무장애 관광정보 및 편의서비스를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제공
- 시설접근성 제고, 특별 여행프로그램 운영, 무장애 여행코스 지속 개발
 - － 관광명소 접근성 개선 및 특장버스 운영으로 관광약자의 여행활동 참여 촉진

□ 추진계획

- 무장애 관광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설치·운영
 - － 주요기능 : 무장애 관광 DB 구축, 원스톱 정보제공, 특장차량 및 보조기기 대여 등
 - － 운영형태 : 전문성을 갖춘 단체 지원('18년)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위탁('19년)
 - － 관광약자의 방문빈도가 높은 지역 내에 일정공간을 확보하여 접근성 제고

-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특장버스 도입·운영**(’22년까지 10대 도입)
 - － 市에서 리프트가 설치된 특장버스를 구입·운영, 관광약자의 여행활동에 제공
 - － 주요명소를 순환하는 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 단체여행 시 대여
-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연간 50개소)
 - － 대상지역 :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특구 등에 위치한 관광시설(음식점, 편의점 등)
 - － 지원내용 :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시설설치 및 개보수,接客서비스 개선 등
 - ※ 무장애 관광 지역 우수사례로 홍보하여 민간 업소의 자발적 시설개선 유도
-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 여행활동 지원**(’22년 2,000명 규모)
 - － 지원대상 : 장애인 (시각, 청각, 지체, 발달), 저소득층 (어르신, 청소년) 등
 - － 지원내용 : 여행활동 기회가 적은 참가자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 ※ 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수혜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 **무장애 서울여행지 발굴을 통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확충**(연간 50개 내외)
 - － 지체·시각·청각 장애인 및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맞춤형 코스 개발
 - ※ 관광약자로 구성된 「무장애 관광 모니터링단」 구성,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 연차별 계획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차별 계획	관광약자 실태조사 무장애 관광센터 운영	무장애 관광센터 운영	무장애 관광센터 운영	무장애 관광센터 운영	무장애 관광센터 운영
	특장버스 도입(1대)	특장버스 도입(1대)	특장버스 도입(1대)	특장버스 도입(1대)	특장버스 도입(1대)
	시설 접근성 개선(50개소)	시설 접근성 개선(50개소)	시설 접근성 개선(50개소)	시설 접근성 개선(50개소)	시설 접근성 개선(50개소)
	여행지원(1,200명)	여행지원(2,000명)	여행지원(2,500명)	여행지원(3,000명)	여행지원(4,000명)
	관광콘텐츠 개발(50개)	관광콘텐츠 개발(50개)	관광콘텐츠 개발(50개)	관광콘텐츠 개발(50개)	관광콘텐츠 개발(50개)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800	1,750	2,000	2,100	2,400

작 성 자 관광정책과장 : 김재용 ☎2133-2805 관광정책팀장 : 조성호 ☎2807 담당 : 박재형, 김소연 ☎2824

4-1-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 활동

□ 실태 및 필요성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체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재
- 공공체육시설(3,500여개)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20% 미만으로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한계

□ 추진계획

-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스포츠클럽 육성
 - 가족, 친구, 동료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동호회 활동 지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및 종목별 대회 개최
- 어울림 종목 생활체육지도자 역량 강화 및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 실내체육관, 실외 체육시설 등 기존시설 무장애 리모델링 : 연간 100억원
 - 단차제거, 화장실, 복도 휠체어 회전반경 확보, 스위치 등 편의시설 위치 조정
- 서울시 소유부지 활용을 통한 어울림 종합체육시설 건립 추진
 -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재정비시 장애인 등 체육소외계층을 위한 유니버설 스포츠센터 건립 등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 연차별 계획 및 소요예산

- '19년 예산 산출내역 : 11,050백만원
 - 스포츠클럽 지원 50백만원, 무장애리모델링 100억원, 어울림 종합체육시설 건립 10억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스포츠클럽 참여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무장애리모델링	13	700	700	700	700
어울림종합체육 시설건립	기본계획수립	투자심사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및 준공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3,800	11,050	15,100	20,200	20,300

4-1-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의 전당 '어울림 플라자' 건립

☐ 실태 및 현황

- 장애인의 문화시설 이용 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경험은 낮은 수준
 - 장애인의 문화향유실태는 비장애인의 평균 문화향유 정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TV 시청율: 장애인 96%, 비장애인 46%
 - 장애인들 스스로가 장애인 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정부에 요청한 사항 중 **1위는 장애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 장애인문화예술실태 및 센터 건립타당성조사('12)
- 문화·예술 행사 경험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편의시설 부족임
 - **편의시설부족**(31.1%), **교통(이동)불편**(23.1%), 고비용(20.7%) 등

☐ 유니버설 디자인에 입각한 문화 예술 창작·향유·교육 서비스제공

※ 어울림 플라자 건립(안)

- ▶ 규 모 : 지하2층, 지상6,8층(대지면적 6,683㎡, 연면적 18,098㎡)
- ▶ 예 산 : 47,887백만원(시비 26,363, 민간자본 21,524)
- ▶ 주요시설 : 장애인 연수·교육시설, 공연장, 주민편의시설 등

- 전문 문화 아트센터 건립으로 장애인에게 문화 창작·향유 기회 제공
 - 장애예술인이 창작하고 발표하고 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 공간 제공
 - 공연장(626㎡), 전시공간(560㎡), 문화교실(550㎡) 등
- 국내 유일의 국제적인 장애인 전용 교육·연수기관 운영
 - 공항, 지하철 등과 셔틀버스 연결 이동편의 극대화, 국내외 장애인 대상 연수공간 제공
 - 연수시설(1,120㎡), 도서열람실(550㎡), 세미나실(302㎡), 다목적홀(770㎡), 등
-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커뮤니티 개발공간 운영(1,152㎡)
 -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강습 프로그램, 헬스·그룹PT제공 등

☐ 연차별 계획 및 소요예산

- '19년 예산 산출내역 : 설계용역 및 건축비 13,181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구 분	국제지명설계공모	설계용역, 착공	신축공사	운영	운영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	13,181	13,182	4,676	4,678

4-2-1 장애인 돌봄가족 휴식제 확대 운영

□ 실태 및 현황

- 장애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온전한 쉼을 위한 장애인 ‘돌봄 가족 휴식제’ 도입(’14)으로 그 간 장애인 가족의 만족도 및 호응이 높았음
- 추천제(장애인 부모회 등)와 신청제를 병행하여 정보 부족 등 소외가구 참여 독려

➔ 도입이후 참여자 증가 및 향후 소외가구 참여 독려를 위한 사업 확대 필요

◆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현황

- 지원대상 : 장애인 가족(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주 돌봄자 2인이내)
- 지원실적 : 2,619명(휴가 1,657명, 돌봄 962명, ’17년)
- 지원내용(’18년 인상) : 휴가비(여행경비 지원) + 장애인 돌봄비

지원내용	당일	1박2일	2박3일
휴가비(1인기준)	125천원	250천원	375천원
돌봄비(1인)	70천원	140천원	210천원

※ ’14~’17년 단가 : 휴가비(1인/일 100천원), 돌봄비(1인/일 50천원), 14년 시범운영

□ 정책목표(기대효과)

- 돌봄가족 휴식제 지원대상 : 복지관별 年 36명 → 54명까지 확대
- 돌봄가족 휴식제 지원금액
 - ▶ 1인 최대 돌봄비(7만원)·휴가비(37.5만원)→ 돌봄비(8만원)·휴가비(42만원) 인상
- 장애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온전한 쉼 제공

□ 개선방안

- 장애인돌봄 휴가제 지원대상 연차적 확대
 - 인원 확대 : 복지관별 36명(’18) → 39명(’19) → 45명(’20) → 48명(’21)→ 54명(’22)
- 장애인돌봄 휴가제 지원금액 인상
 - 돌봄지원 : 1인당 24만원까지 인상(21만원 → 24만원)
 - 휴가지원 : 1인당 42만원까지 인상(37.5만원 → 42만원)
 - ※ 단가 인상 : 현 단가 적용(’19~’20년), 인상분 적용(’21~’22년)

○ 지원내용

- 돌봄비 : 최대 3일 이내 돌봄비 지원(단기보호시설 입소비, 장애인 돌봄캠프비, 개인 등)
- 휴가비 : 최대 3일 이내 여행비 및 체험비 지원
- 사업수행 : 장애인복지관 50개소 ※'22년까지 신규 개관 3개소 추가 포함

구 분	현 행('18년)	개 선('22년)
지 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年 돌봄 12명, 휴가24명 지원 · 돌봄(최대 210천원), 휴가비(최대 375천원) · 단체여행, 소규모 여행, 개별여행 등 · 신청제(80%)+추천제(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年 돌봄 18명, 휴가 36명 지원 확대 · 돌봄(최대 240천원), 휴가비(최대 420천원) ·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개별 및 소규모 여행 확대 · 신청제(70%)+추천제(30%)

□ 연차별 계획 및 소요예산

○ '19년 사업비 산출

- 사업물량: 50개소(복지관) × 12,480천원 = 648백만원
- 총사업비: 624백만원(휴가비: 487.5백만원 / 돌봄비: 136.5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자	1,728명	1,950명	2,250명	2,400명	2,700명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576	624	720	864	972

4-2-2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 실태(현황) 및 필요성

- 과도한 돌봄 부담을 진 중증장애인 가족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각 가족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지원 전담 기관의 설치 및 확대 필요
- '17년 8월부터 광역센터(1개소)와 기초센터(5개소) 운영 중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 서울(광역)센터 1개소, 기초센터 5개소 운영중(광진·동대문·은평·마포·강서구)
 - 상반기 5개 운영 자치구(성동·도봉·서대문·서초·강남구) 선정 완료, 센터 개소 예정
 - 하반기 3개 운영 자치구 추가 선정 예정
- ※ 기초센터 1개소당 150백만원(시비 75백만원, 구비 75백만원) 지원
- 지원내용 : 동료상담, 사례관리, 긴급돌봄, 가족역량 강화 등
- '18년 예산 : 1,300백만원 ※광역 300, 기초 1,000(구비 각 75백만원 별도)

□ 주요내용

- 장애 당사자 위주의 서비스를 넘어 장애 당사자의 돌봄 부담을 진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 기관 확대 지속 추진
- 현재 운영중인 센터 소재지에 따른 지역 편중성 해소와 근거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추진
 - 2020년 전 자치구 기초센터 25개소, 광역센터 1개소 설치·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광역 센터	1	1	1	1	
기초 센터	5	13(8)	21(8)	25(4)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800	1,300	1,900	2,200	구비 각 75 별도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과장:안찬울 ☎2133-7470 장애인재가복지팀장:경자인 ☎7450 담당: 김남현 ☎7453

과제5

자립생활 전달체계 구축·강화

5-1 자립생활 전달체계 구축

5-2 자립관련 기관·인력에 대한 지원

5-1-1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지원 확대 및 강화

□ 실태 및 필요성

- 지역사회에서 당사자 주위에 따라 자립생활을 가장 핵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미지원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가 발생함
 - 관내 63개의 IL센터 중 45개소 보조금 지원, 18개소 미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소규모 이므로 센터 이용 장애인이 적음
 - 43개 지원센터 7,338명(지원대상 50,648명의 14.5%)
 - ※ 지원대상 산출기준 : '17.12말 현재 장애인연금지원대상자(장애 1,2급, 중복장애)
 -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추가(잠재적) 수요 현황> - 2017.12말 기준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센터 및 이용자(수급자)		추가(잠재적) 수요
	IL센터	이용자(수급자)	
50,648명	43개소	7,338명(14.5%)	43,310명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조직 및 기능 전환의 필요성 제기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자립생활 센터는 4개팀에 최소 9명 인력 구성을 제안함(한국장애인개발원, 2016년, 서해정)

□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미지원 센터 보조금 지원
 - 미지원 센터 8개소 보조금 지원('19년~'22년)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종사인력 확충 및 일자리 확대
 - 지원센터 인력 147명 확충('19년~'21년)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 현행 서울시생활임금 기준 인건비 권고안을 지역사회재활시설(이용시설) 수준으로 향상

☐ 추진계획

○ 미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보조금 지원

- 미지원 IL센터 8개소 보조금 지원 : 매년 2개소('19년 ~ '22년)
- 소요예산 : 2,600백만원(130백만원*2개소*1년~4년)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종사인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

- IL센터 종사인력 147명 확충 : 센터당 매년 1명('19년 ~ '21년)
- 소요예산 : 14,175백만원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14,175	-	1,575	3,150	4,725	4,725	1명당 35백만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 IL센터 종사자 임금 '22년 까지 지역사회재활시설(이용시설) 수준으로 향상
 - ▶ 임금수준 향상 : 82%('18년) 수준 → 98%('22년) 수준
- 소요예산('19년 ~ '22년) : 4,866백만원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4,866	715	960	1,114	1,292	1,500	'18년 인건비 6,004백만원 기준 임금상승율 16% 적용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미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신규/누계)	2/45	2/47	2/49	2/51	2/53
지원센터 당 종사인력 확대(신규/누계)	0/4	1/5	1/6	1/7	0/7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	82	86	90	94	98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1,641		2,795	4,784	6,797	7,265
미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2,600	200	260	520	780	1,040
지원센터 당 종사인력 확대	14,175	-	1,575	3,150	4,725	4,725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4,866	715	960	1,114	1,292	1,500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과장 :안찬율 ☎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담당 : 김지형 ☎7472 담당 : 김경식 ☎7474

5-2-1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지원 및 실습기관 지정 운영

1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지원

□ 실태 및 현황

- 활동지원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활동보조 제공기관에서 형식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이용 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음.
- 활동지원기관은 보수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무한 실정임.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보조인에게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급여 제공기준·절차·방법의 이해, 응급처치요령 등 연2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사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고
- 일정기간(2년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이력이 없던 자가 활동지원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4시간을 이수한 후 활동지원사로 활동 가능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지원 필요

□ 사업내용

○ 활동보조인 보수교육비 지원

- 활동지원사의 역량강화와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보수교육 실시
- 보수교육에 소요되는 실비 지원
 - 교육기관 : 강사료, 운영비
 - 활동보조인 : 교통비 및 식비

구 분	현 행	개 선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지원	① 활동보조제공기관 자체 실시 ② 보수교육비 제공기관 부담	①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 연1회 실시 ② 장애유형별 보수교육비 지원

☐ 추진계획

○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의무화

- 대상인원 : 13,500명
- 교육기관 : 활동보조인교육기관 9개소
- 교육비 지원
 - 교육기관 : 강사료 및 운영비
 - 활동지원사 : 교통비 및 식비(10천원/인)
- 소요예산 : 270백만원
 - 강사료 및 운영비 : 135백만원 (활동지원사 1인당 10천원)
 -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실비 : 135백만원(활동지원사 1인당 10천원)

☐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	13,500명	15,000명	15,000명	15,000명

☐ 연차별 계획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170		270	300	300	300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강사료 및 운영비	585	-	135	150	150	150
활동지원사 보수교육비 실비지원	585	-	135	150	150	150

2 활동지원사 교육 실습기관 지정 운영

□ 실태 및 필요성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은 이론 및 실기교육(40시간)과 현장실습(10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현장실습의 경우 교육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찾아서 진행하고 있음.

◆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운영 현황

- 법적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3
- 교육기관 : 9개소
- 교육과정 : 이론 및 실기교육(40시간), 현장실습(10시간)
- 교육비 : 신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표준교육과정 150천원, 전문교육과정 120천원)
- 교육과정 : 장애(8시간), 활동보조인(15시간), 실천(17시간), 현장실습(10시간)

- 활동지원사 교육비 150천원에 실습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기관은 실습기관에 실습비(교육비의 20%)를 지급하고 있음.

※ 실습기관은 실습비를 해당 이용자 및 선임활동보조인에 대한 복지혜택으로 사용하여야 함.

- 활동지원 현장실습이 형식적이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하여 전문 실습기관 지정 운영 필요

□ 사업내용

- 활동보조인 교육 실습기관 지정

- 전문기관 지정 : 2개소 (강남·강북)
- 지정방법 : 활동보조 제공기관 대상 공개모집
- 지원내용 :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구 분	현 행	개 선
활동보조인 교육 실습전문기관 지정 운영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후 교육생이 현장실습기관을 직접 찾아서 실습 실시	① 활동보조인 교육실습 전문기관 지정 ② 실습전문기관에서 전문현장실습 실시

☐ 추진계획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지정·운영

- 지정기관 : 2개소(연차적으로 확대)
- 주요내용 : 현장실습기관(장애인) 확보, 현장실습 매뉴얼 마련 및 사전교육, 교육생과 현장실습 장애인 매칭, 현장실습 관리 및 일지 등 관련 서류 작성·보관
- 지원내용 : 전담인력 인건비(기관별 2명) 및 운영비
- 소요예산 : 120백만원 (1개소 당 60백만원)
 - 전담인력 인건비 : $(50\text{백만원} \times 4\text{명}) / 2(6\text{개월분}) = 100\text{백만원}$
 - 운영비 : $(20\text{백만원} \times 2\text{개소}) / 2(6\text{개월분}) = 20\text{백만원}$

○ 추진일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19. 1월
- 실습전문교육기관 공개모집 : '19. 4월
- 실습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 '19. 7월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실습기관 지정	-	2	3	4	5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120	360	480	600

작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안찬울 ☎ 2133-7470 자립정책팀장 : 김지형 ☎ 7472 담당 : 차영선 ☎ 7473

5-2-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운영자 및 인력 역량 강화

□ 실태 및 현황

-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지원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IL) 지원센터는 자체적인 교육과 시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교육(4시간)으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임
- 장애인복지관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사 교육(의무 연 8시간)을 통하여 종사자 역량강화를 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 의무교육 현황(2009.1월 시행)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의무교육 시간 : 연8시간
- 1인당 교육비 : 48,000원(본인부담금 24,000원/시비지원 24,000원)
- 교육과정 : 신입, 선임, 중간, CEO, 통합교육 과정 등

- 장애인자립생활(IL) 지원센터 근무 종사자 557명 중 약 350명(63%)이 사회복지사로 복지사협회의 교육 신청을 하면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음

□ 사업내용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 IL센터 종사하는 직원 중 사회복지사는 연 8시간 보수교육 의무 실시
 - 교육비 지원 : 48,000원
- 복지사협회에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특화된 강좌 개설
 - 교육대상 : 장애인복지관, IL센터 등 종사자
 -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강좌 개설 : 6회 운영(1회 8시간)

구 분	현 행	개 선
자립생활 지원 운영자 및 인력 역량강화	① IL센터 : 자체 및 연4시간 ② 장애인복지관 : 보수교육(연8시간)	① 보수교육 8시간 + 특화교육(8시간) ② 특화교육(8시간)

※ 특화된 강좌 개설은 사회복지사협회의 추후 협의 예정

☐ 추진계획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 대상인원 : 350명(연차적으로 확대)
 - 교육주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교육비 지원 : 16,800천원(1인당 48,000원)
 - ※ 센터 운영비 중 교육비 예산편성 사용
- 복지사협회에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특화된 강좌 개설
 - 교육대상 :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업무 담당자
 - 교육주관 : 서울시복지사협회
 - 강좌개설 : '19. 2월부터
 - 강좌횟수 : 6회(1회 8시간)
 - 소요예산 : 28,800천원(480명*60,000원)

☐ 연차별 계획

(단위:명)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410		830	970	1,190	1,420
IL센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1,530	-	350	370	390	420
특화강좌 개설 운영	2,880	-	480	600	800	1,000

☐ 연차별 계획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420	-	75	90	115	140
IL센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74	-	17	18	19	20
특화강좌 개설 운영	346	-	58	72	96	120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과장 :안찬울 ☎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7472 담당: 김정식 ☎7474

5-2-3 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다각화

□ 실태 및 현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지원 부족으로 시설운영 어려움 가중
 - 고용시장 불황과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시설의 고충이 가중되는 가운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력지원도 매우 부족한 상태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현황

-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4개소(미지원시설 5개소)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지원실적 : 16,554백만원(124개소), 종사자 추가지원(30개소), 문화사업지원(4개소)
- '18년 예산 : 34,277백만원(시비 100%)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설 128개소에 지원인력 940명이 필요하나, 종사자 지원인원은 590명으로 충족율 62.7%를 나타냄

▶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력 지원 현황(2017)

종사자 (소요)인원	소요인원											
	계	원장	사무국장	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생산판매관리기사	시설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기타
부족인원	350	2	51	83	4	8	100	79	18	8	24	-27
서울시(지원)	590	123	16	330	4	5	25	43	7	5	5	27
복지부(소요)	940	125	67	413	8	13	125	122	25	13	29	0

※ 기타는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인력 외 서울시 자체기준에 의한 종사자 27명 별도 지원

□ 정책목표(기대효과)

○ 종사자 추가배치 계획(3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부족인원 350명	30명	100명	110명	110명

○ 기대효과

- 종사자 추가지원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 질적서비스가 향상되고, 운영수익금 중 종사자 인건비 지출규모를 장애인근로자 인건비로 전환 가능하여 장애인고용창출, 소득증대 및 자립을 위한 고용안정성 확보 가능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배치

- 종사자 배치기준 충족을 위해 3년간 단계적 지원

지원계획 : '18년(30명)→'19년(100)→'20년(110)→'21년(110)

○ (지원금액) '18년 34,277백만원 ⇒ '22년 48,583백만원

구 분	현 행	개 선
지원대상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지원(624명)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350명 추가지원

○ 중증장애인의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업종 전환 지원

- 초기 투자비용 및 진입장벽이 낮고, 수익은 높아 장애인자립기반 확대에 적합한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고용안정성 확보

▶ 발달장애인택배사업 : '18년 7개소⇒'19년(9)⇒'20년(10)⇒'21년(12)⇒'22년(15)등 업종전환을 지원하여 장애인근로자 임금향상 개선(연간 사업비 100백만원)

▶ 직업재활 문화사업 : '18년 4개소⇒'19년(5)⇒'20년(6)⇒'21년(7)⇒'22년(8)등 문화직종 지원시설을 확충하여 전문직 직업군으로 육성(연간 사업비 300백만원)

▶ 쇼핑백 사업 : '18년 3개소⇒'19년(7)⇒'20년(10)⇒'21년(15)⇒'22년(20)등 임가공 장비지원(기능보강)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력 확보로 규모의 경제 구축

○ 직업재활시설 경영 컨설팅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 시설에서 생산, 사업화가 가능한 저투자 고효율 틈새 아이টে를 신규 개발 및 사업타당성 분석과 설명회를 통한 내실 있는 사업아이টে 확대 유도

▶ 경영컨설팅 지원계획 : '18년 6개소⇒'19년(8)⇒'20년(10)⇒'21년(15)

□ 연차별 계획 및 소요예산

○ '19년 예산 산출내역 : 예산 산출내역 간단히 기재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종사자(명)	624명	730명	846명	962명	968명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34,277	39,655	44,147	48,355	48,583

작 성 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동수 ☎2133-7400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노명옥 ☎7464 담당: 임종수 ☎7468

		시 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274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결재일자	2017. 12.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 조			

I·SEOUL·U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2017. 1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시 민 참 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input type="checkbox"/>	-탈시설TF운영 -탈시설 협치사업
전 문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input type="checkbox"/>	-탈시설TF운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약 자 배 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input type="checkbox"/>	
성 별 분 리 통 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해집단의 남·여 구분 등	<input type="checkbox"/>	■	
일 자 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	
선 거 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input type="checkbox"/>	
안 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input type="checkbox"/>	■	
타 기 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input type="checkbox"/>	-서울복지재단 -거주시설협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input type="checkbox"/>	
정 책 영 문 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input type="checkbox"/>	■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양카시설, 가바년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input type="checkbox"/>	
결 재 문 서 공 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input type="checkbox"/>	■	
지 속 가 능 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input type="checkbox"/>	

목 차

I. 거주시설 현황	1
II.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2
III. 1차 탈시설화 추진성과 및 문제점	4
IV. 이용자 현황 및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	8
V. 2차 탈시설화 방향 및 비전	12
1. 사업개요	
2. 기본방향	
3.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VI.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14
VII. 연차별 목표 및 소요예산	41
VIII. 행정사항	42

《 추진계획 요약 》

□ **대 상** :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 2,565명 ※ 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 **1차('13~'17) 추진성과**

- 전국 최초 탈시설 정책 추진으로 정부차원의 탈시설 정책 추진 견인
- 탈시설 목표인원 600명중 604명 탈시설(계획대비 100.6%)

□ **추진방향** : 단계별 목표에 따른 점진적 추진으로 정책 혼란 최소화

- 1차 도입기('13~'17) → 2차 발전기('18~'22) → 3차 확대기('23~)

- 자립체험공간 확보
- 탈시설 인식 조성

- 탈시설 가속화
- 거주시설 변환 시범

- 지역 거주정책 다양화
- 거주시설 변환 확대

□ **추진목표** : 탈시설 300명, 거주시설 변환 시범 2개소

□ **주요사업** : 4대 정책과제 및 25개 세부과제

I	탈시설 추진강화 및 전환지원체계 개선	서울시 탈시설 권리선언 등 8개
II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발달장애인 신거주모형 개발 등 3개
III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변환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등 7개
IV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탈시설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7개

□ **소요예산** : 22,102백만원 (5년)

(단위 : 백만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2,102	2,252	3,269	4,520	5,527	6,534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3~'17)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설 이용자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2차 5개년('18~'22) 계획을 수립하여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지속 도모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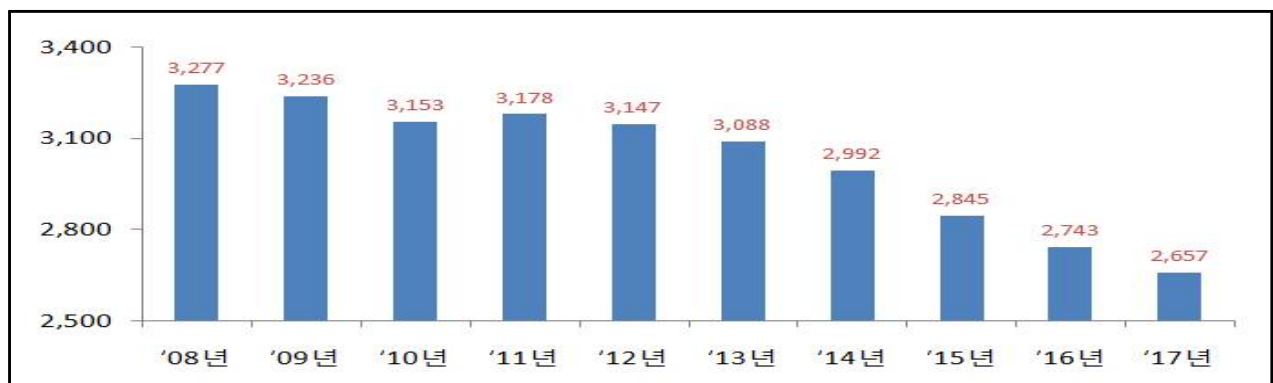
I 거주시설 현황

☐ 유형별 현황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거주인이 1,559명(58.6%)
('17. 9월말 현재)

구 분	계	장애유형별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 영· 유아시설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 적		
시설수(개소)	45	3	3	1	12	24	2
입소 이용자수	2,657	148	119	33	706	1,559	92
인원 종사자수	1,907	106	88	28	458	1,150	77

※ 입소자 2,657명(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391,604명의 0.67%)

☐ 연도별 거주인수 : '12년까지 감소 추세 마비, '13년 탈시설 정책 이후 감소 추세 뚜렷



※ '17년 9월 현재 '12년말 대비 15.6% 감소

☐ 규모별 현황 : 30인 이상 시설 36개(80%), 100인 이상 시설 5개(11%)
('17. 9월말 현재)

구 분	계	20인 이하	30인 이하	31인~ 50인	51인~ 100인	101인~ 150인	151인~ 200인
시설수 (개소)	45	2	7	13	17	3	2

※ 개인운영시설 1개소(14명)

II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와 관련된 각종 제도 준용 필요
 -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중증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등에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인정
 - ※ 2006년 UN 장애인권리협약에 ‘탈시설’ 만장일치로 채택 → 우리나라 2008년 협약 비준
-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지속 발생, 당사자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거주시설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 필요
 -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개별서비스 욕구 증가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19조, 제35조)
 - (제9조)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략)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제19조)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 ①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15조)
 -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 지원하여야 한다.
- 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제126호, '12. 5. 1.)
 -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지원, 지역사회내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 서울시 1차 인권기본계획(시장방침제220호, '13. 8. 4.)
 - 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의 전환, 탈시설 희망자에게 단계별 주거 및 자립생활지원체계 강화

□ 추진경과

-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전환 대시민 발표 : '13. 7.
 - 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13.8.4. 시장방침 제220호, 인권담당관)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수립 : '14. 1.
 - 5년내('13~'17년)거주시설 장애인 600명 탈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보완계획 수립 : '14. 9.
 - 자립생활인프라 대폭 강화(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충),
탈시설 개념 재정립(거주시설 內 Unit 탈시설화 실적에서 제외)
- 발달장애인 탈시설 모델 개발 연구 용역(한국장애인개발원) : '15. 7. ~ 12.
 - 거주시설의 70%가 발달장애인으로 특화된 탈시설 지원체계 필요
-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수립 : '16. 4.
 - 중증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시범 운영, 탈시설 체험프로그램 운영
- 탈시설 종합대책 수립 TF 구성·운영 : '16. 8. ~ '17. 12.
 - 2차 5개년 탈시설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9회 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정책 협치사업 추진 : '17. 1 ~
 - 민·관 협의체 운영, 자립지원 가이드북 제작, 협치 교류회 등
-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추진 : '17. 7. ~ 9.
 - 탈시설 욕구 전수조사, 시설별 특성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근거 마련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발전방안 연구(서울시복지재단) : '17. 11.
 - 탈시설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운영체계 점검

Ⅲ

1차 탈시설화 추진성과 및 문제점

1

1차 탈시설화 추진성과

□ 성과총평

- 전국 최초 선도적 탈시설 정책 추진으로 정부차원의 탈시설 정책 추진 견인 및 타지자체에 사업 확산 등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
- 인지능력이 부족한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지원모델 개발 및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추진을 통해 탈시설 대상 확대, 탈시설 인식 향상, 시설 입소 예방 등 탈시설 추진 분위기 확산
- 반면, 탈시설 목표, 개념, 방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차이가 계속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 논의 필요

□ 탈시설 목표인원 추진성과

- 5년간 탈시설 장애인 : 604명(목표 600명, 계획대비 100.6%)
 - 목표 : 자립생활주택 171, 독립가정 115, 거주시설 체험홈 230, 공동생활가정 84명
 - 실적 : 자립생활주택 151, 독립가정 104, 거주시설 체험홈 286, 공동생활가정 63명

(2017.12.1.현재, 단위:명)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률 (%)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600	67	103	134	145	151	604	67	110	154	160	113	100.6
자립생활체험홈	230	-	38	64	64	64	286	-	43	85	83	75	124.3
자립생활주택	171	43	25	25	36	42	151	43	21	25	42	20	88
공동생활가정	84	4	20	20	20	20	63	4	16	14	20	9	75
개인독립가정	115	20	20	25	25	25	104	20	30	30	15	9	90.4

□ 과제별 추진성과 : 4개 중점과제(10개 세부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추진성과	비 고
자립공간 확충	자립생활 공간제공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신규 확충)	- 거주시설 체험홈 26개소, - 자립생활주택 25개소	2차 탈시설 계획에 지속 포함
탈 시설 개인지원	퇴소자 정착금 지원 (1인 12백만원)	- 98명 1,092백만원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2인 이하 95백만원, 3인이하 100백만원)	- 23명 1,945백만원	
	시설퇴소자 활동지원서비스 시비추가 (1인당 월 추가 30시간, 1년)	- 희망이용자 전원 지원	
탈 시설 생태 조성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 303명 1,066백만원	별도사업 으로 지속추진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인권침해 신고 Hot Line 설치·운영, 거주시설 인권 지킴이단 운영,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교육)	-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전체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교육 :14,325명 214백만원	
	거주시설 이용인 나들이활동 지원 (연 10시간, 90천원)	- 전체 거주시설 이용인 지원 : 14,325명 1,289백만원	
	거주시설 지역사회 연계·개방화 확대 (IL,지역복지관과 거주시설 연계)	- IL 연계사업 :10개 IL센터 &42개 시설 2,500백만원 ※영유아제외 - 장애인복지관 연계사업 : 45개 복지관&43개 시설 1,125백만원	
전환서비스 지원 강화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그룹홈지원센터 지원 강화)	자립생활 동료상담, 자립훈련 실시, 자립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그룹홈 주말운영 인력 지원	추진완료
	발달장애인탈시설 모델개발 연구 용역	용역결과를 반영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21개소 확충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탈시설 목표인원 600명에 대한 근거 부족

- 탈시설 목표 인원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못하여 정책 목표의 신뢰 부족

〈 개선방안 〉

- ◆ 탈시설 욕구조사 시 시설종사자 및 시민단체 등 참여시켜 조사의 신뢰성 향상 도모
- ◆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 분석에 근거한 탈시설 목표 인원 산출

☐ 탈시설 개념 미정립으로 정책 추진 혼란 지속

- 거주시설 체험홈, 공동생활가정의 탈시설 범주 인정과 관련 장애 인권단체에서 탈시설 개념에 대한 이견 제시

〈 개선방안 〉

- ◆ 거주시설 체험홈은 제외, 공동생활가정은 지속 포함(탈시설 TF논의 결과 반영)
 - 탈시설 희망자 중 26.4%가 그룹홈 거주희망 및 다양한 지역 거주 모형이 필요함을 반영

☐ 관주도의 일방적 추진으로 정책 실효성 부족

- 탈시설 당사자, 전문가, 인권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구조가 없어 정책 공감대 형성 부족
- 거주시설별 특성 및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시설 참여 미흡

〈 개선방안 〉

- ◆ 당사자, 전문가, 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협의체 구성 · 운영
- ◆ 장애인거주시설(민간)과 서울시(공공) 간 정책 탈시설 협치 추진

☐ 탈시설 이해 및 체험부족으로 인한 당사자 · 보호자 반대

- 시설이용자 대부분 장기간 시설생활로 자립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두려움이 큼
- 체험홈 미운영시설인 경우 자립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역 거주체험 기회 부족

〈 개선방안 〉

- ◆ 보호자·이용자 대상 탈시설 정보 제공 확대 및 이용인 지역거주 체험 확대

☐ 거주시설의 탈시설 정책 소극적 참여

- 이용인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개별자립지원계획 미실시, 자립 정보제공 등 부실
- 시설폐지 이후 종사자 고용문제 간과, 제도적 유인책 미흡
- 정책변화에 따른 거주시설 정체성 혼란, 위기감 등으로 운영 불안정 상태 지속

〈 개선방안 〉

- ◆ 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유인방안 모색

☐ 시설 입소 대기자 해소 방안 부재

- 지역사회 내 중증장애인 거주 · 이용시설 부족으로 시설입소 희망자 지속 발생
- 거주시설 대안 지역 주거정책 부재로 탈시설 정책(입소제한 등) 민원 지속 야기

〈 개선방안 〉

- ◆ 지역사회 내 중증장애인 이용시설 · 주거서비스 확대, 신 주거모형 개발

☐ 탈시설 이후 지역서비스 연계 부족 및 사후관리 미흡

- 자립생활주택 퇴소 후 완전 자립 장애인에 대한 안전 · 인권문제 보호 방안 부재
- 사후관리 미흡으로 당사자 및 보호자의 탈시설에 대한 두려움 해소 불가

〈 개선방안 〉

- ◆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의무 시행 및 탈시설 장애인 종단 연구 실시

IV 이용자 현황 및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

1 이용자 현황

☐ 장애유형별 현황 : 인지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이 73.5%로 다수

구 분	계	장애유형(단위:명)								비고
		발달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등 기타	
		소계	지적	자폐						
주장애 (시설현원)	2,657	1,661	1,629	32	221	400	297	41	37	중복 장애 631명 (24.7%)
부장애 포함 (중복체크)		1,953 (현원대비 73.5%)	1,915	38	299	553	324	88	71	

☐ 연령별 현황 : 20세 이상 81.4%, 노년기에 접어든 50대 이상 19.7%

구 분	계	6세 미만	7~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연령대(명)	2,657	60	432	533	613	494	261	264
백분율(%)	100	2.2	16.3	20	23	18.6	9.9	10

☐ 입소기간 : 10년 이상 69%, 20년 이상 32.8% 로 장기가주자가 다수

구 분	계	3년 이내	4~9년	10~19년	20~29년	30~39년	40년 이상
인원(명)	2,657	45	729	1,011	660	185	27
백분율(%)	100	1.7	27.4	38	24.9	7	1

☐ 입소경로 : 자진입소는 3.6%에 불과, 대부분 타인결정으로 입소

구 분	계	시설전원	공공기관의회	보호자 위탁	자진입소	기타 등
인원(명)	2,657	1,021	847	651	96	42
백분율(%)	100	38.4	31.9	24.5	3.6	1.6

☐ 기타현황

구 분	계	성별		연고		수급여부	
		남자	여자	유	무	수급	비수급
인원(명)	2,657	1,549	1,108	1,255	1,402	2,100	557
백분율(%)	100	58.3	41.7	47.2	52.8	79	21

2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7. 7. 3. ~ 2017. 9. 30.
- 조사대상 : 42개시설(장애영유아 시설2, 개인운영시설1 제외)
- 조 사 자 : 1차(시설종사자), 2차(시민단체, 자치구 공무원, 협치사업단)
- 조사내용 : 탈시설 욕구, 자립준비 현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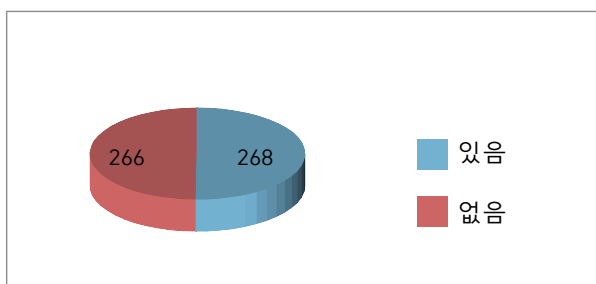
☐ 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 : **534명(21%)**이 탈시설 희망

구 분	계	탈시설 희망 여부			탈시설 미희망 사유						
		있음	없음	무응답	계	몰라서	장애 때문에	변화가 싫어서	보호자 반대	두려움	무응답 등
인원(명)	2,546	534	2,004	8	2,004	754	504	363	177	125	81
백분율 (%)	100	21	78.7	0.3	100	37.7	25.2	18.1	8.8	6.2	4

☐ 탈시설 희망자(534명) 연고 유무 및 수급 여부 : 연고有 50%, 수급 83.4%

- 연고 유무

- 수급자 여부



☐ **탈시설 희망자 자립 후 필요 서비스 : 활동보조 1,471명(34.5%)**

구 분 (중복응답)	계	활동보조	생계지원	주택지원	의료지원	일자리지원	기타 (후견인 등)
인원(명)	4,274	1,471	889	706	410	408	390
백분율(%)	100	34.5	20.8	16.5	9.6	9.5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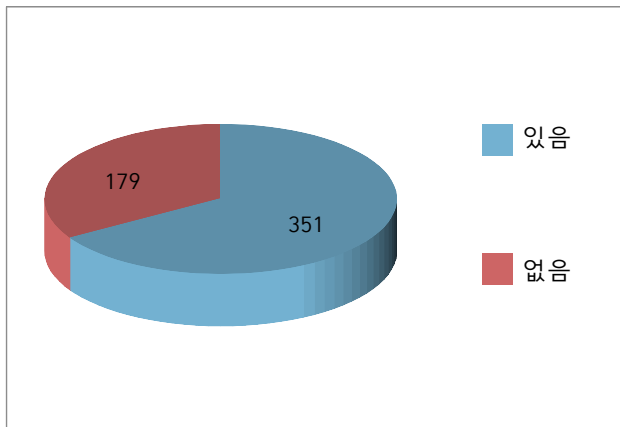
☐ **탈시설 희망자 신변 자원 필요 정도 : 스스로 가능이 337명(63%)**

구 분	계	24시간 지원필요	낮활동중심 모든지원필요	간헐적 지원필요	불완전하지만 스스로 가능	완전가능
인원(명)	534	91	59	47	150	187
백분율(%)	100	17	11	9	28	35

☐ **탈시설 희망자 기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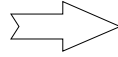
- 자립준비 경험 유무

- 상황이해(의사소통)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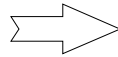
시사점

탈시설 희망자 534명(21%) 중 연고자
있는 경우가 268명(50%)로 다수이나
미희망 2,004명(78.7%) 사유 중 177명
(8.8%)이 보호자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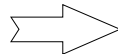
보호자 대상 탈시설
이해 및 자립정보제공
교육 필요

탈시설 희망자 중 242명(45%)이
그룹홈 또는 친구와 함께 거주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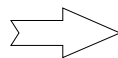
완전 개인독립 뿐만아니라
그룹홈 등 다양한 주거
정책 확대 필요

탈시설 희망자는 활동보조지원,
생계, 주택, 의료,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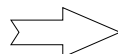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다양한 자립 정착
지원서비스 확대 및
자원 필요

탈시설 희망자 중 의사소통 가능자
331명 (62%), 자립 준비 경험자
351명(65.7%)



의사소통 가능자, 자립
준비 유경험자에게 자립
정보 집중 · 지속 제공

탈시설 미희망 2,004명 사유 중
1,242명 (62%)가 탈시설 이해
및 경험 부족



거주시설 내 탈시설 준비
경험 기회 확대 필요

V

2차 탈시설화 방향 및 비전

1

사업개요

- ☐ 추진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 ☐ 대 상 : 서울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 2,565명
※ 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 ☐ 계획성격 : 중기·연동계획(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 산출목표 : 22년까지 300명 탈시설,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시범운영

2

기본방향

- ☐ 단계별 목표에 따라 점진적 추진으로 탈시설 정책 혼란 최소화
 - 1차 도입기('13 ~ '17) : 자립체험공간 확보 및 탈시설 인식 조성 중심
- 자립생활주택 확충, 탈시설 개인 지원, 탈시설 희망자 상담 및 교육 등
 - **2차 발전기('18 ~ '22) :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 변환 중심**
- 탈시설 지원체계 내실화, 시설입소예방, 거주시설 변환 시범, 지역정착지원 확대 등
 - 3차 확대기('22 ~) : 지역 거주정책 다양화, 거주시설 변환 확대 중심
- ☐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 추진 계획 및 본 계획 추진경과에 따라 필요 시 보완 계획 수립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포함(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정책 용역' 진행('17년 하반기)

〈정책 개념 정의〉

❖ 탈시설화?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당사자의 서비스 욕구 및 장애특성에 맞게 자립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시책

- 민·관 협치, 단계별·수행과제별 추진계획 수립, 제도 보완·마련 등을 통하여 실현

3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 정책비전 및 목표

비전	거주시설 장애인 삶의 질 향상
----	-------------------------

성과 목표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의 변환 도모
----------	------------------------------

성과 지표	① 5년 내 300명 탈시설(연간 60명 내외)
	② 거주시설 2개소 변환 시범 운영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인지능력이 있는 지체·뇌병변장애인 중심) ➡ 전체(장애정도 및 종류 무관) ▶ 탈시설 과정 지원(자립이후 지원 미흡) ➡ 탈시설 환경 마련(지역 거주모형 확대, 사후관리) ▶ 일방(관 주도, 시설 참여 미흡) ➡ 상호(협치 구조 마련, 시설 내 자립준비 강화) ▶ 소극적(신청자에 의존) ➡ 적극적(거주시설운영 개선, 거주시설 변환방안 모색)
----------	---

추진 전략	<div> ✓ 자립 동기 부여, 당사자 중심의 자립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div> <div> ✓ 재가 장애인 시설입소 예방 ✓ 탈시설 장애인 정착 지원 강화 </div> <div> ✓ 정책 논의 협력 체계 구축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방안 마련 </div>
----------	--

정책과제 : 4개 (세부과제 : 25개)	1. 탈시설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체계 개선(8개) 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3개)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변환(7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7개)
----------------------------------	---

VI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총괄표

정책 과제	세 부 과 제 (핵심7, 신규14)	추진 기관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지원 체계 개선 (8개 사업)	①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신규	서울시
	② 탈시설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신규 핵심	서울시
	③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복지재단
	④ 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선 핵심	서울시 · 복지재단
	가.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나.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다. 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신규	
	⑤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복지재단
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3개 사업)	⑥ 지역별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신규	서울시·복지재단
	①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신규 핵심	서울시
	②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서울시
	③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확대	서울시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 (7개 사업)	① 거주시설의 자립지원 계획수립 의무화	거주시설
	가.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신규 핵심	
	나. 시설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신규	서울시 · 거주시설
	②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신규	
	③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신규 핵심	복지재단
	④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확대	서울시
	⑤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서울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7개 사업)	⑥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신규 핵심	서울시
	①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규 핵심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②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신규	서울시·자치구
	③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서울시
	④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서울시
	⑤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신규	서울시
	⑥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서울시
	⑦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신규	서울시·복지재단

과제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 체계 개선

1-1

서울시 탈시설 권리선언 신규

☐ 사업내용

- 모든 시설 거주인이 자립생활 권리가 있음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천명,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선언

☐ 추진계획

- 일 시 : 2018년 1 ~ 2월중
- 방 법 : 선포식 개최 또는 보도자료
- 주요내용
 -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생활 지원체계 마련
 - ▶ 재가장애인 시설입소 예방 노력
 - ▶ 시설 신규 설치 및 시설입소 제한 및 인권침해 시설 폐쇄
 - ▶ 장애인 거주시설 구조변환 계획 수립
 - ▶ 기타 시민 인식개선 노력,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탈시설 정책 참여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 주요 추진일정

- 탈시설 권리선언문(안) 검토 및 일정 확정 : '17. 12.
- 탈시설 권리선언 발표 : '18. 1. ~ 2.

1-2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신규

핵심

☐ 사업내용

- 탈시설 정책 안정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 상시 소통 구조 마련

☐ 추진계획

- 구 성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지역주민, 시민단체, 거주시설 등
※ 위원 직책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참여자 변경 구성
- 역 할 : 서울시 탈시설 사업 이행 사항 모니터링, 후속 조치 협의, 시민 인식개선 등 탈시설 현안 지속 논의
- 운영기간 : 2018년 3월 ~ 2022년 12월
- 운영주기 : 반기 1회 ※ 현안에 따라 수시 가능

☐ 추진목표

회의개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목표건수	2	2	2	2	2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6	6	6	6	6

☐ 주요 추진일정

- 탈시설 민·관 협의체 구성 · 운영 계획 수립 : '18. 2.

1-3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 추진방향

- 탈시설을 위한 지원주체 간 명확한 역할정립 수립
-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의 확대
-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시민 정보제공 및 인식 개선

☐ 추진계획

- 자립생활주택 중심→지원체계(인력양성, 네트워크, 인식개선 등) 구축

현재 중점기능	기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생활주택 중심 탈시설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 ▶ 자립생활주택 전담인력 역량강화 중점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서비스지원 네트워크 강화 ▶ 탈시설 및 지역자립 관련 정보제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발굴 및 전파, 사업홍보 ▶ 역량강화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 외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자치구 등) 전문역량 강화로 확대 <p>※ 탈시설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은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중심으로 전환</p>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10	15	20	25	30

☐ 주요 추진일정

- 기능개선 관련 현장 의견수렴, 사업 반영 : '18
- 전문 인력 양성, 네트워크 확대, 인식개선 등 사업추진 : '19
- 세부사업별 강화 : '20 ~

1-4 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선 핵심

가.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 추진배경

-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증대, 기존 지원 절차의 개선 필요
- 장애 및 거주생활 특성을 반영한 점진적, 단계적 절차 필요
- 중간단계의 훈련기간 축소 후 최종 정착 주거지원 및 사후지원 강화 필요

☐ 추진방향

- 거주시설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주거전환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공급자 중심에서 당사자 주도 중심의 입주지원으로 개선
- 거주시설에서부터의 점진적 절차 마련, IL네트워크사업의 적극 활용
- 거주시설에서부터의 자립준비 강화로 퇴소 후 중간 훈련기간 단축

☐ 추진계획

- 개선실행 사전 준비(홈페이지 및 양식 리뉴얼, 관련 실무자 교육 등)
- 실행절차 및 기관 모니터링, 의견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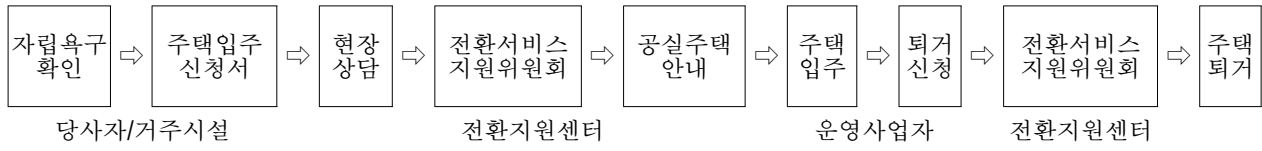
☐ 개선내용

- 이용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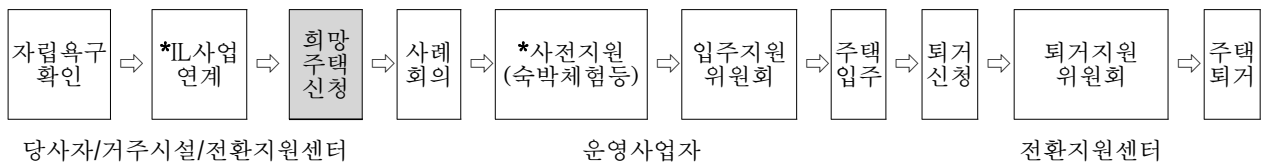
<div>현행</div>	<div>→ 개선</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e0f2f1;">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0070c0; margin: 0;">거주기간 2년</p> <p>※ 장애특성에 따라 연장가능, 최장 7년 - 연장 절차, 방법 등은 연차별 자립생활주택 운영계획에 별도 포함</p> </div>
<div>거주기간 7년</div>		

○ 이용절차

[현행]



[개선]



* 필수 제공 서비스

** 절차 모니터링 및 중재기능 : 전환지원센터

[이용절차 개선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 선
사전지원강화	거주시설-IL 네트워크사업 선택	IL네트워크사업 연계 필수
	사전지원(단기체험 등) 선택	사전지원(단기체험 등) 필수
주 택 결 정	전환지원센터에서 주택배정	당사자 입주주택 선택
전환지원위원회	입·퇴거 통합 운영	입·퇴거 분리 운영
	전환지원센터 주관	입주:운영사업자 / 퇴거:전환지원센터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주요 추진일정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이용절차 개선계획 수립 및 운영 모니터링 등 : '18
- 개선절차 안정적 운영, 자립생활주택 점진적 개선 : '19~

나.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 사업내용

-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정착 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립생활 체험을 하는 중간단계 주거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 운영현황

(2017.9.30.현재)

구 분	시설수	지원예산	종사자 배치	비고
‘가’ 형	26개소	40,139천원	가+나 = 1명	1주택 2~3인 입소
‘나’ 형	28개소	9,868천원		
‘다’ 형(발달장애인)	11개소	60,000천원	1개소 1명	

☐ 추진계획

- 대 상 : 서울시 산하 시설퇴소 장애인중 입주희망자
- 주택확보 : 연 2회, 입주희망 장애인수에 따라 확보

☐ 추진목표 : 매년 5호 확충(기본 목표물량 5호+수요에 따라 증가)

주택확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주택누계 (산규)	80 (5)	85 (5)	90 (5)	95 (5)	100 (5)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300	600	900	1,200	1,500

☐ 주요 추진일정

- 자립생활주택 입주 희망자 파악 및 차년도 예산확보 : 매년 10월

다. 탈시설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 신규

☐ 사업내용

- 장기간 시설에 거주한 장애인들에게 탈시설 체험 및 자립 동기 부여를 위해 체험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

☐ 추진계획

- 대 상 :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체험홈 미운영시설 우선)
- 방 법 :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선정, 위탁 운영
 - 거주시설 이용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관을 운영사업자로 선정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공모 절차 및 재계약 규정 등 준용)
 - 당사자 욕구나 특성에 맞춘 거주체험 프로그램 운영
 - 주거체험 기간(단기·중기), 성별 등에 따라 구분 운영

☐ 추진목표

체험전용 자립생활 주택운영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소수 (신규)	2	-	4	-	-

※ 남녀 1개소씩 기본 2개소 운영, 2년 운영 후 확대 여부 결정 등 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120	120	360	360	360

☐ 주요 추진일정

- 단기체험 수요 파악 및 운영계획 수립 : '18. 상반기
-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공모 : '18. 상반기

1-5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 사업내용

- 장애유형별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개별 지원을 위한 영역별 전문가 수퍼비전 강화

☐ 추진계획

- 대 상 : 자립생활주택 지원인력, 유관기관 지원인력
 - 자립생활주택 : 운영사업자(관리자), 코디네이터, 활동보조인
 - 유관기관 : 자치구 공무원, 거주시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종사자
- 내 용 : 전문교육(발달장애인 자립지원), 개별지원, 정보교육 등
- 방 법 : 교육과정 운영, 권역별 소그룹 학습조직 운영

☐ 추진목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92	211	222	233	245

교육 참여인원 (연인원)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비	19	30	40	45	50

☐ 주요 주요일정

- 전문교육과정 개발, 직무매뉴얼 교육, 유관기관 교육 : '18
- 전문교육과정 운영, 학습조직 운영, 유관기관 교육 확대 : '19
- 전문교육과정 강화, 개별지원 학습조직 확대 : '20 ~

1-6 지역별 서비스 연계체계 마련 신규

☐ 사업내용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 지역 내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이용/퇴거 장애인
- 범 위 : 공공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민간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 방 법 : 해당 기관 업무협약 및 MOU 체결 등

☐ 추진목표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15	15	기관별예산	기관별예산	기관별예산

☐ 주요 추진일정

- 민간 및 공공기관 업무협약, 서비스 연계 : '18
- 민간기관 서비스 개발, 기관 간 연계 강화 : '19
- 지역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마련 : '20 ~

과제 2 재가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2-1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신규 핵심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새로운 주거생활지원을 위해 보호주택, 의료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 거주모형 개발 추진

☐ 추진계획

- 대 상 : 공동생활가정, 지원주택 입주가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
- 방 법 : 보호주택(가칭), 자립의료주택(가칭) 등 개인별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 모델 개발

☐ 추진목표 : 보호주택(중증공동생활가정), 자립의료주택(의료지원주택) 개발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신규운영주택확보 +운영비)	0	120	120	120	320

☐ 주요 추진일정

- 시범사업 추진 준비(관련자 및 전문가 논의) : '18
-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19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보완 : '20 ~

2-2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을 낮시간 동안 보호하여 당사자 재활치료, 장애인 가족지원등을 통한 지역거주 안정화 도모를 위한 주간보호, 복지관 낮활동 시범사업의 확대

☐ 운영현황

(2017.9.30.현

재)

구 분	시설수(개소)	운영비(백만원)	종사자 배치	비고
주간보호시설	112	138 / 1개소	3~4인	구립11,법인101
낮활동 시범사업	10	86 / 1개소	2인	시범 사업중 (18~19)

☐ 추진계획

- 대 상 : 중증장애인중 낮 활동 미 참여자
- 방 법 : 시설 확충 및 복지관 등을 활용한 이용 프로그램 확대
 - 주간보호시설 확대 설치(구립 및 민간)
 - 사회복지법인 및 민간 단체의 신규 낮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추진목표 : 기본 연 3개소 확충

이용시설 확충 (주간보호시설 및 낮활동 운영 기관)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소수 (신규)	3	3	3	3	3

* 수요에 따라 목표 변경 예정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300	600	900	1,200	1,500

☐ 주요 추진일정

○ 주간보호시설 등 낮활동 프로그램 지원 공모

: 매년

2-3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확대

☐ 사업내용

-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지속적 확대 추진

☐ 운영현황

(2017.9.30.현

재)

구 분	운영사업자	주택수(호)	이용인수	비 고
체험형	1개 기관	5	10명 이내	
자가형		5	5~10명 이내	

☐ 추진계획

- 대 상 :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 방 법 : 시설 퇴소자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 장애인 중 자립희망자 발굴 주력,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연계 추진

☐ 추진목표 : 자가형 지원주택 매년 5호씩 확대

주택 확대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주택수 (신규)	5	5	5	5	5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100	200	300	400	500

☐ 주요 추진일정

- 자가형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대상자 선정 확대

: 매년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운영사업자 공모(필요시)

: 수시

과제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3-1 거주시설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가.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신규 핵심

☐ 사업내용

- 시설별로 자립지원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거주인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설에서부터의 양질의 자립준비 도모

☐ 추진계획

- 대 상 : 시설 거주 장애인
- 방 법 : 장애당사자, 종사자, 거주시설 연계 IL센터 등 공동 사례회의를 통해 합의된 연간 추진 인원 산출하여 수요에 맞는 총괄 계획 수립
 - 시설 차원의 자립지원계획 수립으로 준비된 절차에 의해 자립 지원
 - 퇴소 전(자립체험 지원, 지역사회 필요자원 사전 확인 등), 퇴소 진행,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지원 방안 등 추진 체계 및 절차 위주의 계획 수립
 - 탈시설 계획 이행여부 및 자체평가 방법 포함
 - 2017년 탈시설 협치사업 모니터링시 파악된 퇴소 희망자 후속 조치계획 포함
 - 종사자중 1명을 자립지원 담당 인력으로 전환 배치(상담평가요원, 사회재활교사 등)

☐ 추진목표 : 전체 장애인거주시설의 자립지원계획 의무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주요 추진일정

-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시설) : 매년
-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이행 평가(시설) : 매년

나. 시설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신규

☐ 사업내용

- 시설별 탈시설 계획과 연계한 실질적으로 자립 실현을 위해 시설 거주인에 대한 연1회이상의 정기적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추진

☐ 추진계획

- 대 상 : 시설 거주 장애인중 자립 희망자 또는 전체 거주인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추진 가능
- 방 법 : 시설별 탈시설 총괄 계획에 따라 이용인 개인의 욕구 및 장애를 고려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 실시주기 : 연 1회
- 계획수립내용
 - 본인 · 보호자 탈시설 정보제공 방법
 - 기 파악된 탈시설 희망자에 대한 자립 체험 및 탈시설 정보제공 계획
 - 서비스 지원 적정성, 개인별 재계획 필요성
 - 탈시설 준비과정, 퇴소 시기, 퇴소 후 지원 방안 등 전체 포함

☐ 추진목표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주요 추진일정

-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시설) : 매년
-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이행 평가(시설) : 매년

3-2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신규

☐ 사업내용

- 전체 시설 거주인을 대상으로 자립 동기 부여 및 탈시설 정보 제공 기회 확대를 위해 연 1회 이상의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실시

☐ 추진계획

- 대 상 : 거주시설 장애인
- 방 법 : 시설 및 거주 장애인 특성에 맞는 욕구조사 및 계획 수립
 - 시설별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시설 인권지킴이단 참여 필수)
 - IL센터, 기타 전문가 등 외부 인력 포함된 조사단 구성 · 운영 권고
 - ※ 필요한 경우, 서울시 차원의 탈시설 욕구조사 체계 마련

☐ 추진목표 : 전체시설 탈시설 욕구조사 정례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욕구조사 소요경비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활용

- 사회·심리재활사업(국비50%:시비50%) 또는 사회교육비(시비100%) 활용
- 거주시설&IL 연계사업, 복지관 연계사업 등 기존 사업과 연계 추진

☐ 주요 추진일정

- 시설별 탈시설 욕구 조사 계획 수립 · 추진(시설) : 매년

3-3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신규

핵심

□ 사업내용

- 거주시설 종사자 탈시설 자립지원 역량 강화 교육
- 자립지원 감수성, 공공정보, 관련 정책 등 정보 제공
- 자립생활 사례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추진

□ 추진계획

- 대 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 종사자
- 범 위 : 지방소재 거주시설(18개소) 우선 실시, 향후 전체 확대
- 방 법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협력 추진

□ 추진목표

교육 프로그램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소수	18	26	43	43	43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9	13	22	22	22

□ 주요 추진일정

- 지방소재 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 집합교육 : '18
- 서울 소재 거주시설 종사자, 최고관리자 신규 교육 추진 : '19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중심 정례교육 실시 : '20 ~

3-4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확대

☐ 사업내용

-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지역 거주 체험 및 자립 후 필요서비스를 사전 점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거주시설 운영법인이 운영하는 체험홈 지속 확대 추진

☐ 운영현황 : 18개 시설 70개소 218명 (2017.9.30.현재)

- 유형별 : 지적장애인시설 체험홈 운영 비중이 높음
 - ▶ 중증장애인 시설 : 24개소 중 6개소 (25%)
 - ▶ 지적장애인 시설 : 12개소 중 10개소 (83%)
 - ▶ 지체장애인시설 : 3개소 중 2개소 (67%)
- 현 황 : 시설별 자립 훈련도 차이가 크며, 시설 퇴소로 연결 되지 못하는 경우 많음

☐ 추진계획

- 대 상 : 시설 거주 장애인
- 방 법 :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법인 자부담으로 체험홈 확보
 - 시설 퇴소희망자 우선 거주, 거주기간 2년 이내(필요시 연장 가능)로 하며, 종료 3개월 전 지역자립 연계(전환 지원 등) * 시설 복귀 최대한 제한

☐ 추진목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체험홈 확충	5	5	5	5	5
개소수 (신규)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206	227	253	274	295

※ 5월 이후 주택 확보 가능, 하반기 운영비 반영

☐ 주요 추진일정

-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체험홈) 신청(시설) : 매년

3-5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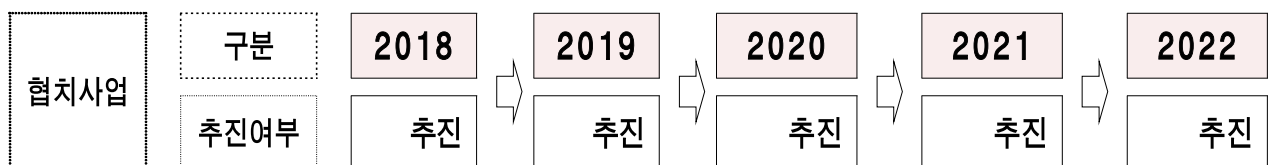
☐ 사업내용

- 탈시설 정책의 갈등 최소화 및 거주시설의 탈시설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탈시설 협치사업 지속 추진

☐ 추진계획

- 대 상 : 장애인거주시설
- 방 법 : 장애인거주시설, 서울시, 시민단체, 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협치사업단 및 분야별 추진단 구성·운영
- 사업내용
 - 거주시설 자립지원 방안 ‘권역별 토론회 모임’ 운영
 - ‘거주시설 전환모형 연구위원회’ 구성·운영
 - 거주시설 전환을 지원 컨설팅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단’ 구성·운영

☐ 추진목표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60	60	60	60	60

☐ 주요 추진일정

- 탈시설 협치 대표기관 선정 및 민·관 협치사업단 구성 : 매년 1~2월
- 탈시설 협치사업 운영계획 수립 : 매년 2~3월
- 탈시설 협치사업 성과평가회 : 매년 12월

3-6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신규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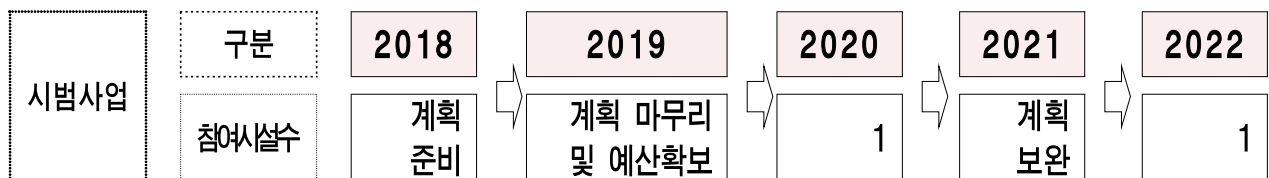
☐ 사업내용

- 탈시설 적극 추진을 위해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구조를 변경하여 새로운 주거모형으로 변환하는 시범사업 추진

☐ 추진계획

- 대 상 : 시설 변환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운영법인
- 방 법 : 시설과 서울시 공동 협력 추진
 - ① 공익이사 파견 법인(4개소) : 시설 직영화를 통한 변환 방안 모색
 -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시기에 맞춰 단계별 추진
 - ② 일반 사회복지법인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계획 공모 절차를 거쳐 추진
- 주요내용
 - 시설 종사자 지위 전환 방안 마련 (종사자 고용불안 문제 해소)
 - 변환 지원체제로 직무 재배치, 시설전환 메뉴얼 제작 등
 - ※ 시설종사자 대표,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 운영

☐ 추진목표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비예산	비예산	미정	미정	미정

☐ 주요 추진일정

- 거주시설 변환 방안 논의 및 추진 준비 : '18 ~ '19. 6.
- 거주시설 변환 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 : '19. 6. ~
- 탈시설 촉진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변환 로드맵 마련 : '22년

과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4-1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규

핵심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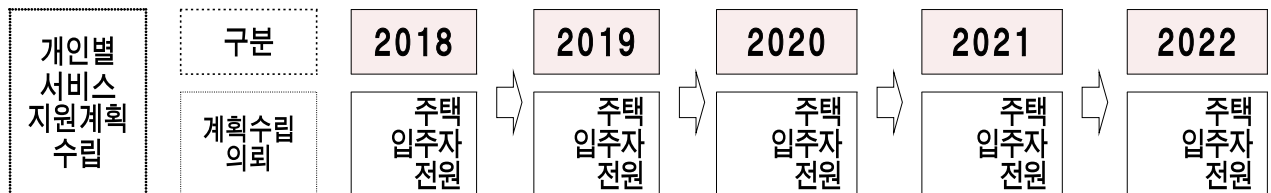
- 탈시설 초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추진계획

- 대 상 : 시설 퇴소 장애인중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 방 법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가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 (자립생활주택 입주 후 1개월 이내)

※ 운영사업자는 개인별지원계획을 기반으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별도 수립

□ 추진목표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주요 추진일정

-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협조 요청
(서울시→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매년 1월
-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의뢰
(운영사업자→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수시

4-2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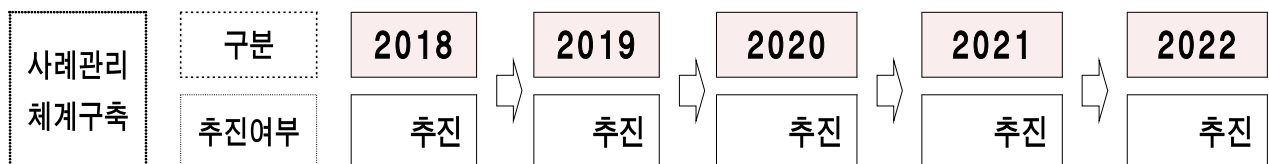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지역사회내 다양한 주택에서 최종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 도모 및 시설 재입소 예방

☐ 추진계획

- 대 상 : 지역사회 정착 탈시설 장애인
- 방 법 : 기존 사례관리 시스템 연계 및 탈시설 장애인 전문 사례관리 체계 마련
- 관 리 : 동 주민센터 '탈시설 장애인 관리대장' 비치, 분기별 관리 (행복e음 활용)
 - ① 일반사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기존 지역자원 연계 관리
 - ② 특별사례 : 동 주민센터 →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전문사례관리' 의뢰
(전환지원서비스위원회 및 별도 체계 구성 활용 등)

☐ 추진목표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주요 추진일정

-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추진계획 수립(서울시) : 매년
-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추진실적 제출(동→자치구→시) : 매년 12월

4-3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사업목적

- 시설에서 장기간 거주해왔던 탈시설 장애인의 보다 활발한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인정점수가 낮은 발달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을 통해 자립능력 향상

□ 추진계획

- 대 상 : 시설 퇴소장애인 중 65세 미만의 1~3급의 중증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인 자(자치구 적격자 심의 선발)
- 지원내용 : 시비 추가 지원 월 30시간(퇴소 후 2년까지)
※ 장애인자립생활지원5개년계획 수립('18년 상반기)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추진목표

활동보조 추가지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원인원	40	50	60	70	8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70	90	110	130	150

※ 산출근거 : 탈시설 인원수의 60%(2년간) × [9,240원×30시간×6개월(1년 이용기간평균)]

현재 자립생활주택 임주인중 약 60%만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 주요 추진일정

- 제공기관 등을 통한 시설퇴소자에 대한 활동지원 홍보 : 매년

4-4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 사업내용

-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확보비용 등에 사용토록 거주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 지원 현황

(2017.12.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원기준	-	8	10	12	12	12
지원인원(명)	98	14	14	15	15	40
총지원액	1,092	112	140	180	180	480

☐ 추진계획

- 지 원 액 : 금12,000천원 (1회에 한함)
- 대 상 : 지역정착을 준비중이거나 완료한 탈시설 대상 거주시설 퇴소 저소득 장애인(기초수급 및 차상위120%이내자)
- 방 법 : 시설 퇴소 전(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잔금납부 전) 또는 퇴소 후 6개월 이내 시설 관할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자치구를 통해 신청
 ※ 시·구 지원 자립생활주택입주자는 주택 퇴소 시 지원
 (임대차계약서 확인 될 경우 퇴소 전 잔금납부 전 지원 가능)
- 사후관리 : 지역 자립정착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지급내역 행복e음 입력 필수, 추후 지급 여부 조회 등에 활용)

☐ 추진목표

퇴소자 정착금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급인원	30	35	40	45	5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360	420	480	540	600

☐ 주요 추진일정

- 퇴소자 정착금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 수립 : 매년

4-5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신규

☐ 추진내용

- 탈시설을 희망하나 시설퇴소 이후 생계비 부담으로 탈시설을 꺼리는 비수급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 정착 초기 생계비 지원

☐ 추진계획

- 대 상 : 탈시설 장애인중 비수급자(국민기초, 서울형 모두 포함)
- 지원기간 : 최초 지급 시부터 최대 1년간 지원(단, 예산 소진 시 미지원)
- 신청방법 : 시설 퇴소 후 즉시 기초수급(서울형) 신청 → 조사 결과 통보 시까지 지원
- 지 급 액: 매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생계비 지원 준용('17년 27만원/1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기준 변경에 따라 지급 대상 및 기준 변경

☐ 추진목표

생계비 지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급인원	4	6	8	10	12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12	18	24	30	36

☐ 주요 추진일정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급(안) 관련 부서협조 검토 : '18년 상반기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급계획 수립 및 안내 : 매년 2~3월

4-6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 사업내용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최종 정착 주거기반 조성 위해 전세주택 지원

☐ 지원현황

(2017.9.30.현재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대수	23	1	5	6	6	5
지원액	1,945	75	375	510	510	475

☐ 추진계획

- 신청대상 : 자립생활주택 퇴소 장애인중 희망자
※ 중증(1~2급) 장애인이며 기초 및 차상위 120%이하에 한함
- 방 법 : 지원배점표에 의거 고배점자순으로 지원
- 지원기준 : 95백만원(2인 이하) / 2년 거주(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 추진목표

전세주택 제 공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원인원	7	9	11	13	15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665	855	1,045	1,235	1,425

☐ 주요 추진일정

- 장애인 전세자금 지원 계획 수립 및 선정 · 지원 : 매년

4-7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신규

☐ 사업내용

- 탈시설정책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정립을 위해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다가 퇴거한 이용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생활실태 및 삶의 만족도 등 조사 실시

☐ 추진계획

- 대 상 : 자립생활주택 퇴거예정자 및 퇴거자
- 내 용 : 탈시설 장애인의 삶의 전영역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분석, 탈시설과정 및 변화등에 미치는 요인 분석 등
- 방 법 :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한국장애인개발원 공동추진

☐ 추진목표

종단연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참여인원	108	50	50	50	50

※ 데이터 스크리닝 후 참여인원 규모 확정

☐ 소요예산 : 비예산(한국장애인개발원 자체예산 활용)

☐ 주요 추진일정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설계 : '18
- 1차년도 조사 및 분석결과 : '19
- 2차년도 조사 및 분석결과 : '20
- 3차년도 조사 및 분석결과 : '21
- 4차년도 조사 및 종단연구 결과 발표 : '22

VII

연차별 목표 및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22,102백만원(목표는 신규 확충 수, 예산은 누계 반영)

세부과제	연도별 목표 및 예산(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18	'19	'20	'21	'22
-	예산	22,102	2,252	3,269	4,520	5,527	6,534
1.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목표	-	추진완료	-	-	-	-
	예산	비예산					
2.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목표	10(건수)	2	2	2	2	2
	예산	30	6	6	6	6	6
3.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목표	-					
	예산	100	10	15	20	25	30
4.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목표	-					
	예산	비예산					
5.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목표	25(주택수)	5	5	5	5	5
	예산	4,500	300	600	900	1,200	1,500
6.탈시설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	목표	6(주택수)	2	0	4	0	0
	예산	1,320	120	120	360	360	360
7.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목표	1,103(명)	192	211	222	233	245
	예산	184	19	30	40	45	50
8.지역별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목표	-					지속추진
	예산	30	15	15	-	-	-
9.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목표	2(모형수)	-	1	-	-	1
	예산	560	-	120	120	120	200
10.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목표	159(개소)	3	3	3	3	3
	예산	4,500	300	600	900	1,200	1,500
11.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확대	목표	25(주택수)	5	5	5	5	5
	예산	1,500	100	200	300	400	500
12.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목표	-					전체시설 추진
	예산	비예산					
13.시설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목표	-					전체시설 추진
	예산	비예산					
14.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목표	-					전체시설 추진
	예산	비예산					
15.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목표	173(개소)	18	26	43	43	43
	예산	88	9	13	22	22	22
16.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확대	목표	25(개소)	5	5	5	5	5
	예산	1,255	206	227	253	274	295
17.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목표	-					지속추진
	예산	300	60	60	60	60	60
18.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목표	2	-	-	1	-	1
	예산	미정					
19.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목표	-					지속추진
	예산	비예산					
20.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목표	-					지속추진
	예산	비예산					
21.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목표	300(명)	40	50	60	70	80
	예산	550	70	90	110	130	150
22.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목표	200(명)	30	35	40	45	50
	예산	2,400	360	420	480	540	600
23.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목표	40(명)	4	6	8	10	12
	예산	120	12	18	24	30	36
24.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목표	55(명)	7	9	11	13	15
	예산	5,225	665	855	1,045	1,235	1,425
25.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목표	308(명)	108	50	50	50	50
	예산	비예산					

VIII

행 정 사 항

☐ 향후 추진사항

- 2차 탈시설화 사업 추진계획 발표 및 시행 안내(유관 기관·부서 등) : '18. 1.
- 각 수행과제별 세부계획 수립 및 실행(수행 기관) : '18. 2 ~
- 탈시설 정책 추진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건의(서울시) : 수시
- 연도별 탈시설화 추진계획 수립(서울시) : '19년부터 매년

☐ 실·국·본부 및 외부기관 등 협조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 반영 : 매년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 연도별 탈시설화 추진사항 논의 및 주관사업 시행계획 수립 : 매년
 -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시복지재단(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등
- 자체 시행사업 점검, 추진실적 제출 : 매년 상·하반기, 수시
 -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자 등

☐ 홍보계획

- 홍보 방향
 - 탈시설 정책 추진에 대한 시민체감 및 인지도 제고
 - 탈시설 권리선언문 발표를 통해 정책 추진 의지 홍보
- 홍보 방법
 - 탈시설 권리선언문 발표 및 기자설명회 개최 : '18. 1. ~ 2.
 - 정책토론회 개최 : '18. 상반기

* 장애인권단체, 장애당사자, 거주시설 등 이해관계자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붙임 : 핵심지표 산출근거 1부.

붙임 1

핵심지표 산출근거

① 탈시설 목표 인원 : 300명 (5년)

- 산출방법 : 희망자 534명 중 탈시설 이해가능자 331명
 - 300명 전원에 대해 지속적인 탈시설 정보 제공 등 집중 독려
- 탈시설인원 :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주택, 그룹홈, 완전독립한 장애인
 - ※ 1차 탈시설 인원에 포함되었던 거주시설 체험홈은 제외

《1차 목표 600명보다 감소한 사유》

- ✓ 1차 탈시설 목표에 포함된 체험홈 입주자(278명) 2차 목표에서 제외
- ✓ 1차 추진 시 탈시설 의지가 강한 인지능력이 있는 지체 · 뇌병변 장애인은 거의 탈시설 완료('16년부터 탈시설 증가 추세 둔화)
- ✓ 현재 탈시설 희망자중 86%가 발달장애인으로 자립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욕구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② 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 2개소

- 산출방법 : 인권침해로 공익이사가 파견된 2개 법인(법인당 1개시설)
 - ※ 공익이사 파견 법인(프리웰, 인강재단) 참여 의지 있음
- 추진시기 : 준비기간(최소 2년)후 1개소 시범운영, 운영 보완 후 1개소 추가
 - ※ 시설 변환 준비(법인과 세부 논의, 제도 마련, 복지부 협의, 예산 확보 등)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수정 내용

1 산출목표(성과지표) 일부 수정

- 수정내용 : 탈시설 목표 인원 수정

◆ 22년까지 300명 ⇒ 22년까지 800명

- 기존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목표 인원(300명)에 다양한 환경변화(지원 주택 사업 본격 추진 및 확대, 폐지 예정 시설 거주인 지원 계획, 지역 돌봄 체계 강화 등)에 따른 탈시설 증가 예상 인원을 추가함

2 세부과제 일부 수정

□(세부과제2-3)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확대

- 수정내용 : 지원주택 수 확대

◆ 매년 5호씩 확대 ⇒ 매년 60호씩 확대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8.5.)에 따라 주택 공급근거 및 주거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등으로 지원주택 입주 희망 수요 증가 예상

□(세부과제4-3)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수정내용 : 지원내용 수정

◆ 시비 추가 지원 월 30시간(퇴소 후 2년까지)
⇒ 월 최대 120시간(퇴소후 2년까지)

-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활동보조시간, 주간활동서비스, 거주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구축 노력

□(세부과제4-4)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 수정내용 : 지원금액 수정

◆ 지원금액 12백만원 ⇒ 매년 100만원씩 2022년 15백만원까지 증액

- 지역 자립 초기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예산 지원금 확대 노력

2022년 서울시 장애인 예산 반영 및 장애인 정책 요구안

<p>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정책 마련</p>	<p>팬데믹 시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중증장애인 포괄적 재난 지원체계 마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팬데믹 시대 장애인거주시설의 '긴급 탈시설' 이행 2. 장애인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를 위한 긴급 의료 및 생활지원 3.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연계 긴급 돌봄서비스 확대 및 강화 4. 장애인 재난지원금 및 긴급 소득보장 방안 적극 마련
<p>장애인 탈시설권리 정책 강화</p>	<p>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이행,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제정 및 개인별지원강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년 내 서울시장래인거주시설 단계적폐지를 위한 '서울시장래인탈시설지원조례제정' 2. 장애인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강화 3. 탈시설정착금 확대 4. 탈시설장애인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 및 의무화 5. 공동생활가정 탈시설추진 6. 비수급탈시설장애인 생계비 지원확대 7. 서울시탈시설민관협의체를 통한 모니터링 협업 및 지속 협의 8. 장애인지원주택 기존 거주시설폐지를 전제한 운영사업참여,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폐지되는 시설의 노동자 고용 보장 노력과 연동
<p>장애인 이동권 보장</p>	<p>교통약자의 자유권 100%실현,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완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이행 :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및 운행 2. 「장애인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이행 : 2022년까지 지하철 1동선 100% 설치 및 지하철 2동선 엘리베이터 10년 내 100% 설치 추진 3. 「장애인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이행: 마을버스(중형저상버스) 100% 도입 4. 장애인 단체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버스 증차·확대 운행 5.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전역 운행 확대 6.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150% 도입 약속 예산 반영 7.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명시
<p>장애인노동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p>	<p>최중증장애인 노동권리보장, 서울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강화 및 확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500명 확대 2.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담인력 배치 기관 당 2인 배치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연속적·안정적 일자리 보장
<p>장애인 자립생활권리</p>	<p>지속가능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및 기반 확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확대 2.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확대 3.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4.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 증액
<p>장애인</p>	<p>장애인평생교육 권리로 보장,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요구안</p>

평생교육 권리보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2.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마스터플랜' 발표 및 '서울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언 3.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 전면개정
의사소통 보조기기 권리보장 및 배리어프리	<p>배리어프리 서울시, 의사소통과 보조기기 권리로 보장 및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시뇌병변장애인지원마스터플랜 연차별 계획 100% 이행 2. 뇌병변장애인 재활, 건강, 위생 권리 보장 3. 뇌병변장애인 지역사회 문화체육 공원 접근성 마련 4. 뇌병변장애인 가족지원 체계 마련 5. '배리어프리 서울' 선언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장애인 문화예술 권리보장	<p>장애인의 문화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실효성 확보 2. 서울시립 문화시설 장애인접근권 보장 3. 장애인문화예술 권리 보장 4. 서울시장애인인권영화제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p>서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달장애인 낮시간 활동 지원강화 2.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전달체계 강화 및 지원 확대 3. 재가발달장애인 자립주거지원 체계 확충, 확대 4. 발달장애인 권리옹호·자조단체 지원(피플퍼스트) 5. 도전적 행동 수반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과 전문가 양성
장애여성 인권	<p>장애여성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정책 전반에 성인지 통계와 성인지 예산 수립, 성별영향평가 반영 2. 장애여성 재생산 권리 확보를 위한 장애아동청소년의 포괄적 성교육 제도 마련 3. 장애여성 재생산 권리 확보를 위한 시설 거주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침해 실태조사 및 정책 마련 4. 사각지대 장애여성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상담·연계·지원에 대한 통합적 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권 보장	<p>건강해야 평등하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개소 추가 설치 2. 장애인주치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문진료 전담 서울시 공공의원 설립 3. 서울시 공공병원 및 의료기관 편의시설 설치확대 4. 전 자치구 내 건강돌봄팀 운영 5.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4개소 추가 설치
특별 요구안 - 라파엘의집 인권침해 사건 해결	<p>“장애인학대시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장애인학대시설, 라파엘의 집 폐쇄하고 법인설립허가 취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시의 라파엘의집 인권침해 사결과 공개 및 공식사과 2. 서울시의 라파엘의 집 탈시설 지원 대책 마련 3. 3년 내 서울시 라파엘의집 전환대책 및 단계적 폐쇄 방안 마련 4.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5.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재단 자체적인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이행 6. 서울시의 라파엘의집 인권침해 해결 및 탈시설 지원을 위한 TF구성 및 참여

메 모

[illegible]

메 모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template for handwriting practice or general writing.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